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실행계획

2024. 7.

충청남도

2024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실행 계획(요약)

❖ 「정부 혁신 종합계획」에 부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도정을 위해 우리 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여건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및 행정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ChatGP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

□ 추진방향

○ 도민과 소통하고 도·시군·민간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패러다임 전환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책 결정

□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❶문제를 잘 해결하는 충남, ❷디지털로 일하는 충남, ❸미래를 대비하는 충남의 3대전략 및 8개 중점과제, 91개 실행과제 수립

문제를 잘 해결하는 충남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디지털로 일하는 충남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 · 접근성 향상 6. 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미래를 대비하는 충남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8. 인구위기 · 기후변화 등 일상화 된 위기 · 위험에 대응

□ 향후 일정

○ 과제별 이행(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12월)

목 차

Ⅰ.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1

Ⅱ. 추진과제 총괄표 ····· 3

Ⅲ. 기관 대표과제 ····· 7

Ⅳ. 자율과제 ····· 15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 ····· 15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62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91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112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 127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 146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157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 176

Ⅴ. 충청남도 정부혁신 확산 방안 ····· 200

Ⅰ.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책 여건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및 **행정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동성·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과 민첩한 조직운영 요구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ChatGP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 디지털에 기반한 업무처리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 공공부문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 기대 증대

○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대책 요구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직면
-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추진방향

○ **도민과 소통**하고 **도·시군·민간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시군·기업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예견,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패러다임 전환

- 업무 생산성 개선,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개발 등 비효율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과제 중심의 협업체계 강화**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책 결정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행동하는 도정 구현**

○ 모든 사회구성원이 편한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 구현

-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이 쉬워지도록 제도 지원 및 혁신

□ 2024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실행체계

비전 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목표 충남 행정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도정 구현**

미션 도민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인다.

전략과 중점과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충남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디지털로 일하는 충남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미래를 대비하는 충남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8. 인구위기·기후변화 등 일상화 된 위기·위험에 대응

⇨ 도민 참여확대 및 공직 내외 全 분야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일 잘하는 도정구현

Ⅱ. 추진과제 총괄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		
1. 서천 수산특화시장 화재복구 <대표과제>	**경제정책과**	**'24. 1월~**
2.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카오톡 여권 업무상담	자치행정과	'24. 1월~
3.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자치행정과	'24. 1월~
4. 도민참여 예산제도 내실화	자치행정과	'24. 1월~
5.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새마을공동체	'24. 1월~
6. 참여와 자율 기반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새마을공동체	'24. 1월~
7.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대변인	'24. 1월~
8.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연수 추진	인재개발원	'24. 1월~
9. 중소기업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정보보호 지원	정보화담당관	'24. 1월~
10.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정책과	'24. 1월~
11. 돌봄 사각지대 없는 공적돌봄체계 구축	복지보육정책과	'24. 1월~
12. 걷쥬 활성화	체육진흥과	'24. 1월~
13.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경제정책과	'24. 1월~
14.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더행복 충남론」	경제정책과	'24. 1월~
15. 충남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일자리기업지원과	'24. 1월~
16. 마을 공동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업정책과	'24. 1월~
17. 충남 e스포츠 활성화 사업	문화정책과	'24. 1월~
18.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미래산업과	'24. 1월~
19.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산업육성과	'24. 1월~
20. 충남형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건설정책과	'24. 1월~
21. 수출하기 좋은 충남	투자통상정책관	'24. 1월~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1. 화재안전 취약가구「안전한 집」구축	예방안전과	'24. 1월~
2. 119외국어 통역 서비스 운영	119종합상황실	'24. 1월~
3.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설치 운영	경로보훈과	'24. 1월~
4. 노인·청소년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정책과	'24. 1월~
5.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물관리정책과	'24. 1월~
6.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검진 시행	보건정책과	'24. 1월~
7. 청소년통합지원체계(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관	'24. 1월~
8.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을 통한 자립성취률 향상	여성가족정책관	'24. 1월~
9.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방안전과	'24. 1월~
10. 카카오톡 실시간 구급 상담 서비스 운영	119종합상황실	'24. 1월~
11. 119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운영	119종합상황실	'24. 1월~
12.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감염병관리과	'24. 1월~
13.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장애인복지과	'24. 1월~
14. 중증장애인 119구급 통원서비스 제공	구조구급과	'24. 1월~
15. 자살률 중위권 도약 기반마련	건강증진식품과	'24. 1월~
16. 학교 먹는 물 안전성 강화	보건환경연구원	'24. 1월~
17. 도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	정보화담당관	'24. 1월~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1. 충남 행정혁신 동력 강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정책기획관	'24. 1월~
2.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공모	새마을공동체	'24. 1월~
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균형발전정책과	'24. 1월~
4.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데이터정책관	'24. 1월~
5. 민관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의 양성평등 추진	여성가족정책관	'24. 1월~
6.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등 주민 참여 기반 강화	자치행정과	'24. 1월~
7.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관리체계 고도화	해양정책과	'24. 1월~
8. 충남형 교통문화 향상	교통정책과	'24. 1월~
9.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대응	기후환경정책과	'24. 1월~
10. 동북아 청정대기 공동 대응	기후환경정책과	'24. 1월~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1.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정책기획관	'24. 1월~
2.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 장착	정책기획관	'24. 1월~
3. 전문직위 지정 운영 및 주요 직위공모제 운영	인사과	'24. 1월~
4.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인사과	'24. 1월~
5. 발탁승진 범위 확대	인사과	'24. 1월~
6.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자치행정과	'24. 1월~
7. 조직진단 인력·기능 배분 개선안 마련	자치행정과	'24. 1월~
8. 위원회 폐지통합	새마을공동체	'24. 1월~
9. 수요 응답형 교육 과정 운영	인재개발원	'24. 1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1.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납부서비스	세정과	'24. 1월~
2. 인공지능 활용 도민·행정 비서 시스템 구현	데이터담당관	'24. 1월~
3. 충남데이터포털「올담」운영 및 관리	데이터정책관	'24. 1월~
4. 100여년 된 토지대장 한글화	토지관리과	'24. 1월~
5. 충남형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구축	교통정책과	'24. 1월~
6. 무선통신기반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교통정책과	'24. 1월~
7. 의료취약 지역주민 ICT융합 의료서비스 협진	보건정책과	'24. 1월~
8. 드론활용 해양지적(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토지관리과	'24. 1월~

6.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1.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정보보안 관리수준 제고	정보화담당관	'24. 1월~
2.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간소화(로봇업무자동화 RPA)	데이터정책관	'24. 1월~
3. 데이터기반 행정 문화 조성	데이터정책관	'24. 1월~
4. 빅데이터 및 ICT를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화정책과	'24. 1월~
5.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및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토지관리과	'24. 1월~
6. 스마트 지하수 총량관리제	물관리정책과	'24. 1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1.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스마트농업과	'24. 1월~
2.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스마트농업과	'24. 1월~
3.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과	'24. 1월~
4. 맞춤형 청년 유입 정책	청년정책과	'24. 1월~
5.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진	청년정책과	'24. 1월~
6. 청년 창업 창직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24. 1월~
7. 청년의 주도적 도정참여 활동지원 및 소통채널 다양화	청년정책과	'24. 1월~
8. 청년마을기업 지정 활성화	경제정책과	'24. 1월~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1.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대표과제>	**복지보육정책과**	**'24. 1월~**
2. 외국인주민 우수인재 확보	일자리기업지원과	'24. 1월~
3. 충남형 무상보육 전면 시행	복지보육정책과	'24. 1월~
4. 첫만남 이용권 시행	복지보육정책과	'24. 1월~
5.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기후환경정책과	'24. 1월~
6.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기후환경정책과	'24. 1월~
7.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기후환경정책과	'24. 1월~
8.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기후환경정책과	'24. 1월~
9. 탄소중립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경제과	'24. 1월~
10.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24. 1월~
11.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 주민청원제도 운영	대기환경과	'24. 1월~
12. "건축물 안전 및 건축행정 내실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건축도시과	'24. 1월~

Ⅲ. 대표과제

1-1-1 서천 수산특화시장 화재복구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협조기관	행안부, 중기부
담당자	최지혜 주무관	연락처	041-635-3319

□ 추진배경

○ ’24. 1. 22.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수산물동 및 일반동 227점포가 전소되어 상인 생계안정, 임시시장 조성, 재건축 등 복구 필요

※ **(대통령 현장방문 시 지시사항, 1. 23.)**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여 지원’토록 지시

□ 추진내용

○ **임시시장 조성(’24.4.25. 개장)**

- (총사업비) 55억원(도비 20억원, 군비 35억원)
- (총 면 적) 1,310평(수산동 818평, 일반동 470평, 야외 컨테이너 22평)
- (공간구성) 227개 점포 입점 예정
  ① 수산동 151개소(수산물 105, 식당 12, 농산물 34)
  ② 일반동 73개소, 야외 컨테이너 3개소(특산품판매점, 방앗간, 닭집)
- (개 장 식) 4.25.(목) 14:30~16:00, 2,000여 명 참석(유관기관·단체, 주민 등)

○ **화재건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 철거(4.25.까지) 후 임시 주차장(1,326평, 130면)으로 활용

○ **시장 재건축**

-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150, 지방비 200, 기타 50)

※ ‘재건축 기획 용역(’24. 3. 18. ~ 5. 16, 서천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변동** 예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서천특화시장 내 277개 점포 전소	- 임시시장 조성 1식 - 화재피해 건물 재건축 1식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화재피해 상인들의 생업존폐 위기 및 지역경제 침체 우려	임시시장 조기 개장으로 생업유지 신속 지원 시장 재건축으로 서천특화시장 상권 회복

□ '24년 소요예산

○ 임시시장 조성 및 재건축 '24년 135억원

- 임시시장 조성 55억원(도비 20, 군비 35)
- 재건축 실시설계 비용 등 일부 80억원(특교세 40, 도비 20, 군비 20)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150, 지방비 200, 기타 50)

□ 추진체계

○ 道 :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복구 지원

○ 서천군 : 임시시장(공설) 운영 및 재건축 시행

□ 추진일정

○ 임시시장 개장('24.4.25.) 후 재건축 준공시까지 운영

○ 재건축 일정 : ('24. 5.)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4. 9.)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4. 하반기) 공사 착공

※ 신속한 추진을 위해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검토 중

□ 홍보계획

○ 임시시장 개장식 홍보(중앙방송, 지방언론, 신문사 등)

○ 추후 재건축 주요사항 확정 시 다양한 경로 홍보 예정

3-8-1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복지보육정책과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이순옥	연락처	041-635-4249

□ 추진배경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960년 6.0명(OECD 5위) 정점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2023년(잠정) 0.72명(OECD 38개국 중 최하위) 기록

- 충남 2012년 1.57명에서 2023년(잠정) 0.84명으로 하락(전국 6위)

○ 대한민국 제1의 위기, 출산율 반등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도정 역량 집중

□ 현황(문제점) 진단

○ 영유아 평일 20시 이후 야간, 공휴일 보육 공백

○ 2026년 늘봄 전면 시행 예정이나 학교 내 시설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평일 야간, 주말·휴일 및 방학기간 돌봄 공백도 문제

○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결혼·출산 기피 현상 심화

○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문화 여전, 민간(특히, 중소기업)은 재정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및 출산에 부정적 인식

□ 추진방향

❶ **(보육·돌봄 초점)** 부모가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보육·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돌봄 완성에 집중

❷ **(일·가정 양립 강화)** 부모들의 육아·돌봄시간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도입, 공공 우선 시행 후 민간으로 확산

❸ **(주거제공 및 인식개선 병행)** 젊은 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 출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분위기·인식 대전환 추진

⇨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 2026년 합계출산율 1.0 회복**

□ 세부 추진사항

⍰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 및 돌봄 실현

❶ (0~5세 영유아)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 해소

○ 부모의 영유아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공휴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

○ 접근성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 활용하되, 인구 밀집지역은 도가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시설 설치, 가정어린이집 돌봄시설 전환 지원

○ 모든 시군에 적어도 1개소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천안 6, 아산 4, 서산 2, 당진 2, 나머지 시군 각 1개소 등), 이후 수요에 따라 추가 설치 등 확대

❷ (6~12세 초등학생) 돌봄 공백 보완 및 완전한 초등 돌봄 제공

○ **(돌봄강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 확대*, 평일 아침(07~09시) 야간(~22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및 공휴일 돌봄제공

* 기존 아파트를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마다 돌봄시설 1개소씩 의무설치 추진

○ **(지역연계)** 운영이 어려운 휴·폐원 어린이집 및 종교단체 등 지역 기관단체를 활용한 아동돌봄 지원

○ **(늘봄보완)** 지역 내 가용시설*을 최대한 확보, 늘봄학교 시설 부족 해소

-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하여 인력풀 구성, 늘봄 강사인력 지원

* (도시)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학교 유휴공간 (농촌) 주민자치센터, 마을 도서관 등 활용

❸ (13~18세 중·고등학생) 사교육비 해소 위한 공립학원 운영

○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위해 남부권 희망 시군 대상 공립학원 운영(서울 소재 유명학원 위탁) 추진

○ 지역 내 폐교 리모델링하여 운영 → 성과 분석 후 확대

2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제공

○ 도시리브투게더(천안, 공주, 아산, 계룡 등 5,000호) 특별공급 비율 현행 최대 60%→100% 대폭 확대* 및 농촌 리브투게더(500호) 우선 공급 추진

*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법령개정 지속 건의

○ 젊은 층 선호 지역의 도·시유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및 지속 보급 확대 추진

3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❶ 일·육아 병행을 위해 공공 최초 주4일 출근제 시행

○ **(주4일 출근제)** 도, 시군 및 산하기관 소속 0~2세 자녀 둔 직원에 대해 공공최초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로 사실상의 주4일 출근제 시행

○ **(초등 돌봄시간 제공)**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9세부터 12세에 대해서도 하루 최대 2시간씩 초등 돌봄시간(특별휴가 신설) 추가로 제공(최대 12개월 이내)

○ **(성과급 확대)** 그동안 출산·육아휴직시 성과평과에서 배제, 출산 후 아이를 기르는 것만으로도 성과로 인정하여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

○ 이 외에도, 근무성적평정 시 불이익 배제하고 가점부여(2~4점), 세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가능 범위 내로 특별승진 확대

❷ '출산·육아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등 추진

○ **(캠페인 추진)** 기업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문화 확산

○ **(인센티브 제공)** 출산장려 우수 중소기업에 출산·육아 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개소 선정)

○ **(유아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 동반 가족 도내 행사·축제·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문화·체육 관광시설 등) 이용 시 우선 입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충남 합계출산율 '23년 잠정 0.84명(전국 0.72) -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부담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 위한 충남형 저출산 대책 필요	○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목표 -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 공공(도청+소속공공기관) 최초 주4일 출근제 시행 - 유아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확산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구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맞벌이 부부 등에 절실한 영유아 평일 20시 이후 야간, 주말·휴일 보육 공백 발생 ○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문화 상존 ○ 주거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계획이 있어도 미루는 경우 발생	○ '전담보육시설 설치'로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 및 돌봄 실현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파격적인 주거 정책 지원 및 사회분위기 대전환 추진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추진

1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존 정책 재설계

○ 출산 시 국가(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이외에 지자체(출산지원금, 자체 수당 등)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이 잘게 쪼개져서 제각각 시행

○ **(제안내용) 현금성 지원 통합 대상 및 금액 기준 전국 통일**

2 결혼한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 현행 제도는 혼자 사는 사람 보다 결혼을 한 부부가 오히려 불리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단독 2,200만원에 비해 1.7배만 증가

○ **(제안내용)**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유인책이 되도록 **미혼보다 기혼부부 혜택이 크게 모든 제도 전면 재검토**

3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고려

○ 청년 층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부담, 이혼 시 발생하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을 우려하여 결혼을 꺼리는 경향

○ **(제안내용)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4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 2023년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3,85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나 결혼·출산이 활발히 이뤄지는 30~39세 순자산은 844조원에 불과,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증여세가 장벽으로 작용

○ **(제안내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1억 5천만원(양가합산 3억원)에서 2억 5천만원(양가합산 5억원)까지 확대되면 청년 층의 주거 부담 해소로 결혼 및 출산 증가에 기여

5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운 시점 도달,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필요

○ (제안내용) ❶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조속 설립**, ❷외국인 유학생(D-2)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숙련인력(E-7) 취업허용업종 확대 등 **비자 제도 개선**

□ 소요예산 : 3년간 총 4,637억원

※ 기존에 추진 중인 주거정책을 제외하면 **신규로 3년간 707억원 추가 소요**

○ **(보육·돌봄시설 설치·확대)** 595억원(국비 150, 도비 216.5, 시군비 2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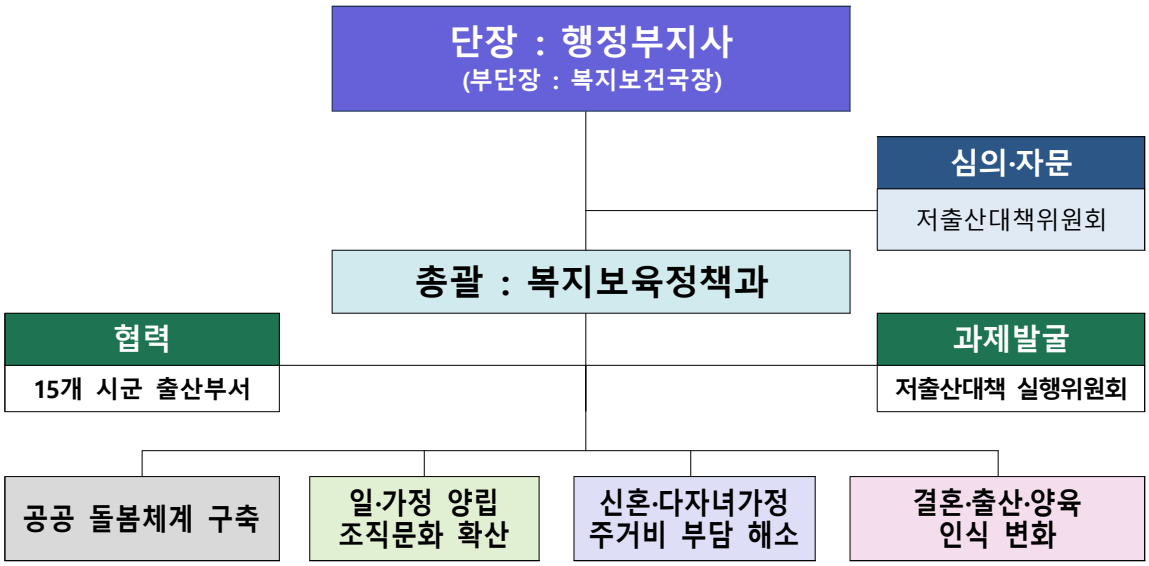
○ **(주거 지원)** 3,930억원(주택건설기금 711, 도비 1,675, 임대보증금 1,544)

○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확산)** 30억원(도비)

○ **(공립학원 건립·운영)** 82억원(국비 10*, 도비 72)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검토

□ 추진체계(안)

< 충청남도 저출생 대책 실행 TF 구성(안) >



□ 향후계획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실행력 확보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24.7월)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실천을 위해 도시군 관련 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저출생 대책 실행 TF' 구성 운영('24.8.~)

○ 도내 중소기업 등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24.하반기)

Ⅳ. 자율과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

1-1-2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카오톡 여권 업무 상담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협조기관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	김윤성 주무관	연락처	041-635-2354
소요예산	-		

□ 추진배경

○ 공무원 업무 시간(09시~18시) 및 120 충남콜센터 운영(08시~20시) 종료 시간 이후 여권 문의 경로 부재

- 24시간 시·공간 제약 없는 여권 민원 상담 서비스 필요

○ 여권 담당자 전화 응대 시 창구 방문 민원인 대기시간 발생

○ 쉽게 접근 가능한 모바일 홍보 매체를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사용자 자동 채팅 상담 운영

○ SNS 정보 수신 동의 사용자 대상으로 정기·수시 메시지 발송

○ 해외여행 유의사항, 여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시·공간 제약 없이 여권 관련 민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여권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규정 실시간 안내·홍보

□ 추진일정

○ 해외여행 유의사항, 여권 관련 법령 개정 안내(상시)

○ 민원 일반 정보, 도정 홍보, 알림 사항 등 안내(상시)

1-1-3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협조기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강성종 주무관 방성준 주무관 김다혜 주무관	연락처	041-635-3685 041-635-3687 041-635-3679
소요예산	-		

□ 추진배경

○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 맞추어 실질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신속·정확한 고품질 민원 행정 서비스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① 방문하는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외국인 및 다문화인 대상 민원 서류 대필 작성
- 독서 확대기 및 음성 증폭기 등 장애인 편의용품 이용 보조
- 청사 내 각 실·과 등 민원인 요구 장소 안내

② **민원 응대 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체계 확립
-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교육

③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분기별 200명)

-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및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④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제도 시행

- 접수되는 법정민원 대상,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30% 단축 추진

⑤「**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시·군 공공시설을 연계, 법정 요금 감면 여부 즉시 조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민원 응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 방문·온라인 접수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 및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 「**1분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4.77점(5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

-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결과, 1분기 단축처리율 총 94% 달성 (총 1,174건 중 1,098건) 및 단축률 평균 76% 달성하였음

-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법정 요금할인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해당 자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졌으며, ’22년 6월 이후 API 연계 확대로 이용률 급증(’22.5. 32건 > ’23.6. 416,870건 > ’24.3. 483,340건)

□ 추진일정

○ 「민원안내도우미」 지속 운영 : 연중

○ 부서별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 연 2회(3월, 9월)

○ 분기별 민원인 만족도 조사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민원 처리기간 단축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3월, 6월, 9월, 12월)

1-1-4 도민참여 예산제도 내실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협조기관	기획재정부·각 부처 道 예산담당관 등 전부서
담당자	이소진 주무관	연락처	041-635-3608
소요예산	('24년) 15,000백만원		

□ 추진배경

○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참여(제안·심의·선정·평가)를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도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도민 주체의 민주주의 가치 회복

□ 현황(문제점) 진단

○ 일반 도민의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주인 인식 제고 필요 → 적극적인 지역 주민 주도형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적극적인 홍보, 도민참여예산 교육 등) 방안 마련

○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도민참여를 확대하여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 추진방향

○ 도민참여예산 지역 파급효과 제고

- 道 정책사업 규모 확대(60억원→100억원) 및 저출산분야 신설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과 유사하고 지역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통합 추진

○ 도민참여예산기구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2025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선정시 투표비율 상향 조정(60%→70%)
- 청소년위원회 신설을 통한 청년 참여 유도

○ 도민참여예산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 맞춤형 도민참여예산학교 추진 및 교육과정 내실화
- 온라인 소통 플랫폼(서로e음) 활용 도민의견수렴 강화

□ 세부 추진사항

❶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접수) 2024. 4. 22. ~ 5. 21. / (공모규모) 150억원

○ (공모대상) 충청남도 도민

○ (참여방법)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서로e음, 우편, 방문)

○ (공모 및 선정절차)

①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4월~5월)	◦ 공모사업 제안(도민 → 道) ◦ 공모진행 전 응모방법 등 홍보, 컨설팅 실시
②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선정 (1차심사) (5월~7월)	◦ 全사업 : 분과위원회 심사 및 조정 ◦ 도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①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③ 온라인 도민투표 및 예산위 총회 투표(8월)	◦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30%) ◦ 도민참여예산위 총회(현장 또는 온라인) 투표(70%)
④ 제2차 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8월)	◦ 최종심의 및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결과 합산)
⑤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8월)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충남넷, 서로e음)
⑥ 도의회 예결위 최종 선정결과 공개(12월)	◦ 2025년 본예산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결과 공개 (충남넷, 서로e음) ※ 최종 심의 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❷ 기타 제도 개선사항

○ 총괄부서의 사전심사 일정을 확대(2일→7일)하여 부적합사업 1차 선별기능 강화

○ 제안사업 공모 全 과정(사업제안·심사·선정·집행·평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업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道-도민 간 소통 활성화

○ 사업 공정성 등 고려 최소 신청 사업비 설정 : 24백만원 이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만족도 84%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만족도 85%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도민참여예산제 인식 저조 ○ 예산편성과정에만 한정된 도민참여	○ 예산제 인식 확산 및 참여 저변 확대 ○ 예산 전 과정(편성·집행·평가) 참여 확대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및 분류 일정이 짧아 부적격 사업 선별에 어려움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유형과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유형의 성격이 유사하여 구분 모호

○ 도비 부담비율 및 부담액 확대에 대한 의견 및 요청이 있으나, 열악한 도 재정여건 등으로 공모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24년 소요예산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일자리, 탄소중립, 문화관광개발, 인구소멸 등)	제안 한도액 **(5억원)**
	청·소년 분야	20억원	• 청년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분야	40억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사업 (보육서비스 개선 등 저출산 문제 해결 사업)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5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 추진체계

구 분		협 조 사 항
道	全 부서	·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검토 협조** - 법령 위배, 중복사업 여부 등 부적격사업 선별 및 사업비 산정 **적극적 검토** ※ 타 부서 연관 제안사업에 대한 배타적 검토 지양 · 부서별 도민참여예산 담당자 지정 운영(예 : 예산서무)
	예산담당관	· 2025년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예산 우선 편성 협조** - 공모 선정사업 및 기타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분과위원회 간사실국	· 분과위원회 운영 적극 협조(분과위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결과 보고 등
	공 보 관	· 도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 - 언론매체(방송·신문) 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부 - 도 홍보매체(누리집, SNS, 블로그 등) 활용 홍보
	대 변 인	· 도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서로e음) 운영 적극 협조 - 도민참여예산 공모 신청·접수 협조, 도민 설문조사 등록
시군	참여예산 담당부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협조**(시군·읍면동사업) - 사업별 해당 부서 검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등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매체(SNS, 블로그) 활용 홍보 협조 ·「찾아가는 예산학교」운영 시 적극 신청 및 도민 참여 독려

□ 추진일정

구분	주 요 내 용	일정
1/4 분기	■ 2024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2월
	■ 2024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수탁기관 선정	2~3월
	■ 제1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024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월
2/4 분기	■ 2024년 도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실국원 업무보고 청취)	4월
	■ 제1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4월
	■ 2024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4월
	■ 제1차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개최	4월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추진	4~5월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4~5월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4~7월
	■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찾아가는 예산학교, 사이버강의)	4~12월
	■ 제안사업 공모 신청사업 분류 및 사전검토(도·시군)	5~6월
	■ 제2차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개최	6월
3/4 분기	■ 2025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차 심사(적격 및 채택여부 판단) - 도 정책사업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 시군 사업부서,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6~7월
	■ 2025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최종선정 투표(심사 통과사업) - 온라인 도민투표(3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70%)	8월
	■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8월
4/4 분기	■ 제3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11월
	■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024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유공자 표창 등	12월
	■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25년 본예산 심의·의결 후 확정	12월

□ 홍보계획

○ 온라인 소통 플랫폼「서로e음」연계 상시 홍보

- 공모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양방향 소통 제공

○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홍보 웹포스터 道 블로그 및 sns 게시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의 홍보 참여

1-1-5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새마을공동체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명상 주무관	연락처	041-635-3473

□ 추진배경

○ 복잡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사회혁신 플랫폼 조성 필요

○ **지방시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특색에 기반한 혁신적 성장 필요성 부상 → **'로컬브랜드'** 육성

⇨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로컬창조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성장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지역혁신체계 및 로컬브랜딩 구축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

- (기반구축)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광역 플랫폼 구축
- (네트워킹)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나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
- (공간구조) 생활실험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
- (브 랜 딩) 로컬브랜딩 활성화를 위한 예비생활권 발굴 및 컨설팅 활동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소통협력공간 조성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의뢰 (道 건설본부)

○ 충남 15개 시군 공동 활동 모색을 위한 시군별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로컬브랜딩 생활권 발굴 및 시·군 맞춤형 컨설팅

○ 지역 자생적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로컬 인적자원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거점공간 조성과 주 사용자 타깃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충남형 로컬브랜딩 활성화(로컬브랜딩 예비생활권 발굴 5건)

○ 기대효과

- 지방시대,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 소통·협력의 핵심거점 구축으로 자생적 창조역량과 문제해결력 제고 기반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지역밀착형 문제 해결 유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주민주도 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의 조성·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 소통협력공간 기능, 사회혁신센터 운영, 입주기관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 등

□ '24년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44억원(국비 70억원, 도비 74억원 /2020~2025)

- 프로그램 운영(국비 70, 도비 14), 리모델링(도비 60억원) 투자계획

○ **('24년 사업비)** 1,090,000천원(국비 500,000, 도비 590,000)

- 로컬브랜딩 생활권 발굴 및 대학-지역-기업연계 로컬Biz 멘토링 등 실시

□ 추진일정

○ 소통협력공간 조성 추진 계획 수립 및 의뢰(건설본부) ('24.2월)

  * 건축의뢰(건설본부, '24.2.) → 제안공모('24.3.~5.) → 실시설계('24.6.~10.) → 공사('24.11.~)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24.5월)

○ 충남형 로컬브랜딩 예비생활권 발굴·활성화 컨설팅 지원('24.9월)

□ 홍보계획

○ 충남 로컬콘텐츠 매거진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충남 로컬임팩트 박람회 개최('24.9월)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1-1-6 참여와 자율 기반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새마을공동체과	협조기관	도, 시·군 협치업무 추진부서
담당자	한유정 주무관	연락처	041-635-3480

□ 추진배경

○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 종전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 대두

○ 행정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부터 도민 참여 확대, 민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방식으로 행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현황(문제점) 진단

○ **(도민 참여 부족)** 기존의 행정주도의 방식의 한계

- 기존 방식은 도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

○ **(민관상호 작용부족)** 기존의 행정 시스템의 민관 협력 기회 부족

- 기존 시스템은 민관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의 어려움 존재

□ 추진방향

○ **(논의기구)** 민관협치 정책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협치회의)

○ **(역량강화)** 행정도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협치주체들의 역량강화 교육(협치학교)

○ **(환경조성)** 도정참여 확대 및 협치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협치포럼 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충남민관협치회의」운영

-「충남민관협치회의」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충청남도 협치학교」운영

- 도민·시민단체·활동가 등 협치주체별 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강화

○ 협치기반 형성 및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포럼 운영

- 민관협치 관련 활동가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

○ 민관협치 문화 확산을 위한 도내 우수 민관협치 사례 발굴

-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민·관 상호학습 및 교류의 장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교육 및 토론회 5회)
- 민관협치 워크샵 운영(2회)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5건) 및 발표대회(1회)

○ 기대효과

- 교육·포럼 등을 통한 협치역량 강화 및 협치마인드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24년 소요예산

○ 충남민관협치회의 운영 18백만원

○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12백만원

○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16백만원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12백만원

□ 추진일정

○ 「충남민관협치회의」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24. 3월~12월)

○ 충청남도 협치학교 계획 수립 및 운영(′24. 1~12월)

○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치 포럼 운영(′24. 3월 ~ 12월)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6~8월) 및 발표대회 개최(′24. 10월)

□ 홍보계획

○ 도내 행사, 충남넷, 유튜브, SNS 등 활용

1-1-7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주관부처/부서	대변인	협조기관	전부서
담당자	한도희 주무관	연락처	041-635-4899

□ 추진배경

○ 기존 여론조사 방식(설문, 전화조사 등)의 의견 수렴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일상적 관심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민의견 수렴

□ 세부 추진사항 : 도민패널을 통한 온라인 조사

○ (주요 정책 조사) 역점 과제의 방향, 세부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도민 인지도, 선호도 조사에 따른 정책 홍보성 조사

○ (실과 의뢰 조사) 즉각적 결과 공유로 만족도 높은 정책 수시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민패널 1.5만명 모집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정책 조사	○ 도민 패널 가입 시 수집되는 정보(지역, 연령, 성별 등) 에 의한 조사 표본 설정

□ '24년 소요예산 : 210백만원(도비 100%)

□ 추진체계

○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시의성과 신뢰도 높은 조사와 결과 분석

□ 추진일정

○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월 2회씩

○ 도민 패널 모집 이벤트 ····· '24. 5, 8, 11월

□ 홍보계획

○ 도 공식 SNS 및 매체(현수막, 밥상뉴스 등)를 통한 지속적 조사 이벤트 홍보

1-1-8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연수 추진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도민교육운영과	협조기관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충남도 내 15개 시군
담당자	임훈 주무관	연락처	041-635-6553

□ 추진배경

○ 국·도정 비전 공유 및 지역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한 도정 추진 동력 확보

○ 도·시군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시설 종사자 실무교육을 통한 도정 효율화

□ 현황 진단

○ 민선 8기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민과의 도정 공유 필요

○ '23년 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성원 역량 증진 필요

□ 추진방향

○ 민관협치 핵심인력(새마을부녀회, 자율방재단,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 도·시군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각종 지원 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편성

□ 세부 추진사항 : 30개 과정, 79회, 4,770명 교육

○ **(유관단체) 국·도정 시책 공유, 각 단체 실무 교육 등(37회, 3,270명)**

- 도내 전 시군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한 지역 새마을 부녀회 및 자율방재단 등 대상 주요 국도정 시책 공유 및 역량 강화 교육

- 보조금 지원단체, 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 단체 종사자 등 실무교육

○ **(공공기관) 공공기관 관리자·실무자·신규자 직무교육(23회, 610명)**

- 시군 공공기관 관리자(리더십 등) 및 실무자(예산, 보고서 등) 직무교육
- 도 공공기관 신규자 기초실무능력(청렴, 적극행정, 인사 등) 배양
- 도·시군 공공기관 직무역량(정보화, 보고서, 예산·회계, 인사·노무 등) 과정

○ **(시설 종사자) 사회적 약자 지원시설 등 종사자 실무교육(11회, 590명)**

- 폭력피해자·장애인·다문화가정 지원시설, 성폭력 상담원 등 교육
- 사회복지 법인 종사자 실무 교육(예산·회계, 보조금 관리 등)

○ **(생활 밀접 분야)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유용한 지식 습득(8회, 300명)**

-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원활한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역량 교육
- 도민 리포터, 국·도정 강사 등 원활한 도정 참여를 위한 교육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도민교육 미 시행	○ 도민 4,770명 대상 교육 추진 ※ ('23년) 4,651명 교육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도민의 낮은 도정 시책 이해도 ○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시설 등의 비효율적 운영	○ 도민 도정 시책 공유 및 이해 확산 ○ 각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실무 능력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 운영 지원

□ '24년 소요예산 : 3억 3,735만원(도비)

1-1-9 중소기업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정보보호 지원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정보화담당관	협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추완엽 주무관	연락처	041-635-3732
소요예산	('24년)805.35백만원		

□ 추진배경

○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해킹의 주요 타겟(Target)이 되고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사이버 위협에 크게 취약

⇨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보안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영세 중소기업은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인력과 정보보호 자원 부족 등으로 사이버 위협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고, 악성코드 유포·경유로 이용되는 사례 증가

- 사이버침해 피해기업의 98%가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 특히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지역 기업은 7.9% 수준으로 사이버공격 등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

○ 지역 영세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적시 대응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지원방안 부재

□ 추진방향

○ 중소기업 현장 수요중심의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운영

○ 정보보호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활동 지원

○ 충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세부 추진사항

○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10건)

○ 중소기업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지원(50건)

○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실무인력양성 교육(525명)

○ 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남정보보호 협의회 구성 및 운영(3회)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여 피해기업에 긴급 출동 및 초동 조치 수행

○ 충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 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 충남정보보호협의회, 정보보보호서비스 협의체 운영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정보보호 전담 조직보유 7.9% 수준으로 보안 인식과 정보보호 환경 취약 ○ 침해사고 대응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부재	○ 중소기업 정보보호 체계 강화 ○ 기술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으로 기업가치 상승 ○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정보보호 역량 강화

□ '24년 소요예산 : 805.35백만원(국비 540, 도비 251.35, 충남TP 14)

□ 추진체계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업무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 업무협약

□ 추진일정

○ 한국인터넷진흥원·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 업무협약 ····· '24. 4월 중

○ 정보보안 종합컨설팅 및 교육·세미나 실시 ····· '24. 4 ~ 12월 중

○ 정보보호 솔루션 및 보안장비 지원 ····· '24. 6 ~ 12월

○ 충남정보보호협의회 개최 ····· '24. 4 ~ 11월

□ 홍보계획

○ 홈페이지· SNS·정보보호 협의체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1-1-10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교통정책과	협조기관	천안시, 아산시
담당자	현지원 주무관	연락처	041-635-4575

□ 추진배경

○ 도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통학·통근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제공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 추진현황

○ 도-천안시·아산시 '철도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24. 12.)

○ 도-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업무협약 체결('24. 3.)

○ 철도 정기승차권 사업 지원 신청 및 지급('24. 4.~)

- 사업 시행('24. 1.), 지원금 신청('24. 4.)

□ 추진방향

○ 사업내용: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천안·아산지역 도민 대상 철도 정기 승차권 지원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지원대상: 천안·아산↔서울·경기 구간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객 중 서울·경기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 주민

○ 지원내용: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시 지역화폐로 환급

※ 정기승차권 사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수도권 인구 유출	○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통학·통근 지원으로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승용차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지역외 소비	○ 탄소중립 교통환경 조성 ○ 지역화폐 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완료('23. 12.)

□ '24년 소요예산

○ 교통비 지원: 1,000백만원(도 5, 천안·아산 5)

□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역 할
충청남도	o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사업예산 편성 및 교부 o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도 조례 개정 o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관리 총괄
천안시, 아산시	o 사업수행(자격 확인, 지역화폐 지급 등) o 사업예산 편성·집행 및 정산, 시 조례 개정 o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등
한국철도공사, ㈜SR	o 사업 시스템과 철도 정기승차권 데이터 연계 관련 사항 o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o 사업 관련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 등

□ 추진일정

○ 철도 정기승차권 사업 지원 신청 및 지급('24. 4.~)

○ SR 정기승차권 데이터 연계 및 협약 체결 추진

□ 홍보계획

○ 철도정기승차권 지자체 홍보 추진

- 15개 시·군 등에 전단지 및 리플릿 제작·배부 추진

1-1-11 돌봄 사각지대 없는 공적돌봄체계 구축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복지보육정책과	협조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담당자	김효환 주무관	연락처	041-635-2614

□ 추진배경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인구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문제가 대두

○ 정부에서 초등돌봄 개선을 위하여 ‘늘봄학교’를 시행 중에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하여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

□ 현황(문제점) 진단

○ 초등돌봄 정책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각기 추진하므로 인하여 정책의 분절성, 중복성이 발생하고 도민 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 (교육부)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충청남도)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 추진방향

○ 초등돌봄 정책의 분절성, 중복성을 해소하고 도민 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 마련

- 학교안팎 초등돌봄체계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 돌봄서비스 상담, 신청, 이용,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풀케어 돌봄 플랫폼’ 구축
- 아침·야간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24. 3월 ~ 계속)

- 돌봄시설 인큐베이팅, 컨설팅, 평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 충청남도 풀케어 돌봄 플랫폼 구축(~'24.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돌봄 등 초등돌봄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아침·야간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24. 7월 ~ 계속)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23년 42개소 → '24년 51개소 → '25년 79개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 61.34% - (돌봄 이용 아동 수/도내 초등학생 수)*100 * 돌봄 이용 아동수 :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충남형 온종일돌봄 이용 아동(내부통계) * 초등학생 수 : '23. 12월말 재학생 수(교육청)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 68% - (돌봄 이용 아동 수/도내 초등학생 수)*100 * 돌봄 이용 아동수 :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충남형 온종일돌봄 이용 아동(내부통계) * 초등학생 수 : '24. 12월말 재학생 수(교육청)
○ 초등돌봄 이용자 및 돌봄기관 만족도 66점 * 충남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연구용역('22.9.) - 이용 만족도 66점	○ 초등돌봄 이용자 및 돌봄기관 만족도 70점 * 2024년 하반기 중 만족도 조사 실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분절된 돌봄정책으로 인한 이용률 저하 및 정책 체감도 하락 ○ 아침·야간, 주말 및 일시돌봄 정책 부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분절성, 중복성을 예방하고, 이용률 및 정책 체감도 향상 ○ 아침·야간, 주말 및 긴급돌봄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 ’24년 소요예산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예산 5억원
※ 충청남도 풀케어 돌봄 플랫폼 구축비 3억원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43억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예산 5억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311억원

○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예산 20억원

□ 추진체계

○ 충남도) 계획수립 및 시행

○ 시군) 자체계획수립 및 시행

○ 교육청)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 협력

○ 지원단) 돌봄시설 인큐베이팅, 컨설팅,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 추진일정

○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참여기관 수요조사 (’24. 4.)

○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 도-시군 회의 (’24. 4.)

○ 아침, 저녁돌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24. 7. ~ 12.)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추진계획 수립 (’24. 7.)

○ 충청남도 풀케어 돌봄 플랫폼(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통 (’24. 12.)

○ 충남형 풀케어 돌봄 사업 시행 및 평가 (2025년)

○ 충남형 풀케어 돌봄 사업 확대 시행 (2026년)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도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도 홍보 추진

1-1-12 걷쥬 활성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체육진흥과	협조기관	충청남도체육회
담당자	이은주 주무관	연락처	041-635-3856

□ 추진배경

○ 매년 평균수명(83.5세)은 증가하지만 건강 수명(66.3세)은 늘지 않는 상황
- 연령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대폭 증가
-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가 의료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2030년에 들어서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운동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으로 질병을 예방,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고, 의료비 절감액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新 체육 정책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수 명)** 평균수명 : 83.5세, 건강수명 : 66.3세

○ **(문제점)** 17년 동안 질병 등으로 행복한 삶 저해

□ 추진방향

○ 「걷쥬 앱」 가입을 통한 걷기 활성화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감소 및 어르신 건강증진으로 의료비 절감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1. 목표설정

○ 2024년 가입목표 : 57만 명(어르신 7만 명)
- 참여인원: 20년 35천명 → 21년 213천명 → 22년 419천명 → 23년 524천명

2. 앱 안전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안전하고 지속적 관리 위한 고도화 추진

② 60만 명 관리 위한 전문인력(전산직) 확보 (충남도 체육회 1명)

③ 인센티브 예산확보: 본예산 23억 원 확보, 제1회 추경 시 8억 원 증액 반영

3. 도민 참여 제고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민간위탁) '24년부터 걷쥬 앱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종합형 플랫폼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자생적 순환 구조 마련
- 수익창출 규모에 따라 도비 지원액 감액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22년 걷쥬 참여 인원 35만명	○ '24년 걷쥬 참여 인원 57만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민 건강 수준 향상 기대	○ 걷쥬 앱 활용, 생활 속 걷기운동을 통해 질병 예방, 건강수명 증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노후로 어르신 행복 지수 증가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도비 예산액 증가) 참여 인원 증가에 비례 예산 소요액 누증

＜연도별 걷쥬 사업 예산 및 인센티브 지급인원＞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증감액	인센티브 지급인원 / 지급액			
			전 도민	지급액	어르신	지급액
2020년	213	-	23,481명	56	4,869명	94
2021년	1,390	1,177	129,507명	342	74,780명	955
2022년	3,374	1,984	290,132명	770	237,055명	2,459
2023년	3,831	457	371,864명	1,016	154,708명	2,293

□ '24년 소요예산

○ 충청남도민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308백만원(도비 1,500, 시군비부담금 808)

□ 추진체계

○ 충청남도: 걷쥬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체육회: 걷쥬 앱 시스템 관리 및 사업추진

□ 추진일정

○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쥬 운영계획 수립('24.1.23.)
○ 걷쥬 앱을 활용한 가입자 걷기 참여 확대 추진(연중)
○ '24년 도민 57만명 가입 위한 인센티브 강화(연중)
○ 걷쥬 참여자 만족도 조사('24.10월)

□ 홍보계획: 없음

○ 걷쥬 사업 효과에 대한 도민 입소문에 의한 사업 추진

1-1-13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협조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김상엽 주무관	연락처	041-635-3325

□ 추진배경

○ 지역내 자금 선순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정적 금융서비스 지원 확대 및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완성 필요

○ 수도권으로 집중된 금융양극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제고 도모

□ 현황과 여건

○ 전국 6개 지방은행(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은행) 영업 중으로 남부지역에 국한, 상대적으로 충청 및 강원권은 지역금융환경 열악

* **(지방은행)** 지역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액 절반(48~53%) 차지 → 지역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大

○ 관련법 상 250억원 이상의 초기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나, IT시스템 · 점포망 · 인력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3~5천억원 이상 자본소요 예측

○ 최근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인한 점포 통 · 폐합 추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금융위기에 따라 지방은행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 사업 개요

○ 설립형태 : (법적) 지방은행 + (영업) IT 금융플랫폼 기반 중심

- 디지털 기술 활용, 영업점 및 운영인력 최소화로 기존은행의 단점 보완

○ 사 업 비 : 5,000억원(민자 등 5,000) * 향후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대

○ 설립주체 : 경영자 확정 후 법인 설립(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추진지원)

□ 기대효과

○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 형성 및 금융의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금융 분권 회복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제고

○ 제1금융권 이용에 소외받는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역 대규모 사업 금융공급, 고용 효과 창출 등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現 금융시장의 경영환경 악화 및 신생 은행의 초기 생존력 우려로 인해 향후 설립인가 신청 시 금융당국의 부정적·소극적 대응 예상

* 1993년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신규은행 설립 사례 부재

○ 은행 설립인가 불확정 등의 염려로 전략적투자자(SI) 확보 난항

□ 추진 현황

○ ('22. 4.)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제20대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 확정

○ ('22. 6.)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힘쎈충남 민선8기 중점과제 확정

○ ('22. 6.~12.) 4개 시도 공동「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추진

○ ('23. 1.~현재) 설립자본 출자자 모집 관련 기업체 방문 면담 추진

- 총 77개 금융사, 국내기업 등 모집 활동 전개(전략적투자자 14, 재무적투자자 63)

○ ('23. 10.) 금융위 주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동향 모니터링

- 정부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 道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 추진

○ ('24. 2.) 출자자 모집 관련 기업체 관련 지휘부 동향보고

□ 향후 계획

○ 은행경영 대주주 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집 활동 지속 전개

○ 용역 결과 활용, 금융위 이해·설득 및 국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 확대

○ 금융당국, 투자자 후보 기업 등 대상 맞춤형 홍보 적극 추진

1-1-14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더행복 충남론

주관부처/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	정서은 주무관	연락처	041-635-2211

□ 추진배경

○ 금융소외계층 소액금융 지원으로 가계경제 안정 및 경제적 재기 독려

□ 현황(문제점) 진단

○ 한정된 재원*으로 2023년부터 수혜자 수 감소 추세

* 2020년 ~ 2022년 3년간 12억원 투입 → 2023년 ~ 2024년 비예산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 5년간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충남 거주자 중 금융소외자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3년 이내 완제
-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 성실이행 또는 3년 이내 완제

○ **(지원내용)** 금융소외계층에 저금리 소액금융 지원

- 1인 최대 1,500만원 지원, 최대 5년 상환, 연 4%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과목	지원내용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이자율 (연체)	상환 방식
❶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 생활자금 지원	최대 15백만원	최대 5년	연 4% 이내 (연 6%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❷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장비 구입 등 사업장 시설개선 필요자금 지원				
❸ 운영 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사업장 운영 필요자금 지원				
❹ 고금리차환자금	·연 20% 이상 차입하여 사용 중인 고금리대출의 차환자금 지원				
❺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	최대 10백만원		연 2% (연 4%)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해당없음	- 소액금융 33억원(1,400명) 지원 ※ 24.3.기준 31억원(1,210명)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가계 부채 증가로 서민경제 어려움	- 긴급생활자금 등 지원으로 도민 체감형 서민 경제 안정화

□ '24년 소요예산

○ 기투자(12억원)

□ 추진체계

· 신용회복위원회 자금 지원(12억원) · 사업 진행상황 매달 점검	→	· 신용회복위원회 자금 관리 · 사업종료시 자금 정산, 반환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	· 소액금융지원 대상자 심사, 선정, 대출, 사후관리 등 · 보증보험 가입(원금 손실예방)
	신용회복위원회

□ 추진일정

○ **(협약체결)** 사업을 위한 도·충남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 협약('20.8.)

○ **(사업추진)** 사업비(12억원) 지급, 소액금융지원 및 현황 관리('20~'24)

○ **(원금회수)** 사업종료시 사업비(12억원) 반환('25~)

□ 홍보계획

○ 카드뉴스, SNS, 도 및 시군 게시판 홍보 등 추진

○ 금융복지 지원사업과 연계, 수혜자 확대 도모

1-1-15 충남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변경)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일자리기업지원과	협조기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자	이상혁 주무관	연락처	041-635-3410

□ 추진배경

○ 중소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따른 불용재고 해소방안 필요

- MOQ(최소발주수량)에 맞춰 실수요 이상 자재구매로 불용재고 증가
- 불용재고로 인한 공간부족, 환경문제(산업물 폐기, 기능저하)대두

○ 시제품 테스트용 생산·실험장비 공유경제 필요

- 대학·연구기관 내 시험검사·장비 대여 및 정보공유

□ 현황(문제점) 진단

○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따른 불용재고 자재 비율이 높아져 충남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 불용재고* 자재의 증가는 제품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가 아니라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재고

- MOQ(최소발주수량)에 맞춰 실수요 이상 자재 구매로 불용재고 증가

  ※ 구매 최소 단위가 10만개의 나사를 구매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5만개를 소모하면 5만 개의 불용재고 발생

○ 불용재고 자재 보관에 따른 공간 부족, 폐기에 따른 비용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 등 불용재고 관리의 어려움 발생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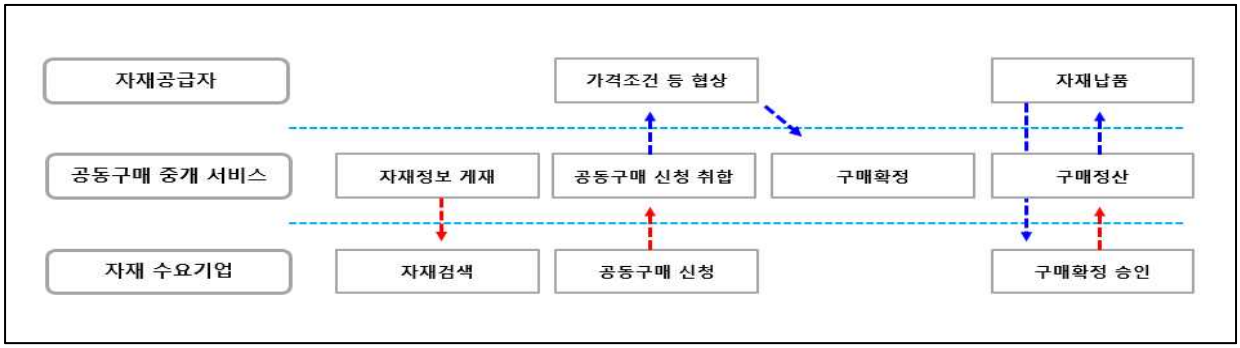
○ 불용재고 재유통을 통해 보관 및 폐기 처분에 따른 자원 낭비는 물론, 추가적인 비용 손실 최소화에 따른 재무개선

○ 공동구매를 통한 계획적 발주, 배송에 따른 유통경비 절감, 구매비용 최소화로 원가 절감 및 구매 협상력 강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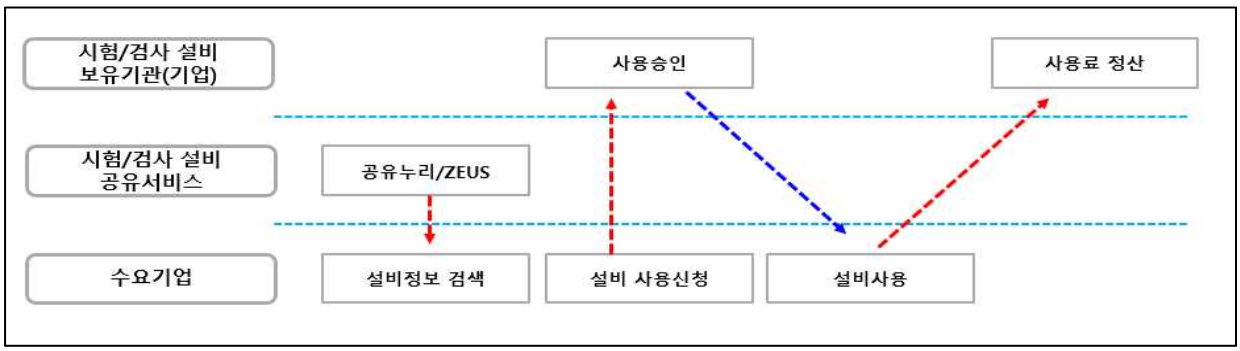
○ 플랫폼 주요 서비스 운영

❶ 자재 공동구매 중개 서비스(1단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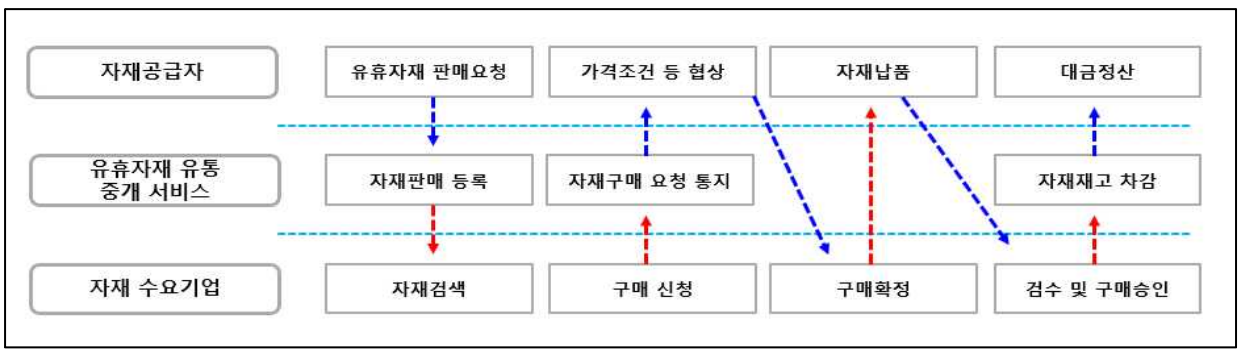
- 요구 자재 정보 및 공급자 정보 등 기준 정보 관리
- 구매 요청 정보를 통보(공급자)하고 구매 확정을 위한 공동구매 관리
- 공동구매 확정에 따른 비용정산 및 구매 자재 분배/배송

❷ 시험/검사 설비 공유서비스(1단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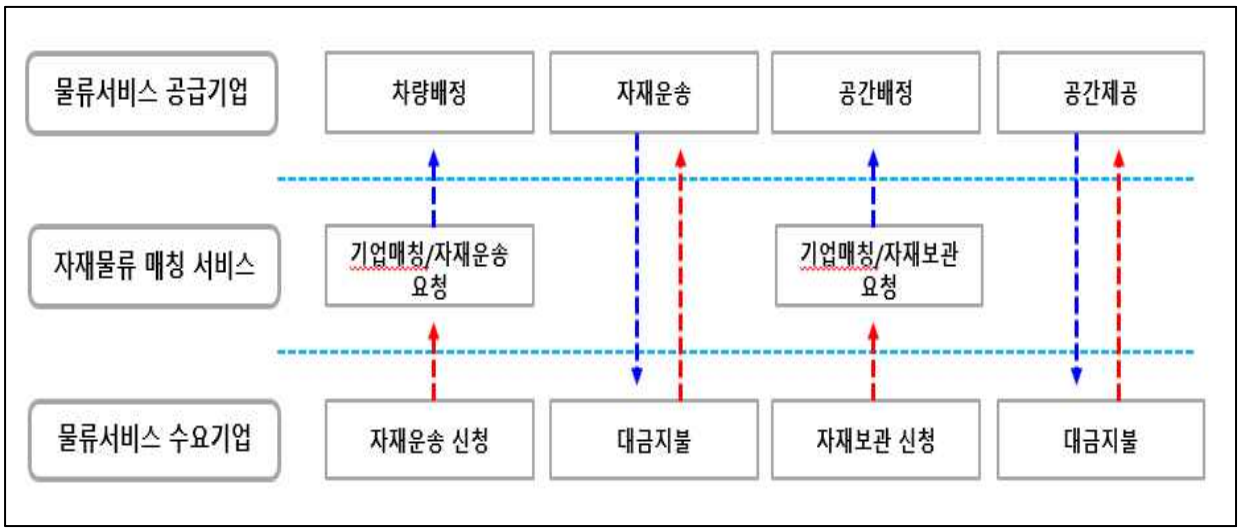
-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 및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연계 장비 활용 정보 제공

❸ 유휴자재 유통중개 서비스(2단계, 2026년)



- 자재, 판매자, 구매자 등 기준 정보 관리
- 유휴자재 판매 및 구매요청 등 유휴자재 등록 관리
- 자재 판매 관리 및 자재납품, 반품처리를 위한 납품 관리

❹ 자재 물류 매칭 서비스(3단계, 2027년)



- 물류 매칭을 위한 중개기업 선정
- 보관 및 운송 서비스 관련 기준 정보, 운송 이력 관리
- 보관 자재 조회 등 재고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중소기업 생산 유휴자재의 재고처리 ○ 공동구매 지원	○ 서비스 이용률 증대(거래참여자/가입자수) - '25년 : 60%, '26년 : 65%, '27년 : 70% ○ 이용자 만족도(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 '25년 : 80점, '26년 :85점, '27년 : 90점 ○ 유통플랫폼 서비스 거래건수 - '25년 : 130건, '26년 :270건, '27년 : 540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거래데이터 및 중개 서비스 데이터 활용으로 민간서비스 창출	○ 지역중소기업 공유경제플랫폼 운영 활성화로 산업자원 선순환체계구축 ○ 직접기대편익 175.9억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충청남도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 제2항 제1호의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②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치법규 등 개정계획 없음('24. 1.)

□ '24년 소요예산

○ '24년 예산 미확보로 제2회 추경 및 '25년 본예산 편성 추진

- 플랫폼 운영예산 : 연 352백만원

※ 클라우드 사용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1억 5천만원), 플랫폼 운영 및 홍보비(2억 2백만원)

□ 추진체계

충청남도	■ 예산의 확보 및 출연(주관기관) ■ 세부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 성과 확인 및 점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및 시스템 관리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중계기업 선정 및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10인 이내), 운영 ■ 공동구매 제품 발굴을 위한 기업 조사 및 관리
운영위원회	■ 플랫폼 운영 관련 의견 제시
중개기업	■ 자재물류 매칭서비스 운영

□ 추진일정

(1단계) 플랫폼 정상화
(2025년)

- ▸플랫폼 운영 재개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
- ▸자재 공동구매 중개 서비스, 시험/검사 설비 공유서비스 등 수요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기능 중심으로 활성화
- ▸초기 플랫폼 가입 기업 확보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2단계) 서비스 활성화
(2026년)

- ▸정보의 교류 극대화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유휴자재 유통 중개 서비스 기능 확대 운영
- ▸플랫폼 가입 기업의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등록제품 품질 관리 및 고객 상담 서비스 운영

(3단계) 서비스 안정화
(2027년)

- ▸민간 인프라(보관·운송)를 활용한 자재 물류 매칭 서비스 운영
- ▸물류 매칭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중개기업 선정

□ 홍보계획

○ 플랫폼 홍보

- 도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충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 홍보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지역 언론미디어, SNS를 활용한 플랫폼 홍보
-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협의체와 연계하여 플랫폼 서비스 안내

1-1-16 마을 공동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농업정책과	협조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김시명 주무관	연락처	041-635-4018

□ 추진배경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권 보호 및 농촌 고용인력 확보

□ 현황(문제점) 진단

○ 사 업 량 : 3개소(부여, 청양, 당진)

○ 사업기간 : 2022~2024년[이월](부여, 청양) / 2024~2026(당진)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도비 675, 시군 1,575)

- 개소당 15억원 지원('24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 토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 부담

□ 추진방향

○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발표한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강화('21.1.16.)"에 대응

○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거주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농업인 고용부담 완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24년 농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선정(당진시)

* '22년 선정 2개소(부여, 청양) 건축설계 추진 중 / 부여('25.3.), 청양('24.12.) 준공 예정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개보수 허가 행정절차 추진

구 분	위 치	유형	부지면적	건축규모	수용규모	수용인원	비고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11 (조폐공사 사택부지)	지역 거점형	17,529㎡	2,880㎡	23동	152명	리모델링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38번지 외 1필지	마을 공동형	5,292㎡	910,8㎡	25실	50명	신축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 194-2 외 1필지	마을 공동형	825.3㎡	1,164㎡	19실	40명	신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마련 부담	○ 공동숙식으로 농업인 고용부담 경감

□ '24년 소요예산

○ 150,000천원(국비 75,000, 도비 22,500, 시군 52,500) ※ 1년차(10%)

□ 추진체계

○ 농식품부 : 사업총괄

○ 충청남도 : 사업 추진상황 점검·지도

○ 시 · 군 : 사업추진

□ 추진일정

○ 부여군 : 건축설계('24.4.) → 시공사 선정 및 착공('24.9.) → 준공('25.3.)

○ 청양군 : 설계완료('24.5.) → 시공사 선정 및 착공('24.6.) → 준공('24.12.)

○ 당진시 :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 기획 등 행정절차 추진('24.1~12)
→ 건축설계, 시공사선정, 건축공사 착공('25) → 준공('26)

1-1-17 충남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문화정책과	협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자	최윤미 주무관	연락처	041-635-2413
소요예산	('23년) 2,520백만, ('24년) 19,875백만		

□ 추진배경

○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게임·e스포츠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및 디지털 수도 완성

□ 추진방향

○ (비 전)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을 통한 디지털수도 완성

○ (3대목표) ① 365일 찾는 경기장 ② e스포츠,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③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

○ (4대전략) ① 차별화된 e스포츠 경기장 조성 ②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③ 공공·민간 거버넌스 강화 ④ 게임산업 육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차별화된 e스포츠 경기장 조성**

- (사업기간) '22년 ~ '25년 - (위 치) 아산시 강소특구(배방읍 일원)
- (사 업 비) 275.3억원(국 40 지 235.3)
- (규 모) 연면적 4,084㎡, 주경기장 450석, 보조경기장 80석

○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 e스포츠 정규리그 운영 및 글로벌 대회 유치(국내 프로대회, 국제대회 유치)
- 청소년 교육 및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e스포츠 박람회, 관련 분야 직무과정 운영)

○ **공공·민간 부문 거버넌스 강화**

- e스포츠·게임산업 활성화 추진단 구성(국내 게임기업, 한국 e스포츠협회 등 참여)
- 산업계-학계-유관기관 등 공조체계 구축(e스포츠 관련 기업, 지역 관련학과 참여)

○ **게임산업 육성**

- 게임, 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진흥원, 민간투자기관 공동 출자)
- 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예비 팁스형 유니콘 기업 육성 / 30개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e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필요	○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1개소) ○ 차별화된 e스포츠 경기장 운영으로 방문객 증대(누적 관람객 20만명) ○ e스포츠 정규리그 운영 및 글로벌 대회 유치(누적 대회 40회) ○ 게임·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펀드 조성(50억원) ○ 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팁스형 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일자리 창출 1,000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e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필요	○ 충남 R&D집적지구, 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와 연계한 콘텐츠 산업 신거점 조성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진흥원)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 필요

□ '24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비 고
합 계	385.8	25.2	198.75	137.85	24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275.3	20	164.95	90.35	-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22.5	3	6.5	6.5	6.5	
게임산업 육성	88	2.2	27.3	41	17.5	

□ 추진일정

○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사전절차 이행('23. 8.~'23.11.)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23. 12.~'24. 8.) → 공사 착공 및 준공('24. 7.~'25. 12.)

○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통령배 대회('24. 8.), 충남 e스포츠 대회('24. 9.)

○ **(게임산업 육성)** 1호 펀드 조성('23. 12.) → 2호 펀드 조성 추진('24.6)

1-1-18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미래산업과	협조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TP
담당자	이준열 주무관	연락처	041-635-2236

□ 추진배경

○ AI·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 원가절감·납기감축 등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스마트공장은 미래 제조산업의 新성장동력으로 평가

○ 이에 주요 선진국(美·獨 등)을 중심으로 “제조 지능화·디지털화”가 전세계적 추세로 부상, 국내도 주요 대기업을 필두로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

□ 현황(문제점) 진단

○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은 정부 주도 진행, 지자체는 단순 보조금 지원 역할이었으나, `23년 사업 방침 변경으로 지자체에 주도적 역할 부여

- 지자체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정부는 지역별 자체사업 실적에 따라 국비사업 예산 배분 등 인센티브 부여

○ 이에 따라 道는 `23년 2개의 자체사업(소기업형, 지역균형발전형)을 기획·추진하여 도내 56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였으나,

○ `24년도 사업의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道 재정상황 악화로 사업 예산 확보에 난항(`24년 지역균형발전형 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추진방향

○ **(기업역량 강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자동화로 원가절감·납기단축 등 기업 경쟁력 강화

- 제조업 중심의 우리 도 경제 상황*을 반영,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 道 전체 경제 성장 견인

* 2차 산업 비중 61.28% → 타 지역 대비 제조업 의존도 高(충남지역산업진흥계획)

○ **(자체사업 추진)** 자체 재원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도 차원의 스마트공장 보급 역할 강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 **(국비연계)**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연계, 선정된 도내 기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자부담 비용 경감

- **(자체사업)** 道 자체재원을 활용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추진으로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기대효과

○ 생산과정의 자동화·디지털화로 생산성·품질 향상, 원가절감 및 납기준수율 증가 등 충남 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주요 성과 분석 결과('22.4.기준 / 통계진흥원)

▲ **(공정개선)** 생산성 29.4%, 품질 42.8%, 원가절감 15.9%, 납기준수율 16.8% 향상
▲ **(경영개선)** 고용률 1.5명(기업당), 매출액 6.4%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 '24년 소요예산 : 1,360.5백만원

(단위 : 개社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소요예산
총계		**108**	**1,360.5**
국비연계 (5)	**소계**	**48**	**449**
	충남형	25	204
	대중소상생형	10	100
	업종별특화	2	80
	사후관리	10	25
	탄소중립형	1	40
자체사업 (1)	**소계**	**60**	**911.5**
	소기업형	60	911.5

□ 추진체계

○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운영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추진일정

○ (‘24. 3.) 道-충남TP간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4. 7.)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수혜기업 선정절차 진행

○ (~‘24.12.) 수혜기업 확정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추진

1-1-19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산업육성과	협조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노의현 주무관	연락처	041-635-2256

□ 추진배경

○ 한국은 범용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고부가·고기능성 소재, 첨단 정밀화학 부문은 선진국 대비 경쟁력 미흡

○ 산업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추진 중인「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추진

□ 현황(문제점) 진단

○ 화학소재산업 종합적/체계적 지원기관 및 기업 R&D 투자 및 자본적 미비

○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력 부족 및 기술개발 정보 부족

□ 추진방향

○ 지역주력산업의 신산업 전환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고기능성 화학물질·소재·부품 중심의 시험분석·인증·DB관리 등 종합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스마트랩 기반의 분석센터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분석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원재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및 인증

○ 빅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서비스 및 OPEN LAB 기반 R&D 지원 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화학소재기업 기술지원기관 미비	○ 첨단화학 시험분석·인증·평가 및 화학소재기업 기술지원 사업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소재부품사업 정부 정책적 지원 열세 ○ 중국 등 후발국 양적/질적 경쟁력 가속화 ○ 선진사 첨단소재 기술 및 독과점 심화	○ 화학소재산업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국내외 환경 및 안전 규제 대응 체계 마련 ○ 화학소재산업 대응 전문기술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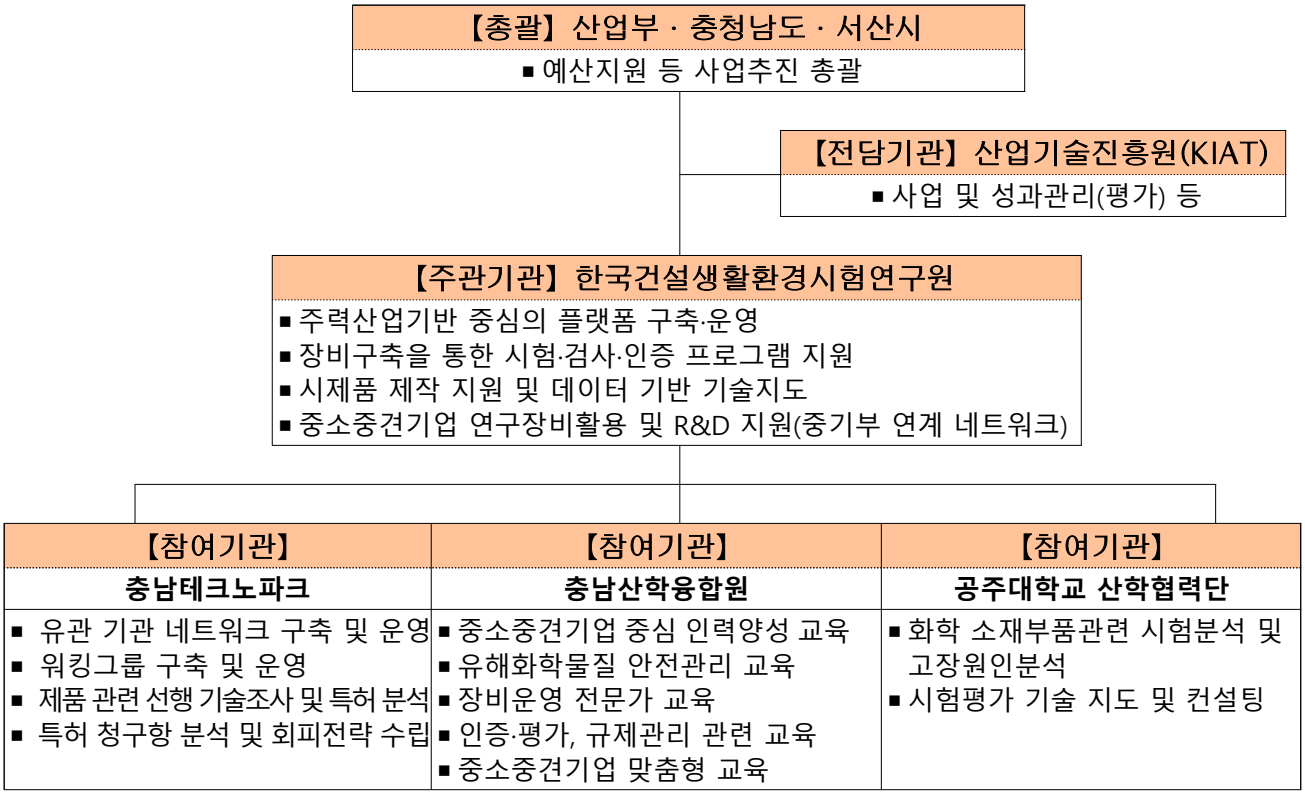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24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재정지원 종료)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기반구축) 주요장비 구축(~ '24. 9.)

○ (기술지원) 시험·인증·평가,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등(~ '24. 9.)

○ (인력양성) 화학물질 관리 및 장비운영 전문인력 양성(~ '24. 9.)

□ 홍보계획

○ 언론 보도를 통한 사업수행 내용 홍보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지원 수행 및 홍보

1-1-20 충남형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도 공모사업)

주관부처/부서	건설정책과	협조기관	-
담당자	문진호 주무관	연락처	041-635-4625

□ 추진배경

○ 기존 도시정책은 인구성장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 추진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원도심 도시문제 해결 및 정주환경 개선 도모

○ **국가 정책***에 맞춰 도 자체 공모사업 추진 및 도→시군 예산 지원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 국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 그동안 추진사항('17~'23)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공원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스마트 수경시설·ICT		비고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계	**106**	**58,338**	**36**	**35,196**	**25**	**11,230**	**35**	**6,612**	**10**	**5,300**	
2017년	12	5,730	5	3,900	3	1,230	4	600			
2018년	14	7,912	5	5,800	3	1,100	6	1,012			
2019년	27	17,146	6	9,646	6	3,000	10	2,000	5	2,500	
2020년	18	8,400	7	4,750	4	1,650	5	1,000	2	1,000	
2021년	12	5,750	4	3,200	3	1,550	5	1,000			
2022년	12	5,700	4	3,200	3	1,500	5	1,000			
2023년	11	7,700	5	4,700	3	1,200			3	1,800	

□ '24년 추진사항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선정결과(백만원)					비고 (조정비율)
			계	보조금	시군비	선정 시군	
4개분야	**10지구**	**10지구**	**5,700**	**1,710**	**3,990**	**천안2, 공주1, 논산1, 당진2, 금산2, 부여2**	
스마트 주차장	2	2	900	270	630	공주시(도시정책과)	
			900	270	630	금산군(군민안전과)	
스마트 상습정체 집중관리 솔루션	1	1	450	135	315	천안시(교통정책과)	
스마트 공원	2	2	450	135	315	논산시(산림공원과)	
			450	135	315	당진시(산림녹지과)	
스마트 ICT	5	5	630	189	441	천안시(교통정책과)	
			630	189	441	금산군(건설교통과)	
			450	135	315	부여군(도시건축과)	
			640	192	448	당진시(안전총괄과)	
			200	60	140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도민 편의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4개 분야’ 중심 추진

1) **스마트 주차장**: 기존 주차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편의성 확보 및 주차난 해소 도모(향후 주차데이터 공유 및 개방 예정)

* 차량 자동인식 검지센서, 주차장 공유시스템, WIFI, CCTV, 주차정보안내판 등

※ 당초 쌈지주차장(폐가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스마트 주차장으로 변경

2) **스마트 상습정체 집중관리 솔루션**: 전통시장 및 구도심, 시가지 등 불법주정차 빈발구간에 **상습정체 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단문·영상표출 전광판, 교통유입량 조절 서비스 등

3) **스마트 공원**: 도심지 공원에 **스마트기술*을 도입**,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기술 체험 도입으로 자율적 리빙랩 진행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공원 조성

* 스마트가로등, 지능형CCTV, 스마트벤치, 안심벨, 운동량 측정 체육시설 등

※ 당초 공원사업(신규 조성 등)에서 스마트 공원으로 변경

4) **스마트 ICT**: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있는 창의성 있는 **사업 제안(자율 주제)***

* 악취·소음·진동·하천 등 IoT 센서기반 서비스, 인공지능 재활용품 회수기,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 찾기 서비스, 센서 기반 도로 모니터링 서비스 등

※ 당초 교통사업(차량 및 보행자 안전환경 개선)에서 스마트 ICT로 변경

□ 앞으로 추진계획

○ 도 공모사업 지속 추진(기존사업 점검, 관리, 정산 등)

○ 각종 스마트 기술을 통한 도시 데이터 수집 및 지역별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분야 다양화 검토

1-1-21 수출하기 좋은 충남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투자통상정책관	협조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우장훈 주무관	연락처	041-635-3361

□ 추진배경

○ 투자유치·통상진흥 및 지방외교 교류 활성화 등 충남도정의 세계화

- 세계진출거점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출하기 좋은 충남 여건 조성

□ 현황(문제점) 진단

○ 수출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외연 확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필요

- **도내 420여개 중소기업 대상**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 및 대상국가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설치 필요 응답 75% 이상

❶ (필요성) **필요(75%) > 필요하며 단계적 확대(24.1%)** > 필요없음(1.25%)
❷ (설치국가) **미국(18.5%) > 중국(14.6%) > 서유럽(10.8%) > 일본(10.6%)**
- 설치도시 : 미국(LA),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 추진방향

○ **(기능 다변화)** 통상기능 + 투자유치 + 지역외교 등 다목적 추구

○ **(설치국가)** 7개소 운영

※ 5개소[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독일·일본] + 2개소[미국·중국] 추가설치 예정

○ **(운영방식)**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채용·운영·평가 등 직접 관리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운영주체)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 전략거점 마련

○ (설치형태) KOTRA 무역관 원루프 입주 또는 인근 개별 사무소

○ (설치규모) 2개소(미국, 중국) ※ 2024년 하반기 설치 예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해외사무소 5개소 운영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독일·일본)	○ 해외사무소 7개소 체재 구축 운영 (미국·중국 추가 설치)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출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한계	○ 수출 성약까지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외국자본 투자유치 및 공공외교 활성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4년 소요예산

○ 2024년 본예산 기존 5개소 운영비 16억원 외 **2개소(미국・중국) 추가 설치 및 운영비 7억원** 추가 소요(2024년 1회 추경 편성 예정)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예산	2024년 본예산	추가 소요예산			비고
		소계(a+b)	설치비(a)	운영비(b)	
2,300	1,600	700	270	430	

□ 추진체계

○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구축

□ 추진일정

구분	주 요 내 용	일정
1/4 분기	■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동의안 통과	2월
	■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계획 방침 결재	3월
2/4 분기	■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및 운영비 추경 예산 확보	5월
	■ 미국•중국 해외사무소장 선발	5-6월
3/4 분기	■ 미국•중국 해외사무소장 파견	7월
	■ 해외사무소 임차 및 법인등록 등 제반사항 준비	8월
4/4 분기	■ 미국•중국 해외사무소 개소	하반기

□ 홍보계획

○ 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및 해외사무소 홈페이지, 신문 지면, 전광판, 인터넷 배너, 수출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홍보

- 도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 등 안내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1-2-1 화재안전 취약 가구「안전한 집」구축

주관부처/부서	충남소방본부 / 예방안전과	협조기관	도내 16개 소방서
담당자	소방경 김선정	연락처	041-635-5594

□ 추진배경

○ 고령농가의 급증 및 독거노인 비율 확대에 따른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재산피해 저감 도모

○ 최근 급격한 연료비 상승에 따른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의 증가로 부주의 화재 증가 등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필요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분석

○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32건 발생되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95건(72%),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10건(8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 부주의 화재 및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의 초기 진화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피해의 예방 필요

□ 세부 추진 계획

○ (대 상) 총 480가구 / 소요예산 12,000천원(1EA 25,000원)
- 화목보일러 사용가구(9,850가구) 중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가구
- 소방, 지자체 및 지역기업의 기부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방 법)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설치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연계 추진, '24년도 100% 설치완료

□ 기대효과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보일러 과열, 주변 가연물 관리소홀 등 화재위험요인 상존 ○ 주변 환경 특성상 급격한 연소확대 야기	○ 화재확산 지연 등 초기 소화로 소방대 도착전까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확보

1-2-2 119외국어 통역 서비스 운영

주관부처/부서	119종합상황실	협조기관	홍성군가족센터 충남외국인 주민통합 지원 콜센터
담당자	소방위 변경미	연락처	041-635-5561

□ 추진배경

○ 도내 다문화 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119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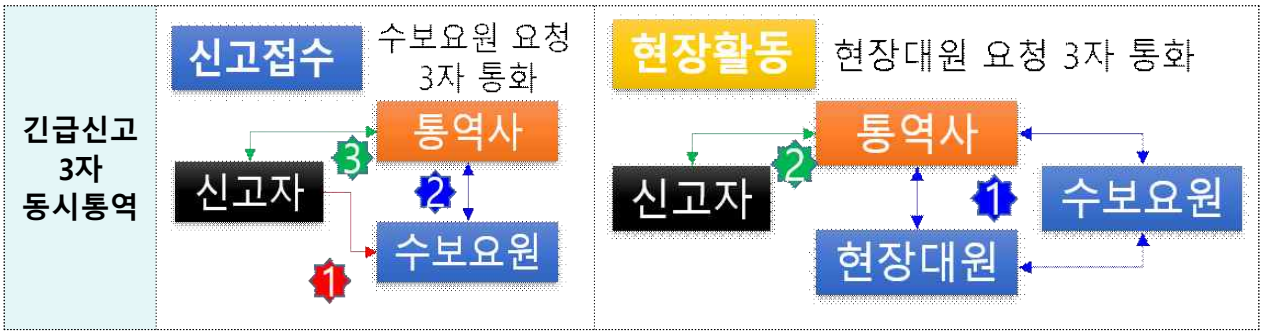
○ 외국인 신고 증가에 따른 신속한 상황처리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필요

* 최근 3년간 외국인 신고 현황(2021년도 665건, 2022년도 594건, 2023년 527건)

□ 추진내용

○ 119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에게 외국어 통역사와 3자 간 음성통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3자 외국어 통역(신고자 ↔ 119상황요원 ↔ 외국어 통역사(봉사자) 간 통화)



○ 자체 통역 서비스제공을 위한 119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29명)

○ 홍성군가족센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협업 강화(간담회 연 2회)

○ 119 외국어 통역 봉사자 인센티브 및 위상 제고

- 통역봉사자 통역 수당 지급(통화 건당 2만원) 및 도지사 표창 수여(2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외국인 통역서비스 제공**(18명, 10개 언어)** - 통역봉사자 활용 서비스 24H 제공 ※ 통역봉사자는 평소 일상생활 종사(실시간 연결 곤란)	○ 외국인 통역 서비스 제공**(29명, 16개 언어)** - (지속) 통역봉사자 활용 서비스 24H 제공(14명 8개 언어) - (신규) 충남외국어주민통합콜센터 통역사 활용 서비스 제공 확대(15명, 15개 언어)

□ 향후 계획

○ 홍성군 가족센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간담회(연 2회)

○ 외국인 119 신고방법 홍보물(리플릿) 제작·배부(6월)

<기관별 통역서비스 운영 실적>

연도별	총계	통역봉사자	충남외국인 주민지원콜센터	BBB-KOREA	한국관광공사	다누리콜센터
총 계	**485**	234	24	136	60	31
2023년도	**70**	29	24	11	0	6
2022년도	**70**	30	-	28	7	5
2021년도	**142**	65	-	56	15	6
2020년도	**127**	85	-	16	13	13
2019년도	**76**	25	-	25	25	1

1-2-3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설치 운영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경로보훈과	협조기관	충남 15개 시·군
담당자	이나빈 주무관	연락처	041-635-4213

□ 추진배경

○ 고령·독거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65,790천원(도비129,507, 시군비 302,183)

○ 사업대상 : 공동생활홈 90개소(이용인원 721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 (주·야간형)연 7,500천원, (주간형)연 3,000천원

□ 추진현황

○ '24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계획 수립(1월)

○ 신규 공동생활홈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2~3월)

- 신규 4곳 추가 발굴, 예산·행정지원 등 검토

□ 기대효과

○ 독거노인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

○ 숙박 공간 제공, 공동취사 등 공동체 생활로 응급상황 긴급대처

□ 추진체계

계획수립	수요조사	공동생활홈 발굴	적합성 판단 및 선정	사업추진	운영점검
도	도	시군, 읍면동	도	도, 시군	도, 시군

□ 향후계획

○ 운영 점검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속 확대 추진

1-2-4 노인·청소년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교통정책과	협조기관	국토부(대광위), 충남도 15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	현지원 주무관	연락처	041-635-4575
소요예산	24,000백만원		

□ 추진배경

○ (교통복지 실현)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수혜형평성 유지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주용자 및 교통약자에게 버스무임승차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현황

○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작(75세 이상 노인): '19. 7. 1.

- 1차 사업 확대(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추가): '20. 7. 1.
- 2차 사업 확대(국가유공자 수권유족 추가): '21. 7. 1.유족)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시작(6세~18세): '22. 4. 1.

□ 추진방향

○ 사업대상: 충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노인 등* 교통약자 및 어린이·청소년**

* 만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어린이·청소년(만6세~만18세)

○ 사업내용: 시내·농어촌버스 등 할인 및 무임 이용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보훈대상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자 충남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전액 지원

○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주요 내용: 충남 어린이 청소년 시내·농어촌 이용요금 지원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발급자 대상 전월 이용실적을 산정하여 익월 환급

- 지원범위

❶ 충남/대전 시내·마을버스 초승요금 환급(1일 3회 한정)

❷ 충남/대전버스↔수도권 1호선 전철환승시 환승한 교통수단 기본요금 환급

❸ 충남/대전버스↔타시도 버스 환승시 환승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환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대중교통 이용 저조	○ 마일리지 지급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진 기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한계	○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 수혜 형평성 유지 ○ 가계교통비 부담 완화 기여

□ '24년 소요예산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 손실보상 지원: 24,000백만원(국[복권기금] 5,243, 도 6,757, 시군 12,000)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 손실보상 지원: 2,700백만원(도 1,350, 시군 1,350)

- 정산 사무 위탁(한국교통안전공단): 7,574백만원(도 3,787, 시군 3,787)

□ 추진체계

○ 주관기관: 충청남도

❶ 충남형 교통카드 및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운영 방안 마련

❷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등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

○ 협업기관

소속	주요 담당업무
시·군청	▪ 신청 상담 및 안내 ▪ 교통카드 신청 및 접수
유지용역 업체	▪ 앱 및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교통카드 발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알뜰교통카드 정책 총괄, 관계 법령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 마일리지 정산 및 지급

□ 추진일정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운영 용역 추진: ~'24. 12.

- 홈페이지 및 앱 기능개선 및 운영 관리, 마일리지 지급·정산 관리 및 시스템 인프라 운영 지원, 콜센터 운영 전반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방식 개선추진

- (현행) 마일리지 지급 → (변경) 무료탑승

□ 홍보계획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홍보 추진

- 15개 시·군 등에 전단지 및 리플릿 제작·배부 추진

1-2-5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주관기관/부서	물관리정책과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김예린 주무관	연락처	041-635-4480

□ 추진배경

○ 지하수를 원수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소외지역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도민의 물 복지 실현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대부분이 고령화(대다수 주민 노인 인구)로 수용가에서는 급수설치 비용문제로 인한 이용 기피, 소규모 수도시설의 저렴한 이용료(전기료) 선호

□ 추진방향

○ 도비 보조를 통해 급·배수관로 일부를 수도사업자가 설치 지원토록 하여 마을주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지방상수도 소외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2023. 11. : 2024년 사업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통보
○ 2024. 03. : 사업비 교부
○ 2024. 04. ~ 11. : 사업추진 및 준공 * 시군비 부담금 예산확보
○ 2024. 12. : 사업성과 보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수용가에 상수도가 보급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보급률 저조(비용 부담 원인)	○ 실질적인 상수도 보급률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급수시설 설치비용 및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상수도 이용 기피 및 오염위험도 높은 지하수 이용	○ 안전한 상수도 보급을 통해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4년 소요예산

○ 보령시 등 4개 시군 5개 지구 2,900백만원(도비 870, 시군비 2,030)

□ 추진체계

○ 주관기관(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보조사업 계획 시달, 보조대상 시군 선정 및 예산 지원
- 성과보고회 개최 및 사업성과 분석

○ 협업기관(15개 시군)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지역 사업홍보
-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신청
- 주민만족도 조사 및 시설유지관리

□ 추진일정

○ 2024. 03. : 사업비 교부

○ 2024. 04. ~ 11. : 사업추진 및 준공 * 시군비 부담금 예산확보

○ 2024. 12. : 사업성과 보고

□ 홍보계획

○ 도→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을 이장 순으로 사업계획을 알려 사업신청 수요접수 등 사업 홍보

1-2-6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검진 시행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협조기관	4개 의료원, 15개 시군
담당자	이정훈 주무관	연락처	041-635-4305

□ 추진배경

○ 취약계층 노인성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성 질병 조기 발견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현황(문제점) 진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자 대비 건강검진 포함 항목이 적고,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 검진이 어려움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대상: 도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기준

- 건강검진 연 1회 지원
- 검진을 지원받은 사람은 검진 수검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기본검진 + 선택검진 1종

- 기본검진 (혈액검사, X-ray검사, 당뇨검사, 고지혈증검사)
- 선택검진 (갑상선, CT(머리, 흉부, 경추, 요추), 경동맥, 복부초음파, 종양표지자 4종, 골밀도)

○ 수행기관: 충남 4개 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 성과목표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자 약 400명 건강검진 지원

○ 기대효과

- 의료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건강검진을 통한 의료 혜택 제공
-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등 생활습관성 질환 조기 발견
- 건강검진 대상자별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치료연계

□ '24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00천원

- (검진비) 120천원 * 100명 * 의료원 4개소 = 48,000천원
- (홍보비 등) 500천원 * 의료원 4개소 = 2,000천원

□ 추진체계

도	시군	의료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 사업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사업 안내 및 홍보 ▪ 의료원에 대상자 연계	▪ 사업대상자 발굴 ▪ 검진 홍보 및 안내 ▪ 검진 실시 ▪ 검진 결과문 발송

□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사업신청 및 사업비 교부												
사업수행												
분기보고												
결과보고 및 정산												

□ 홍보계획

○ 충남 4개 의료원, 15개 시군청 및 보건소에 홍보 공문발송 및 리플릿 배부



1-2-7 청소년통합지원체계(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주관기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협조기관	여성가족부
담당자	이용호 주무관	연락처	041-635-4985

□ 추진배경

○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2,625,026천원(국비 1,312,513, 도비285,748, 시군비 1,026,765)

○ (사업내용)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학업・자립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

○ (사업시행) (재)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5 시·군

□ '23년 추진실적

○ (위기 청소년 지원) 긴급구조 46명 및 지원서비스 400건

○ (청소년안전망 자문기구 운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4회

○ (청소년안전망 공조사업) 협약기관 정비 및 관리 95개소(신규 협약 5개 기관), 협약기관과의 간담회 9회

○ (상담복지사업 전달체계강화) 사업설명회 1회, 컨설팅 15개소

○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사 2명 위촉

□ 현황(문제점) 진단

○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채용 공고에 응시자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채용형태, 급여 등이 타시설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 긴급구조차량의 노후화(2006년식) 및 5등급 운행제한으로 2부제에 따라야 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운행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청소년안전망 자문기구 운영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4회

○ 청소년안전망 공조사업 :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 상담복지사업 전달체계강화 : 사업설명회 1회, 컨설팅: 15개소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서비스지원 : 상시운영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 총회 1회, 워크숍 1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위기 변화도(64.5%)	65%
○ 청소년안전망 고위기청소년 개입도(40.7%)	50%
○ 수혜청소년 만족도(90%)	95%
○ 청소년1인당 지원서비수 제공 수(25건)	26건

○ 기대효과

- 청소년안전망 필수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청소년안전망 공공성 강화 정책 실현
-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로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능 제고
- 위기(가능)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긴급구조 및 보호하여 1차 위험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2차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심리·신체적 안전 확보

□ 추진일정

세부사업	일정	비고
청소년복지심위위원회	반기별 1회(총 1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총 4회)	
상담복지사업 설명회	2월 중(1회)	
상담복지사업 컨설팅 및 현장점검	15개소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	연중 1회	

1-2-8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을 통한 자립성취율 향상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여성가족정책관	협조기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향우 주무관	연락처	041-635-4994

□ 추진배경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진로진학박람회 및 모의취업캠프 등을 통한 학업 복귀, 사회진입 기회 제공

□ 현황(문제점) 진단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규교육 과정 학생과 차별 없는 지원 마련 필요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따른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

□ 추진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사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회의

○ 대안교육기관 및 시·군 담당자 세상소통카드 설명회 개최

○ 검정고시장 연합 캠페인 (세상소통카드 등 홍보)

○ 15개 시·군 현장점검 및 사업성과별 컨설팅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 및 모의취업캠프 운영

○ 현장목소리 청취를 위한 도,시·군 간담회 운영

○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평가)회의 운영

○ 드론파일럿양성과정 등 미래산업 관련 사업추진(교육협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자립성취율(학업, 취업 등) 52.6%	○ 자립성취율(학업, 취업 등) 64.9%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유도
- 은둔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 복귀, 사회 진입 지원
- 교육, 진로, 취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교육 과정 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24년 소요예산

○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1,994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 268백만원

○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진로진학박람회, 체험공간운영 등 : 756백만원

□ 추진체계

○ 道 및 시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총괄 및 지도감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추진

□ 추진일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 연중

□ 홍보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청플레이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연중 지속 홍보

1-2-9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관부처/부서	충남소방본부 / 예방안전과	협조기관	도내 16개 소방서
담당자	소방교 오주호	연락처	041-635-5593

□ 추진배경

○ **(화재피해) 전국** 10년간('14년~'23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18.3%(연평균),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5.7%(연평균)** 발생

- **충남의 주택화재 발생 비율은 23.1%, 사망자는 44.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필요성이 매우 큼

구분	화재 발생 현황			사망자 발생 현황		
	전체화재	주택화재	주택화재 비율	전체화재	주택화재	주택화재 비율
충남	24,494건	5,670건	**23.1 %**	187명	83명	**44.4 %**
전국	41,050건	7,522건	**18.3 %**	315명	144명	**45.7 %**

□ 현황(문제점) 진단

○ **(보급완료) 취약계층 중 미보급 가구인 18.3%에 대한 보급 완료추진**

○ **(노인가구) 주택 거주 고령층 화재 취약,** 인명피해 계속 발생

※ "노부부, 왜 못 피했나?"... 잇따르는 노인 화재 사망 [KBS 9시뉴스, 2024. 1. 22.]

○ **(사후관리) 취약계층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사후관리** 필요

○ **(효과분석) 정책추진·홍보**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효과 분석 필요

□ 추진방향 ⇨ 3개 분야 11개 추진 등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취약계층 무상보급 및 관리**

- **노인 가구**(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점 보급**

○ **자율설치 문화확산**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설치를 위한 도민 참여 유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 176,950가구 중 144,607가구(81.7%)**

* **(기초수급)** 96.9%, **(독거노인)** 81.1%, **(장애인)** 75.3%, **(한부모)** 79.9%

2023년 추진사항		2024년 추진계획
▸화재안전취약자 등 **12,277 가구**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실태조사 신뢰성** 확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효과 자체 분석**	⇨	▸**노인가구 집중 보급 등 8,200 가구** 보급 ▸**홍보 방식 보완**, 자율설치 유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활용** 사후관리 체계화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및 관리(신규 및 교체 보급 병행)

※ **'24년 예산확보(도비) 3.8억원 / 총 8,200가구**(소화기 8,200개, 감지기 16,400개) 보급

○ 보급기반 마련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개정 요청

기존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변경** **주택 전체로 확대 지원**

※ 개정 시·군 7개, 미개정 시·군 8개(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설치를 위한 도민 참여 유도

- 사회공헌사업 기업체 발굴 지정기탁(기부)으로 설치율 확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단(의용소방대, 이장단) 활용 설치 추진
- **피해**사례, **쉬운** 설치(원스톱 지원센터), **이웃**의 설치 사례 홍보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관리」** 활용, 사후관리 체계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목표 '23년 대비 4.7%p 상향**

【목표】 2022년 74.8% (132,330가구) ⇨ **2023년 81.7%** (144,607가구) ⇨ **2024년 86.4%** (152,807가구)

○ 기대효과

- 최근 5년간 주택화재는 총 2,772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24.2%이며 '23년에는 354건으로 연평균(504건)보다 150건(29.8%) 감소함
- 최근 5년간 주택화재의 사망자 발생률은 55.7%(54명)이며, '23년에는 3명으로 연평균(10.8명)보다 7.8명(20.6%) 감소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보급기반 마련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개정 요청

기존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변경** **주택 전체로 확대 지원**

※ 개정 시·군 7개, 미개정 시·군 8개(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 '24년 소요예산

○ 도비: **3억 8,000만원**(소화기 8,20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6,800개 구입)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구매(4~5월)[본부 일괄 3자 단가(조달)] ⇢ 배부(5월 예정)[본부 → 각 소방서] ⇢ 보급(11월까지)[각 소방서 보급 추진]

○ **(보급순위)** 기초수급 ⇢ 독거노인 ⇢ 반지하주택 ⇢ 장애인 ⇢ 한부모

○ **(구입방법)** 본부에서 일괄 3자 단가(조달) 구매 후 각 소방관서 보급

□ 추진일정

○ **(보급기간)** '24. 4. 1. ~ 11. 30.(8개월)

○ **(설치방법)** 각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단 및 봉사단체 등 활용

○ **(보급대상)** 화재 취약계층 중 미보급 대상 8,200가구

□ 홍보계획

○ 홍보콘텐츠 활용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 집중 홍보**

- 홍보콘텐츠 제작·활용 지역 홍보인프라 및 다매체 등 중점 홍보

○ 국민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국민참여·공감에 특화된 홍보

- 본부 및 소방서 유튜브 채널 활용 「화재경보기 설치하기」 캠페인
-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사례 관련 SNS 게시 및 보도화

※ TV·라디오방송매체 보도자료 배포, SNS 영상·사진, 실제사고 당사자 인터뷰 등

○ **피해**사례, **쉬운** 설치(원스톱 지원센터), **이웃**의 설치 사례 홍보

1-2-10 카카오톡 실시간 구급상담 서비스 운영

주관부처/부서	119종합상황실	협조기관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도내 16개 소방서
담당자	소방위 변경미	연락처	041-635-5561

□ 추진배경

○ 의사소통이 불편한 신고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급상담서비스 제공으로 119신고·상담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추진내용

○ 카카오톡 활용 청각·언어장애인, 임산부 대상 구급상담 서비스 제공

- 실시간 구급상담 서비스 운영(24시간 상시 운영)
- 계절별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응급처치법 카드뉴스 제작(분기별)
- 카카오톡 채널 친구 등록현황 및 구급상담 실적 관리(매월)

※ 도내 임산부·장애인 등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963명**('23.12.31.기준)

○ 상담대상(유형)별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

- (청각·언어 장애인) 응급처치법, 계절별 질병정보 메시지 전송
- (임산부)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등록신청 방법 및 응급처치법 안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각·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 문제로 전화 문의를 통한 구급 상담 곤란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등록신청 시 보건소·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 의사소통이 불편한 신고자도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구급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 별도의 방문없이 카톡 1:1채팅을 통해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등록신청 가능

*2023년 총 259건 상담(임산부 200, 병·의원 안내 8, 질병상담 24, 응급처치 8, 기타 19)

□ 향후계획

○ 시·군별 소셜네트워크(맘카페 등) 활용 카드뉴스 제작 홍보(연중)

1-2-11 119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운영

주관부처/부서	119종합상황실	협조기관	홍성군가족센터 충남외국인 주민통합 지원 콜센터
담당자	소방위 변경미	연락처	041-635-5561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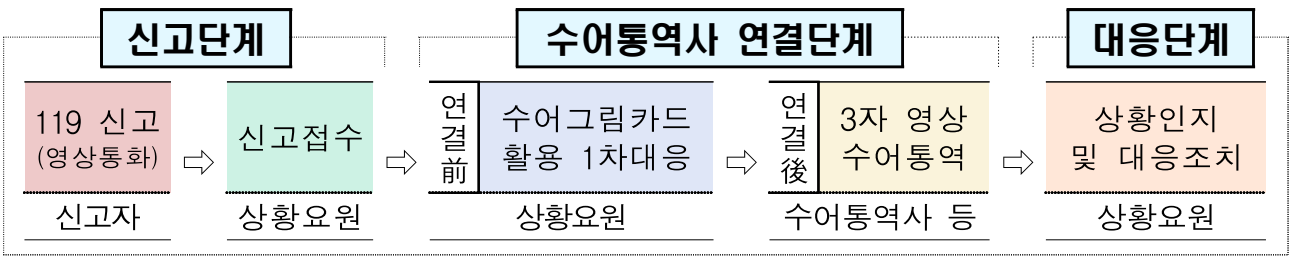
○ 청각·언어장애인들의 119 신고는 직접 신고보다 대부분 가족 ·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발생

* 최근 3년 청각·언어 장애인 관련 119 신고 건수: (21년 60건, 22년 65건, **23년 62건**)

□ 추진내용

○ 119 신고가 어려운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수어 통역사와 3자간 영상통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 **(추진대상)** 도내 청각 · 언어장애인 ※ '23년 말 기준 24,248명
- **(추진내용)** 수어 그림카드,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한 수어통역 신고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3자 영상 수어통역(신고자 ↔ 119상황요원 ↔ 수어 통역사(봉사자) 간 영상통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각·언어장애인의 119 신고는 대부분 가족·지인에 의해 이루어져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 곤란	○ 청각·언어장애인 직접 신고로 출동 지령 시간 단축, 현장 상황 파악 용이 ○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신고 편의성 제공

□ 향후 계획

○ 청각·언어 장애인 신고자(가족 포함) 안내 문자 발송 홍보(연 2회)

○ 청각·언어장애 기관·단체 이용 안내 홍보문서 및 홍보물 발송(연 2회)

○ 119상황요원 기초 수어통역 및 시스템 사용 교육훈련 시행(연 2회)

1-2-12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감염병관리과	협조기관	질병관리청
담당자	임윤주	연락처	041-635-4392

□ 추진배경

○ 메르스 및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시급

○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신속대응과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 등 방역 기반체계 강화

□ 현황(문제점) 진단

○ 자부담 비용 부담 증가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순기 지연 우려

□ 추진방향

○ 중증 환자의 경우 이송 중 환자상태 악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권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위　　치 :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00㎡, 연면적 31,902㎡(지하6층, 지상6층 규모)

○ 시설종류 : 의료기관(감염병전문병원)

○ 총사업비 : 409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

※ 자부담(순천향대천안병원) 369억원 별도

□ 추진일정

○ '24. 4. ~ '24. 5. : 중간설계 변경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 '24. 6. ~ '24. 10. : KDI/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4.11. ~ '25. 2. : 실시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재부 심의

○ '25. 3. ~ '25. 11. : 입찰진행·공사발주 협의(질병청·조달청) 및 착공준비

○ '25.12. ~ '28. 5. : 착공('25.12.) 및 준공('28.2.), 시운전(3개월) 및 개원('28.5.)

1-2-13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장애인복지과	협조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황진호 주무관	연락처	041-635-2634

□ 추진배경

○ 발달·중증 장애인 및 가족의 휴식(힐링) 인프라 절대 부족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 갈등 발생

○ 장애인 및 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및 강화

□ 현황(문제점) 진단

○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및 운영준비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설계 변경(실외 물놀이장의 실내화 등)을 시행하여 착공 시기 지연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힐링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및 설계변경 : ’23. 4.~10.

○ 총사업비 1차 조정 및 실시설계 완료 : ’24. 2.

○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24. 3.~4.

□ ’24년 소요예산

○ 2024년 본예산 없음(이월된 계속비로 24년 집행액 충당 가능)

□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2차 조정 및 용역사 입찰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4. 5.~10.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4. 11.

○ 위탁법인 선정 : ’25. 8.

○ 준공 및 개원 : ’26. 5.

1-2-14 중증장애인 119구급 통원서비스 제공

주관기관/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협조기관	119종합상황실 보건소・요양협회
담당자	소방경 오상훈	연락처	041-635-5733
소요예산	('23년) 000백만, ('24년) 000백만		

□ 추진배경

○ 교통안전약자 배려와 사회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시행('21. 2. ~)

□ 추진대상: 도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

○ 이동 중 낙상위험 등으로 사설구급차 이용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 중증도가 심하고 교통약자로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할 잠재적 응급환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병원이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추진기간) '23. 1. 1. ~ 12. 31.

○ (이용횟수) 총 1,790회 ('23.12.31. 기준, 단위: 회)

총계	와상 장애	뇌병변	거동 불가	지체 장애	뇌출혈	전신 마비	파킨슨	시각 장애	뇌경색	지적 장애	기타*
1,790	499	144	120	85	126	11	372	48	228	70	87

* 기타: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 향후 계획

○ (119종합상황실) 중증장애인 정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수시 등록

○ (소방서) 중증장애인 이송 시 서비스 등록 및 이용방법 안내관리(연중)

1-2-15 자살률 중위권 도약 기반마련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건강증진식품과	협조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지선 주무관	연락처	041-635-4333

□ 추진배경

○ 우리 도 자살률(2022년도 기준)은 33.2명 으로 전국 평균 25.2명 보다 8명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

○ 충남의 높은 자살률은 충남 이미지와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

-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자살률 중위권 도약 기반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충남) 자살률 33.2명**, 자살자 수 701명

○ **(65세이상)** 자살률 51.2명, 자살자수 219명(남 152, 여 67, 전체의 31.2%)

➠ 전년대비 자살률 **충남 1명↑, 65세 이상 2.2명↓**

※ 우리도 자살현황 세부분석

구분	내용
성별	남성 48.3명, 여성 17.3명 / 남성 2.8배 높음
동기	정신과적(33.2%) > 경제생활(26.2) > 육체적 질병(19.7)順
수단	목맴(51.4%) > 가스중독(16.5) > 추락(13.4) > 농약중독(10.1)順
월별	3월, 4월, 6월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 11월, 2월 낮음
연령	40~60대 자살자 비중이 높고, 전년대비 10대동일 20대 감소

<문제점>

○ '22년 충청남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 정신건강지표 역순위 랭킹

- 우울증 유병률 4.8% (1위/ 전국 평균 3.5%) , 우울감 경험률 7.9% (2위/ 전국 평균 6.8%)

○ 장기간 높은 자살률(17~20년 1위)로 자살 유족 등 자살고위험군 다수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단기간 내 자살률 감소 한계

□ 그동안의 노력

○ 자살률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 설치, 맞춤형 시책 추진 등 전방위적 노력 전개

- **(조직확충)**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 자살예방 전담팀 신설(’19.1)
- **(협업강화)** 도·시군·유관기관(경찰, 교육청 등)과의 협업 추진으로 자살예방기능 강화

  ※ 협업과제 : (’19년) 411개→(’20년) 422개→(’21년) 469개→(’22) 463개→(’23년) 515개
- **(맞춤관리)** 멘토링 사업, 위해요인 차단(농약보관함, 가스보관함 설치 등), 생명 존중약국 지정·운영 등 우리 道 특성을 반영한 시책 발굴·추진
- **(연령별집중관리)** 연령별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사업 추진

  ▲**(청 년)** 청년 1인 가구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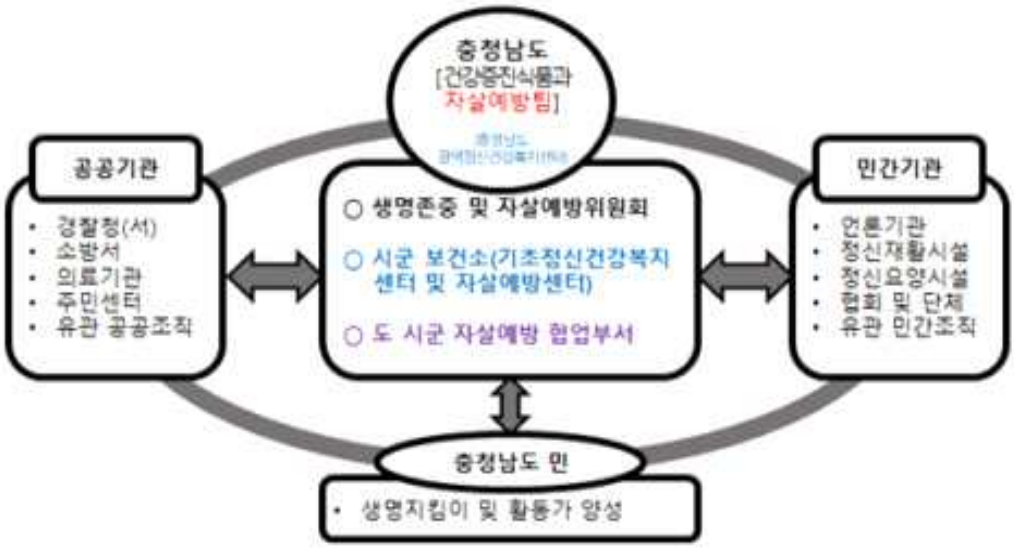
  ▲**(중장년)** 사업장 중심 정신건강검진 상담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

  ▲**(노 인)** 멘토링·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통해 고위험군 발굴 등
- **(생명존중 안심마을)** 지역네트워크 기반을 연계·활용하여 자살을 예방하고자 시범운영(청양군)

□ ’24년 소요예산

○ 예산액: 6,412,646천원

□ 추진체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26년까지 자살률 23.6명으로 낮춰 전국 중위권 도약 발판 마련

* **(`24년) 28.4명 → (`25년) 26명 ⇢ (`26년) 23.6명**

□ 향후계획

○ 자살률 감소를 위해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7개 세부사업을 선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연중)

1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❶ 생명지킴이 교육 및 양성 ❷ 지역자살 대응역량강화 ❸ 자살위험 환경개선 ❹ 자살예방 홍보및 문화조성	❶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❷ 고위험군 지지체계강화 ❸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강화	❶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추진 ❷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❸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 **정신건강관리망** 본격 가동을 통한 **자가검진 체계구축** 등 자살 잠재 위험군 적극 발굴(연중)

○ **응급의료기관 및 민간단체 간담회**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4월, 5월)

○ 충남형 마음치유 **힐링캠프 운영** 추진 (연중)

○ 충남 자살률 중위권 도약 기반 마련 **자살예방 관계자 회의**(5월)

○ 도 시군 전부서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협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8월)

○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9월)

□ 홍보계획

○ 자살예방 상담주간 **109집중 홍보주간**(온,오프라인 영상) 운영(~4월)

○ **충남형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팸플릿,홈페이지 게시)(연중)

○ **생명사랑주간** 개최 **홍보물 배포** 등 (연중)

1-2-16 학교 먹는 물 안전성 강화

주관부처/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협조기관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	김고은 연구사	연락처	041-635-6885

□ 추진배경

○ 2017년부터 학교 먹는 물의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 공동 협업 추진

□ 현황(문제점) 진단

○ 2023년 태안·홍성지역, 지하수 음용학교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부적합시설의 경우 폐쇄 및 상수도 인입으로 먹는 물 안전성 강화

□ 추진방향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학교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찾아가는 수질검사로 물복지 향상 및 부적합 물 관리방안 대면 설명으로 먹는 물 궁금증 해결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대상) 태안·홍성군 소재 학교 70곳, 도내 지하수 음용 학교 22곳

○ (부적합 조치) 음용 중단을 신속히 통보 ➜ 소독 등 시설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 ➜ 적합 판정 시 먹는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음용기기 적정 관리 유도로 음용 부적합 음용기기 0% 달성

○ 기대효과 : 학교 먹는 물 안전성 평가를 통해 수질 적정 관리 및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

□ '24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학교 선정 및 채수 시 현장 안내

○ (보건환경연구원) 직접 시료 채수·분석·결과 통보 및 부적합 처리 안내

□ 추진일정

○ (1분기) ①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계획 수립(92개교, 1,800건),
② 먹는 물 시료 채수·분석·결과 통보(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2분기) ① 지하수 음용학교 정밀 수질검사(우라늄, 라돈 추가 검사),
② 먹는 물 시료 채수·분석·결과 통보(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3,4분기) 먹는 물 시료 채수·분석·결과 통보(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홍보계획

○ (언론보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로 안전성 강화(3/14), 17개 일간지 보도

1-2-17 도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

주관부처/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협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황남희 주무관	연락처	041-635-2151

□ 추진배경

○ 디지털이 인간을 보조하는 시대를 넘어, 디지털 그 자체로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 필요

□ 추진방향

○ 상설배움터 및 체험존을 활용하여 집합교육과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 교육 수요계층 단체들과 협업하여 방문교육 및 계층별 교육 제공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상설배움터 및 체험존, 파견교육을 통한 디지털 실생활 교육 추진

- 단순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과 실시간 디지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상설배움터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교육생 역량 향상도 14.5%, 교육 만족도 92점 목표

* 역량 향상도 : (교육 후 디지털 역량점수 – 교육 전 디지털 역량점수) / 14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발생	○ 도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

□ '24년 소요예산

○ 1,374백만원(국비 1,314, 도비 60)

□ 추진일정

○ 조달청 사업 공고 : 2024년 5월

○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 : 2024년 6월 ~ 12월

□ 홍보계획

○ 협력 및 협업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생 모집 홍보

○ 도 및 15개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배너 게재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1-3-1 행정혁신 동력 강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정책기획관실	협조기관	전 부서·공공기관
담당자	양다혜 주무관	연락처	041-635-3135

□ 추진배경

○ 단일분야의 방안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고도화** 되는 실정임

○ 부서 간 **칸막이 해소**와 도정현안 등 실질적 과제 중심의 **구체적 협업장치**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실무중심' 행정협업 역량 제고**

- 업무 추진 과정별로 협업장치를 매칭하여 협업 필요성 및 활용 역량 제고

□ 세부 추진사항

○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한 '협업 동아리' 신설**

- (목 적) 협업 필요성이 명확한 도정 시책 추진 지원 및 지식행정 활성화
- (대 상) 동아리 구성을 희망하는 도, 시군 직원 및 민간인
- (운영규모) 행정협업 동아리 4개(지적, 예산·감사, 농업, 혁신 분야)
- (운영일정)

2월		→	3월 ~ 10월		→	11월	
주관부서	■ 운영계획 수립 ■ 동아리 심사·선정		주관부서	■ 동아리 확정 ■ 활동 점검 및 활동비 지급(2개월 마다)		주관부서	■ 경진대회 개최 ■ 우수동아리 포상 검토(별도 추진)
동아리	■ 활동 계획서 제출		동아리	■ 활동 결과 제출		동아리	■ 성과보고서 제출

- (지원사항) 활동비(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강사수당 등) 및 경비(급량비)

※ 예산과목 : 행정혁신 – 직무역량강화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201-01)
행정혁신 – 혁신 관리운영 - 포상금 – 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303-01)

- (기대효과) 동아리 연구과제 성과 등 구체적 협업 우수사례 발굴

○ **‘협업 이음터’ 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협업 대상 탐색 시, 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폭넓은 협업 가능 자원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방 매칭 가능

- (운영방식) 수요 등록 → 관심기관 답글 → 상호협의 → 매칭 및 협업

- (운영계획) 등록 과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도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사업담당자 검토 및 의견제시 요청

  * 협업 이음터 매니저(도 및 시군, 기관별 1인)를 통해 등록 과제 관리

○ **협업 일상화를 위한 협업포인트 제도 지속 추진**

- 협업 장려를 위해, 우수 활동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 협업 포인트 활용 우수자 반기별 5명 선정(총 1,000천원 지급)

○ **‘협업SOS’ 애로사항 적극 조정·해결 지원**

- (신청대상) 협업 부서·기관 간 어려움이 발생하여 진행 과정에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

- (지원사항)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역할조정 및 이견 중재 지원

- (운영방법)

협업 지원과제 신청	⇨	협업 지원 협의·조정	⇨	협업 지원과제 추진 및 점검
협업주관부서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 협업부서

* 협업책임관: 기획조정실장/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협의·조정 업무 담당(규정 제46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협업의 과정 자체를 단순히 부가적인 업무의 증가 요인으로 인식 ○ 협업 가능 사업, 대상, 방법 등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	○ 사업의 모든 추진 과정에서 협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실무와 접목 ○ 협업 동아리, 협업이음터, 협업SOS 등으로 실질적 과제중심 협업성과 도출 가능

□ 홍보계획(일정)

○ 충남도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관리 : ~ ‘24. 9월

○ 우수 협업 동아리 평가 및 포상 : ‘24. 11월

1-3-2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공모

주관부서	새마을공동체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
담당자	강보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3471

□ 추진배경

○ 저출산에 따른 인구성장 감소, 지방소멸 및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등으로 빈집 증가와 함께 유휴·저활용 국·공유재산이 전국에 산재

- 공공 유휴·저활용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필요

※ 행안부「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균특-지역자율계정)

□ 추진현황

○ (2019) 청양혁신플랫폼 와유 준공(2021. 8.) 및 개관식(2021.11)

- 구 대성체육관 신축, 주민공유회의실, 공유주방, 주민리빙랩 운영 등

○ (2020) 서천군 '더(The)느림 달팽이 마을회관' 준공('21. 10.) 및 개관('22.. 3 예정)

- 한산면 유림회관 리모델링 및 신축(공유회의실, 공유주방, 게스트하우스 등)

○ (2021) 당진시 '주민소통 오아시스' 준공('22. 12.) 및 개관('23. 4.)

- 고대면사무소 창고 리모델링 및 증축(주민공유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 (2022) 공주시 청년 지역정착 및 공동체 회복방안 조사연구('22. 8. ~ 12.)

- 읍면동 지역을 구분하여 조사·연구 추진(청년 필요시설 위주의 발굴)

(2022) 서천군 '장항열정용광로' 준공('23. 12.) 및 개관('24. 2.)

- 장항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혁신라운지, 공유오피스,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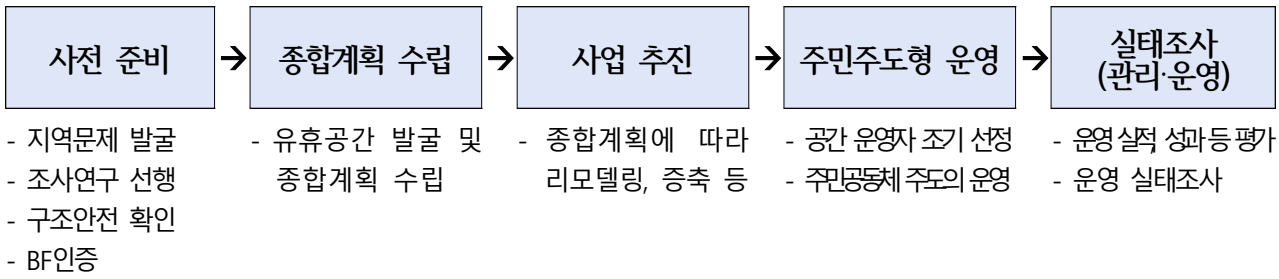
□ 현황(문제점) 진단

○ 사업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공간에 대한 운영을 문제 해결 주체인 주민(민간)에게 맡김으로써 생기는 문제로(운영 능력 부족), 시군 신청 저조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공공이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 추진체계



1-3-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균형발전정책과	협조기관	행안부
담당자	강성민 주무관	연락처	041-635-2913
소요예산	('24년) 205백만		

□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화 극복을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충청권 초광역협력 추진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안정적으로 구축

○ 「국토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초광역화 추진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국토기본법) 제6조, 제12조의2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그 동안 추진현황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23.1월)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충청시대 선포식('23.11월)

○ 가칭)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마련 및 행정예고('24.1~2월)

○ 가칭)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의회 의결('24.3월)

□ 향후계획

○ 가칭)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행안부 승인('24.5월)

○ 충청권 4개 시·도 - 중앙부처 간 협약 추진('24.6월)

○ 가칭)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24. 하반기)

□ 기대효과

○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방시대 개막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 도로·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으로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 조기 구축

1-3-4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데이터담당관	협조기관	15개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	신형섭 주무관	연락처	041-635-3204
소요예산	('23년) 1,000백만, ('24년) 1,000백만		

□ 추진배경

○ 2022년 전국 최초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활용 경험

-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데이터를 공동구매·활용으로 개선
- 산하 공공기관 포함하여 활용 극대화 ('23년 도·시군 등 38여건 활용)

□ 추진방향

○ 도와 시·군이 민간데이터(카드소비·신용부채·유동인구 등)를 공동 구매하고, 이를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에 탑재하여 공동 활용

※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일부 데이터셋 사용 제한)까지 공동 이용 추진

○ 도-시·군 간 민간데이터 활용 협업분석 과제를 확정하고, 공공데이터와 융합·분석 등 업무 활용

□ 추진일정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탑재 및 민간 공개(12개 데이터셋)

※ 4개 분야 59종* 데이터('22년 대비 7종 추가) 일괄 구매
*카드소비(23종), 통신기반 유동인구(21종), 신용정보(14종), 네비게이션 이동정보(1종)

○ 도-시·군간 협업분석 과제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5월)

○ 도-시·군 소규모 데이터 분석 지원(50건 이상)

□ 기대효과

○ 도-시·군간 협업으로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상향 기대

○ 도-시·군 개별 구매 시에 비해 50%이상 예산절감 효과

1-3-5 민간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의 양성평등 추진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협조기관	시군 여성관련부서
담당자	한채형 주무관	연락처	041-635-4982

□ 추진배경

○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충남 실현이 필수적

○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은 민·관 협력을 통해서 가능

□ 현황(문제점) 진단

○ 양성평등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황

- (2019년~) 보령, 당진, 금산 3개 시군
- (2020년~) 보령, 당진, 금산, 홍성, 예산 5개 시군
- (2024년~) 아산, 계룡, 금산, 서천, 홍성, 예산 6개 시군

⇨ 시군 기초 양성평등거버넌스 구축·운영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차 확대 추세임

□ 추진방향

○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 반영

○ 양성평등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시군의 여건에 맞는 자체 운영 →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 기여

- 거버넌스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충남형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양성평등 위원회를 통한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등의 방법으로 성인지 관점을 지역현장의 의견에 반영하고 유관부서와 협력 추진

○ 시군 기초 양성평등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거버넌스 운영회의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자문·제언

⇨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주요과제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관에서 진행하는 하향식 정책으로 환류단계 없이 추진 - 시군 주민들의 의견반영 어려움	○ 민관이 협력하여 회의를 통한 정책 발굴로 의견이 반영된 양성평등 현안사업 추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충남 양성평등 목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미흡	○ 민관협력, 도-시군 양성평등거버넌스의 운영 효율 제고로 촘촘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 '24년 소요예산 : 53.2백만원 (도 28.7, 시군 24.5)

□ 추진체계

○ 도, 시군 민간이 연계된 '충남형양성평등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도내 성평등지수 향상

○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한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등의 방법으로 성인지 관점을 지역현장의견 반영

□ 추진일정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3월)

○ 양성평등거버넌스 회의 개최(상반기)

○ 도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연 2회(서면, 대면 등)

□ 홍보계획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연 1회), 관련 회의 보도자료 배포(연 2회)

1-3-6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등 주민참여 기반 강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15개 시·군
담당자	신광호 주무관	연락처	041-635-3604

□ 추진배경

○ **(주민중심 자치로의 전환)**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상향식 모델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 **(지역 중심 문제해결 기반 마련)**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구성으로, 지역 의제 발굴 및 해결 능력 강화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규모 : 208개 읍면동 전체 구성(주민자치회 156개소, 위원회 52개소)

□ 현황(문제점) 진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할 다양화** 모색 필요

- 주민숙의를 통해 '지역 정책발굴', '지역문제 해결 기구'로의 역량 확대 등 주민생활 전반으로 자치영역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자치 지원사업을 특성에 맞게 **4대 전략, 10개 사업**으로 분류,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정책 효능감 극대화

* 4대 전략 : ▵사업발굴, ▵역량강화, ▵사례확산, ▵현안지원

○ (사업발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입)과 제안사업(지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초기 기반과 지속가능한 성장틀 마련

○ (역량강화) 주민자치 인식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를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사례확산) 주민자치회 운영성과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 한마당 개최,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 등

□ 세부 추진사항

○ **(사업발굴)** 3개 사업

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234,000천원(도 117,000, 시군 117,000)
- 9개소 지원, 주민자치회 총회 지원,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 등

②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 65,960천원(도 32,980, 시군 32,980)
- 8개소 지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밀착형 특화사업

③ **주민자치 도민참여예산** : 1,291,000천원(도 387,300, 시군 903,700)
- 24개소 지원,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주민자치분야 사업 추진

○ **(역량강화)** 3개 사업

④ **주민자치 아카데미** : 137,700천원(도 41,310, 시군 96,390)
- 15개 시군 지원, 주민자치 기초·심화·실무 교육 등

⑤ **주민자치회 컨설팅** : 비예산, 인재개발원 위탁 추진
- 연 1회 추진, 주민자치회 전환 교육

⑥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 비예산, 사이버교육센터 게시
- 연중 교육, 주민자치 관계자 등 전도민 대상

○ **(사례확산)** 3개 사업

⑦ **주민자치 한마당** : 18,000천원(도 100%)
- 하반기 1회, 우수사례 경연,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⑧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 30,000천원(도 100%)
- 3개소 지원, 지난해 주민자치 한마당 수상 읍면동 인센티브

⑨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 27,000천원(도 100%)
- 2개소 지원, 공모 심사를 통해 주민세 활용 우수 시군 인센티브

○ **(현안지원)** 1개 사업

⑩ **주민자치 현안사업** : 1,531,000천원(도 765,500, 시군 765,500)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28개소, 1,163,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 8개소, 368,000천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주민 대표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시행 전	시행 후
○ **상의 하달식(top-down) 정책 실시** - 주민수요 정책 반영 한계 - 주민자치가 행정기관 보조기관 역할	○ **하의 상달식(bottom-up) 정책 수요 반영** ▸ **주민 역량강화** - 지역 주민자치리더를 활용한 교육으로, 현장감 있는 내용 전달 ▸ **정책 효능감 증대** - 제안사업 등 추진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 추진 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존 정책에 대한 답습적 주민자치 사업 추진	○ 주민 참여도 향상 및 사업 성과 제고

□ '24년 소요예산

○ 10개 사업 : 3,334,660천원(도 1,419,090천원, 시군 1,915,570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단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합계	10개 사업	3,334,660	1,419,090	1,915,570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34,000	117,000	117,000
2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65,960	32,980	32,980
3	주민자치 도민참여예산	1,291,000	387,300	903,700
4	주민자치 아카데미	137,700	41,310	96,390
5	주민자치회 컨설팅	-	-	-
6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	-	-
7	주민자치 한마당	18,000	18,000	-
8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30,000	30,000	-
9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27,000	27,000	-
10	주민자치 현안사업	1,531,000	765,500	765,500

□ 추진일정

○ (사업공모) 1~3월,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추진

○ (보조금 교부) 3~4월, 교부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4~12월, 시·군 개별 특성에 맞게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정산) 12월~, 사업 종료 후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홍보계획

○ 시·군 주민자치회 임원진 등 간담회 개최(연 2회)

○ 충남형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개최 및 홍보(4분기)

○ 주민자치 사례집 발간·배포(하반기)

1-3-7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관리체계 고도화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해양정책과	협조기관	해양수산부
담당자	김민호 주무관 심소현 주무관	연락처	041-635-4770 041-635-4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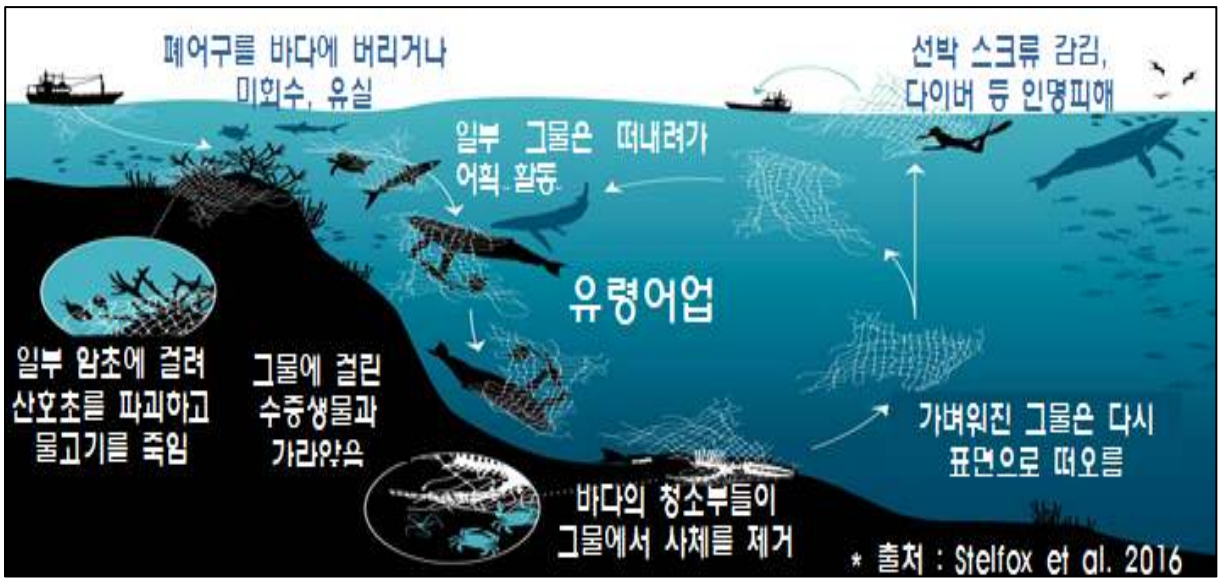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전국 어업생산량의 10%인 **4,014억원의 손실** 발생(KMI)

* 충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 1.8만톤(전국 14.5만톤 중 12.4% 차지)

○ 국내 해안가 방치 쓰레기는 **플라스틱류가 절대 다수**(89%, 포장재 다수), **해수 미세 플라스틱 평균 농도 2.48n/㎥로 전 세계에서 중상위권 차지**

⇨ **침적쓰레기, 도서지역 등 관리 사각지대 중점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추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 업 명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 사업기간 : 2021. ~ 2025.(다년도 계속)

○ 총사업비 : 23,340백만원(균특 10,900, 도비 6,294, 시군비 6,146)

○ 사 업 량 : 3대 중점사업으로 사각지대 없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현

❶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3개년도)

추진 체계	○ **(과업범위)** 도서(1차), 해안선(2차), 해저침적 및 분포지도 작성(3차) ○ **(총사업비) 800백만원(1차년도 200, 2차년도 200, 3차년도 400)** ○ **(용역기간)** 2021. ~ 2023. ○ **(용역기관)** (재)충남연구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과업내용)** 도서지역, 해저침적 등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수거 방법 및 관리방안 제시

※ ('23년) 연안지역 조사 완료, ('24년) 해저침적 쓰레기 분포 조사 진행 중

❷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추진 체계	○ **(사업범위)** 보령, 서천, 태안 수중 및 해안가 ○ **(총사업비) 21,800백만원(국 50%, 도 25%, 시군 25%)** ○ **(사업기간)** 2021. ~ 2025. ○ **(시행기관)** 시군 직접 시행 ○ **(사업내용)** 해안가 방치쓰레기(20,000톤), 침적폐기물(5,923톤)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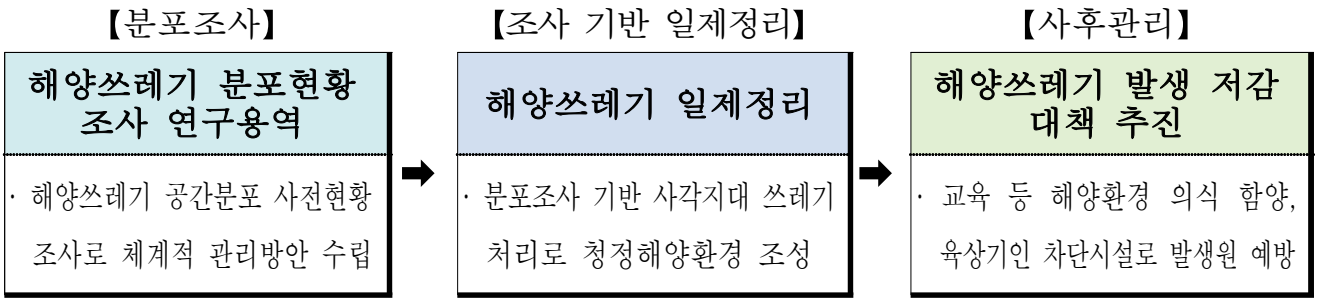
※ ('22년 실적) 해안가, 침적 쓰레기 1,404톤 수거·처리, ('23년) 추진중

❸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대책 추진

추진 체계	○ **(사업구분)** 해양환경 교육·홍보, 차단시설, 주민참여 연안정화활동 ○ **(총사업비) 740백만원(도 50%, 시군 50%)** ○ **(사업기간)** 2021. ~ 2025. ○ **(시행기관)** 충남도, 시군(서산, 서천, 태안) ○ **(사업내용)**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4개소 운영,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2개소), 반려해변·연안정화활동

※ ('23년 실적) 교육 327회/12,292명, 반려해변 26개, 연안정화활동 15회

□ 기대효과



□ '24년 소요예산

○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 56억원 (국 28, 도 14, 시군 14)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 1.6억원

□ 추진일정

○ '23. 11. ~ 24. 11.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3차년도(해저침적) 조사 추진

○ '24. 1. ~ 12. 해안가 및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24. 1. ~ 12.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연안정화활동 추진

1-3-8 충남형 교통문화 향상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교통정책과	협조기관	충남도 15개 시·군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담당자	이창희 주무관	연락처	041-635-4578
소요예산	440백만원		

□ 추진배경 및 현황

○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높은 수준('23년은 잠정치)**

- ('21년)265명 → ('22년)230명 → ('23년)203명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OECD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10.6명으로 전국 평균 5.3명 대비 2배 수준임

○ **2023년 충남 교통문화지수 82.33점으로 11단계 상승(4위, B등급)**

- 최근 5년간 충남 교통문화지수 현황
  ('19년)15위 → ('20년)16위 → ('21년)17위 → ('22년)15위 → ('23년)4위
- '23년 교통문화지수 현황
  운전행태(45.78점, 12위), 보행행태(16.91점, 10위), 교통안전(16.64점, 1위)에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나, 교통안전 분야 전국1위
- 운전행태, 보행행태의 취약 분야 집중 교육 및 홍보로 상위권 도약, 유지 방안 마련

○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별 공동 추진체계 마련**

-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으로 기관별 추진체계 공유
- 도내 기관별 일관된 교통안전 의식향상 방안 마련

□ 추진방향 및 내용

○ **충남 교통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협업시스템 구축**

- 참여(8개 기관) :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 '교통사고 줄이기'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 현안 공유 및 유기적 사업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각 기관의 개발자료(온라인 콘텐츠, 영상 등) 등의 공유로 적극적인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개

→ 콘텐츠 활용으로 교통안전 홍보 등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교통안전의 생활화 기대

○ **충남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사업 추진**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사업추진(사업비:200백만원)
- 시군별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교통문화지수 개선 방안 분석과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충남형 교통사고 예방 홍보사업 추진'**

- 교통연수원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비 등 사업지원(사업비:220백만원)

→ 교통사고 시기별 발생 요인 분석으로 지역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홍보활동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시군 교통문화지수 담당자 전문성 결여 ○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부족 ○ 범도민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에 제한 ○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미흡	○ 2024년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및 교통 문화지수 상위권 유지 ○ 2024년 충남형 교통사고 예방 홍보사업운영 ○ 유관기관 간 대화채널 구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대책 수립과 교통안전 문화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

1-3-9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대응

주관부처/부서	환경부 / 기후환경정책과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조혜란 주무관	연락처	041-635-4427

□ 추진배경

○ 충남,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적으로 시급

-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20% 차지(총 715.9백만톤 중 145.3백만톤)
-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집적지(전국 58기 중 29기 위치)
-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산업공정 부문이 97% 차지, 산업체의 57.5%가 고탄소 배출업종

□ 현황(문제점) 진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저탄소 산업 구조 개편 필요

- 일자리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발생 우려

□ 추진방향

○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공간모델 구축 필요

- 도시공간에 기반한 부문별(에너지 전환, 건물,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시책 개발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여 지역사회에 혜택과 발전으로 편익 전환 및 성과 확산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목표)** '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조성(환경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선정 연계)

○ **(재원)** 민간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지원은 필요시 투입

- **(민간)** 수익창출이 가능한 민자사업 유치
- **(공공)** 공공분야 지원(자원순환, 흡수원, 교육 등)

※ 사업비는 최종 후보지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 시 국비 지원 등 구체화

○ **(일정)** 예비후보지 선정('23.12., 충남 6개소) → 최종 후보지 발표('24.10., 2개소) → 기업, 환경부, 지자체 간 협약 체결('24.10.) → 기본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4~'25) → 사업 추진('26~'30)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6개소 선정	○ 탄소중립도시 최종대상지 1개소 이상 선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최대 ○ 탄소중립 실현에 따라 화력발전 중심의 산업구조 재개편 전망으로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 전국 온실가스 최다 배출지인 충청남도에 탄소중립 공간 모델을 조성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조기 실현과 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 도민 삶의 질 제고 연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24년 소요예산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전액 국비)

□ 추진체계

도	예비후보지	산업계·대학·연구기관
▸ 탄소중립 선도도시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 전문가 컨설팅 추진단 운영 ▸ 탄소중립도시 지정 역제안	▸ 공모신청 및 대응 (제안서 작성, 평가 참여) ▸ 기업-대학 연계 방안 발굴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탄소중립 정책 연구분석 및 정보제공 ▸ 기업 및 대학 참여 지원

□ 추진일정

○ 예비후보지 제안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시 단계별 지원

- 도·예비후보지·충남연구원 TF 구성 및 대응 전략 마련 회의(3월) → 대상지 내 참여기업 및 사업 현황 파악(4월) → 제안서 전문가 컨설팅 지원(5월) → 참여 민간기업 협약 체결(6월)

□ 홍보계획

○ 충남형 탄소중립 선도도시 모델 온·오프라인 홍보, 각계각층 분야별 탄소중립 도시 정책 홍보 추진

1-3-10 동북아 청정대기 공동 대응

주관부처/부서	환경부 / 기후환경정책과	협조기관	투자통상정책관
담당자	이승민 주무관	연락처	041-635-4412

□ 추진배경

○ 동북아 환경협력의 일환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개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및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네트워크 형성

□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장수성 환경행정교류협약('04.10.) 및 대기환경 개선 상호협약('18.10.)

- 매년 상호 방문교류 활동('04~'19, 30회) 및 영상 교류회의('21~'22) 시행
- 중국 산둥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환경행정 교류·협력 확대 추진('23)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환경분과위원회 가입설립('98.10.)

- 2023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환경분과위원회 공동사업 참여
- 동북아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강연, 환경보전 활동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행동하는 인재 육성

※ 6개국 78개 자치단체(중국 11, 일본 11, 몽골 22, 한국 16, 북한 2, 러시아 16)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중국 장수성·산둥성·랴오닝성 등 환경행정교류회 추진(5월, 10월)

○ 중국 헤이룽장성 환경행정 교류・협력 추진

- 헤이룽장성 환경행정교류회 협약체결 협의 및 준비

□ 기대효과

○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 행동·이념에 대한 상호교류 및 이해 도모

- 글로벌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양국(지자체) 간 현안 인식 및 공동 대응 의지 확인

○ 대기환경개선 주요 정책 논의를 통해 대기질 개선 공감대 형성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1-4-1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협조기관	인사과
담당자	이정근 주무관	연락처	041-635-3123

□ 추진배경

○ (급격한 세대 교체) 세대간 문화·정서 격차, 소통·이해 부족

○ (관행 답습) 시대 흐름에 따라 조직문화 변했으나, 보수적 관습 여전

□ 세부 추진사항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

- 기본 건강검진 수검직원(20만원), 문화생활 실비지원(20만원)

○ 일-가정 양립 가능한 직장분위기 조성

- 나를 위한 힐링, 버킷리스트 도전하기
- 좋은 아빠되기 지원, 임신직원 편의용품 제공

○ 직원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

- (몸 건강) 한의사 방문진료, 기초의학검사, 건강관리실 운영 등
- (마음 건강) 전 직원 스트레스·우울증 검사, 공감센터운영(심리상담)

○ 불합리한 관행 척결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개선

- 식사 당번제, 강제적 회식, 관습적 행위(시간외 수당) 등 부당행위 근절
- 자기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연가, 유연근무 자율시행 등)
- 갑질행위 및 주요 비위행위자(음주운전, 성희롱 등) 페널티 적용

○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 확산 및 소통 창구 다양화

- 계층 별 교육을 통한 인식 격차 해소(연찬회, 특강, 현장체험 등)
- 소통간담회, 점심간담회 등 운영, 토론방(익명게시판) 활성화 등

□ 기대효과

○ 가족친화시책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가능한 직장분위기 조성

○ 허심탄회한 공감 문화 조성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구축

1-4-2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 장착

주관부처/부서	정책기획관	협조기관	15개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	이재준 주무관	연락처	041-635-3130

□ 추진배경

○ 행정환경이 급격이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즉각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 발생 증가

-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변화함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여건 조성 필요

□ 추진사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5대 분야》

5대 분야	추진방향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 적극행정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업무 추진의 동력 확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성과-보상의 연결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의욕 고취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적극행정에 따른 감사 및 징계에 대한 부담 경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 유도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 직원과 도민의 참여 강화

○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문화 조성('24.5월)

○ **(적극행정 제도 정착)**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제시 활성화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수시)

○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하여 인사 인센티브 등 부여로 엄선된 우수사례 발굴 추진('24.6월~9월)

○ **(홍보·교육 강화)** 道 최초, 시·군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적극행정 집합교육 추진('24.2月), 제도홍보 영상 제작·송출 추진

-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홍보 명함* 제작·배포('24.5월)

□ 기대효과

○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화된 적극행정 확립 및 내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활력있는 조직 문화 조성

○ 감사, 징계 등에 대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및 소극행정 예방

□ '24년 소요예산

○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 : 34백만원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2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도 운영
- 적극행정 집합교육 추진 및 적극행정 제도 홍보 추진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道 ↔ 시·군 및 공공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하달, 적극행정 평가 추진
- **(道)** 자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홍보·교육 등 진행,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추진현황 점검·관리
- **(시·군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자체 운영 추진

□ 추진일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안내 : ~'24.5月

○ 道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 추진 : '24. 5月 ~ 9월

* 도, 시군 등 우수사례 접수(5월) → 道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대상 확정(5월) → 우수사례 경진대회(8월) → 중앙 경진대회(11월)

○ 적극행정 우수기관(시군, 공공기관 대상) 표창 : '24. 11月(잠정)

○ 적극행정제도 홍보, 2024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터뷰 영상 제작 등 관심가고 알기 쉬운 홍보 적극 추진(수시)

1-4-3 전문직위 지정·운영 및 주요 직위공모제 운영

주관부처/부서	인사담당관	협조기관	-
담당자	구민경 주무관 한도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3523 041-635-2132

□ 추진배경

○ 전문지식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의 지정·운영을 통한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화를 통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전문직위 지정·운영

- (목　　적) 특정업무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5 ~ 7급 대상 89개 직위
- (선발기준) 직무수행요건, 보직경로, 교육훈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국 및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발
- (전보제한) 3년

○ 주요 직위 공모제 운영

- (목　　적) 주요 직위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보직경로, 역량 등 종합적인 판단 후 적임자 선발 및 전보제한으로 전문성 강화
- (대　　상) 팀장급 4개 직위(기획팀, 예산총괄팀, 인사팀, 조직관리팀)
- (선발기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서류·면접평가 실시

  * 선발심사위원회 :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해당 실·국장, 외부위원 2~3인
- (전보제한) 2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 주요 직위 배치 시 인사 청탁 소지 및 직원 불만 야기	○ 전문직위 지정 장기 근무 유도 및 전문성 강화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연속성 유지 ○ 주요 직위 공모실시로 균등한 기회 부여 및 직무수행능력 등 객관적 검증 후 배치

□ '24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전문직위) 직위 선정(84개) 및 전문관 선발(상·하반기)

○ (직위공모) 해당 직위 전보요인 발생 시부터 시행

1-4-4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주관부처/부서	인사담당관	협조기관	전 부서
담당자	정규선 주무관	연락처	041-635-3527

□ 주요 내용

○ 4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성과목표 설정 시 정부혁신 추진방향 연계 및 핵심과제 반영

핵심 가치	성과지표
성 평 등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률(여성가족정책관)
복 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립 유치(복지보건국장)
협 력	재난발생 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사회재난과장)
청 소 년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립성취율(여성가족정책관)
환 경	일상속 1회용품 퇴출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기후환경국장)
청 렴	청렴도평가 상위권 달성(감사위원장)
안 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시행(안전기획관)
청 년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사회참여 의욕 향상(청년정책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 연계 미흡으로 사회적 가치 실행력 부족	○ 정책 수립단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실행·평가체계 구축으로 전 직원 참여 유도

□ '24년 소요예산 : 118백만원

○ 직무성과평가 평가위원 수당 및 전문가 컨설팅 등 90백만원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하급자 역량평가 등 28백만원

□ 추진일정

○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면담, 직무성과계약 체결

○ (3월~12월) 계약과제 추진 및 실적 관리

○ (7월) 상반기 평가, (9~10월) 고객만족도 평가

○ (12월) 공통과제 평가, ('25.1) 하반기 평가

○ ('25.3월)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인사, 보수 등에 결과 활용

1-4-5 발탁승진 범위 확대

주관부처/부서	인사담당관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구민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2523

□ 추진배경

○ '일 잘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발탁승진제도 운영

○ 심사승진 선발 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함

□ 현황(문제점) 진단

○ 공적보다 신청자와의 관계를 고려, 실·국장 추천이 형식적 진행

○ 이로 인해 근평위주의 선발로 발탁승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선발직급)** 직렬별 4·5급 ※ 5급은 심사승진대상자 선발 시 실시

○ **(선발인원)** 총 승진 대상자의 30% 내외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 선발

- **(원칙)** 결원발생 직렬 내 발탁승진
- **(예외)** 복수직위로 지정된 경우, 모든 직렬에서 발탁승진 가능

○ **(선발대상)** 승진후보자명부 법정배수 이내자 중, 업무추진 실적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공무원

❶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완수**, 집단 및 고질민원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 공무원

❷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법률상 의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예산절감 공적 등은 제외

❸ 기타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추천된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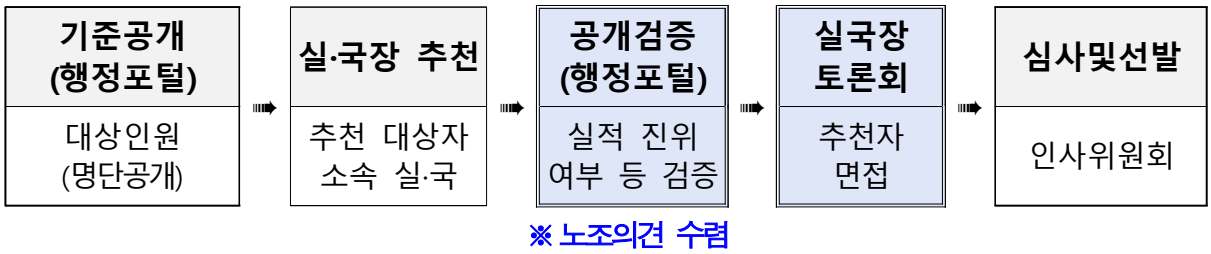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근평위주의 승진대상자 선발로 경직적 조직문화 형성	○ 발탁승진을 통해 역동적 조직 재설계

□ '24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노조의견 수렴

↳ **(공개검증)** 행정포털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 공적 게시 및 전직원 의견 수렴*

* 업무추진실적 진위여부, 업무 기여도 및 평판 등에 대해 폭넓은 직원의견 수렴

↳ **(실·국장 토론)** 실국 추천자 능력검증(필요시 면접) 및 발탁 순위선정

1-4-6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협조기관	충남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강성종 주무관 방성준 주무관	연락처	041-635-3685 041-635-3687
소요예산	-		

□ 추진 배경

○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22.1.11.공포, '22.7.12.시행)

- 민원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 **법률로 상향**

□ 추진현황

○ 행안부 주관 **'국민 행복 민원실' 선정을** 통해 민원실 내·외부 공간 및 서비스 우수 인증('21.11.~'24.12.31.)

※ 행안부 기관표창, 포상금 및 인증현판 수여

○ 공무원증 녹음기 및 비상벨,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

- CCTV 1대, 비상벨 4대 설치 및 전직원 녹음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 구비 완료

○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도·시군(15개) 민원전담부서 도입

○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24. 3.)

- 폭언·폭력 등을 가상한 모의훈련 실시, 안전장비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23.3.10.)

□ 세부 추진사항

○ 도-시군 민원전담부서 근무 공무원 보호 강화

- 시군 민원실 안전시설 설치 독려, 경찰 연계 모의훈련 실시

○ 민원혼합부서(복지·건축·도로 등) 공무원 보호시책 추진

- 개인 보호장비(웨어러블캠, 공무원증 녹음기) 도입(민원실 시범실시 후 확대), 피해공무원 법적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팀 구성 등

⇨ 전 직원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1-4-7 조직진단 인력·기능 배분 개선안 마련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김미영 주무관	연락처	041-635-3598

□ 추진배경

○ 정부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22.7.)에 따라 5년간('22~'26) 기준인력 동결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년 1% 이상) 필요를 통해 신규 기구·정원 수요 대응

□ 현황(문제점) 진단

○ 기존 사무 일몰 없이, 신규 행정수요 다양화로 인력 재배치의 한계

-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실국·기관 간, 직렬간 입장차 조정 어려움

□ 추진방향

○ 행정기구 및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 기구별 기능 및 특성 고려, 성과중심의 자체 조정안 마련 유도
-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분석 및 진단 후 재배치 방안 지원

□ 조직진단 추진계획

○ 기간·대상 : '24. 4. ~ 6.(3개월간) / 전 부서(소방조직 제외)

○ 내용 : 행정환경, 사무량, 업무추진 실적 등 분석 후 기구·인력 운영 적정성 검토

○ 방법 : 기구별 자체 조직진단, 정량·정성 지표분석,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 (기구) 기구규모 적정성, 타당성, 통폐합 가능성 등 진단
- (정원)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직급·직렬 배치 타당성 등 진단
- (사무) 사무배분의 적정성, 중복성, 비효율성 등 진단

○ 결과 : 합리적인 기구·인력 조정안 도출로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행

자체 조직진단 (실국, 기관별)	기초자료 분석 (자치행정과)	의견수렴 (각 부서↔자치행정과)	종합 분석 (자치행정과)	결과 활용 (자치행정과)
· 실국·소속기관 등 진단 결과 제출 (→ 자치행정과)	· 행정환경 분석 · 유사기구 분석 · 사무량 변동 확인	· 자체진단 내용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실·국·기관 별 면담	· 조직 효율화 방안 도출	· 조직개편안 마련
~ 4. 21.	4~5월	4~5월	5~6월	7월 이후

□ 추진일정

일정	추진사항	비고
4~6월	조직진단 및 분석	• 신규 행정수요 파악 및 인력 재배치 방안 강구 • 부서별 의견수렴, 타시도 유사조직 규모 파악 등
7~8월	조직개편안 마련	• 기구 및 인력 재편방안 도출
9월	민관합동조직진단반 운영	• 조직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개편안 사전 보고	• 지휘부 보고
10월	실국장 토론회 & 조직관리위원회 개최	• 실국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직관리위원회 개최(위원장 : 행정부지사)
	조직개편안 최종 확정	• 지휘부, 조직개편안 결재
	입법예고 등 자치법규 개정 절차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도의원 개편안 설명, 개별 의견 수렴
11. 5.(화)~ 12.16.(월)	도 의회 조례안 상정·심의	• 조례안 제출(10.25.) • 행문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11.5.~12.16.)
~24.12.31.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조례 공포 및 시행('24.12.31.)

□ 관련 자치법규 개정계획(시행 24. 12.31.)

○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시행 24. 12.31.)

-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민선8기 후반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재편

○ (**기대효과**) 민선8기 3년차 도정과제를 본격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기구·인력확대 부응

1-4-8 위원회 폐지·통합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새마을공동체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백운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2313

□ 추진배경

○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위원회 통·폐합)과 관련,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현황(문제점) 진단

○ **(현황)** 2023. 12월 말 기준 도 소관 위원회 수 176개*, 회의개최 총 629회로 위원회별 평균 3.57회 개최

* '23년도 정비실적 : ('22.9.) 215개 → ('23.12.) 176개

합 계	위 원 회 현 황 (개)			
	법령(의무)	법령(임의)	조례	규칙
176	87	20	68	1

○ **(회의 미개최)** 최근 2년간 회의 미개최(3개), 1년간 회의 미개최(8개)

○ **(비효율 운영)** 회의개최 연 1회(21개), 회의개최 연 2회(22개)

□ 추진방향

○ **(폐 지)** 3년간 미개최 또는 존치 필요성 소멸(목적 달성)된 위원회

○ **(통폐합)**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 **(비상설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

○ **(존속기한설정)**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위원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정비대상)** 54개 위원회

- 미개최 위원회(11개) : 2년간 미개최(3개), 1년간 미개최(8개)
- 비효율 위원회(43개) : 회의개최 연 1회(21개), 회의개최 연 2회(22개)

○ **(정비방안)** 정비대상 위원회 부서 의견 수렴 후 조례개정 또는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도내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운영 내실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회의 미개최 시 위원회 폐지 기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존속기한) ②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 ---------- ---------- ---------- ----------, 3년간 -------- ---------- ----------.

□ 추진일정

○ ’24년 정비대상 위원회 부서 의견 수렴 : ‘24. 4월

○ **(총괄부서)** 위원회 정비관련 근거 조례 일괄방침 추진 : ’24. 6월

○ **(각 실국)** 조례개정 후속절차 이행 : ’24. 9월

1-4-9 수요 응답형 교육 과정 운영

주관부처/부서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과	협조기관	신청기관(도,시·군 전 부서)
담당자	유란희	연락처	041-635-6542

□ 추진배경

○ 당면업무 추진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하면서 학습하는 교육문화 제고

□ 운영개요

○ 교육목적 : 시·공간적 제약 극복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상시적 직무학습 강화

○ 신청대상 : 도(직속기관·사업소), 시·군 공무원(공무직 등 특수직 포함)

○ 교육장소 : 교육 신청기관 강당, 회의실 등 협의 후 선정·활용

○ 교육방법 : 수강요청에 의한 '찾아가는 대면교육' 운영

○ 교육내용 : 국도정 가치, 직무·디지털역량, 리더십, 인문·소양 등

- (직무/리더십) 예산·회계, 보고서 작성 등 직무능력 향상 도모
- (도정가치) 도정 비전 공유 및 내재화로 도정 성과 창출 뒷받침

□ 세부 추진사항

○ 1월~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도, 시·군)

- 교육신청 공문발송(분기별 1회) 및 도·시군 등 교육 홍보

○ 3월~12월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12월 중 : 운영결과 분석 보고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추진절차】

구분	교육 9주 전 모집 및 신청	교육 8주 전 선정 및 안내	교육 7주 전 운영준비	교육 당일 운영 및 마무리
인 재 개발원	교육안내 및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신청서 검토 강좌 선정 선정결과 안내	강좌 설계 강사 섭외 교재 제작	운영(예산) 지원 결과 보고 교육수료 통보
신청 기관	공문 신청	결과 확인	교육장·인원 확보, 행사 준비·운영	강좌 운영 및 상시학습 인정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2-5-1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납부서비스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세정과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전진우 주무관	연락처	041-635-3634

□ 추진배경

○ 지방세 체납관련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및 충남도 탄소중립 실현 조력

□ 현황(문제점) 진단

○ 연간 충남도 지방세 체납관련 종이문서의 제작발송이 110만건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른 환경자원 절감 필요성 대두

○ 종이문서의 우편발송으로 타인의 우편개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 존재

□ 추진방향

○ 카카오 페이, SCI평가정보원 협약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 연계 본인확인 인증을 통한 열람시스템 구축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환경자원 절감, 탄소중립 실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전자고지 이용계약 체결 (~'24. 1.)
-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
- 연계정보(CI) 매칭 용도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 : ㈜스마트솔루션(ASP서비스 제공 중개소)

⇩

연계정보(CI) 변환 및 배분 ('24. 2~3.)
- 연계정보(CI) 변환 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변환 및 배분(→시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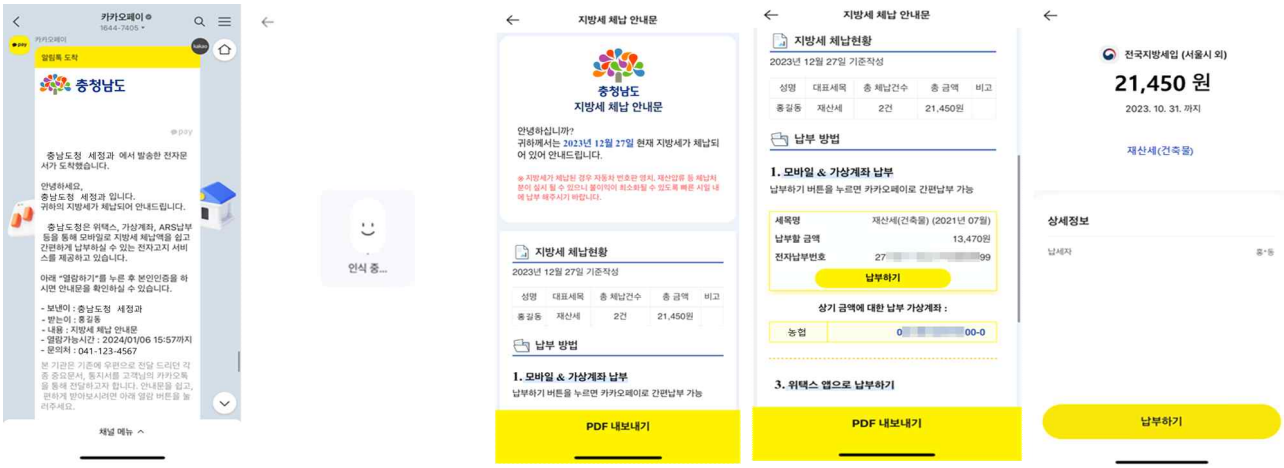
전자고지 서비스 개통 ('24. 3.)
- 전자문서 디자인 및 업로드 양식 생성(→도)
- 카카오 알림톡 체납안내 전자고지 발송(→시군)

※연계정보(CI) 변환: 납세자 주민번호를 특정코드로 암호화 처리하는 작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지방세 체납관련 연간 110만건 종이안내문의 전자문서 전환

※ 카카오 알림톡 발송절차



전자고지 알림톡 수신 | 본인인증 | 체납내역 확인 | 납부하기 버튼 탭 | 카카오 납부하기

○ 기대효과

종이 고지서 제작 · 발송 비용 절감

종이 고지서 제작비 : 5,500만원(110만건×50원) ※종이 고지서 1매당 50원
우편 발송비 : 47,300만원 (110만건×430원)※ 일반우편 1통당 430원
⇨ **총 52,800만원 절감**

탄소 감축 : 연간 5.8t 탄소 감축

탄소 감축량: 5.8t(110만건×0.005264kg*) ⇨ **年 나무 655그루 심는 효과**
* 계산기준: A4용지 1장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005264kg(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4년 소요예산

○ 시스템 이용 비용: 총 22,638만원

- 연계정보(CI) 변환비 : 330만원(165만원×2회) ※ 반기별 변환 기준
- 시스템 이용료 : 1,738만원(시군별 월 55천원~440천원) ※ 분기별 시스템 이용 기준
- 발송·수신·열람 수수료 : 20,570만원(110만건×187원) ※ 1건당 최대 187원

□ 추진체계

도	㈜스마트솔루션 ㈜SCI평가정보	시군
사업기획 및 신청 총괄, 사업 추진 관리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사용 및 이용 수수료 지급
▪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신청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 체납자 개인정보 시군 취합 ▪ 연계정보(CI) 변환 의뢰	▪ 연계정보(CI) 변환처리 ▪ 카카오페이를 통한 전자문서 송달 시스템 지원 ▪ 서비스 이용 교육 추진 ▪ 전자문서 디자인 및 업로드 양식 설계	▪ 체납자 대상 전자문서 안내문 시행 ▪ 체납자 전자문서 정보열람 안내 및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카카오페이)												
▸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신청((주)스마트솔루션)												
▸ 연계정보(CI) 변환 심사신청·승인(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주)SCI평가정보)												
▸ 연계정보(CI) 변환 서비스 가입((주)SCI평가정보)												
▸ 전자문서 디자인 및 업로드 양식 설계												
▸ 전자고지 발송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 연계정보(CI) 일괄변환 및 배분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통												

2-5-2 인공지능 활용 도민·행정 비서 시스템 구현

주관부처/부서	데이터담당관	협조기관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김민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3201

□ 추진배경

○ 챗GPT 등장('22.11.)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공공분야(도정)의 AI 도입 및 개발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짐

□ 현황(문제점) 진단

○ 높은 기대감과 달리 AI는 활용 난이도가 높고 행정정보 특성상 보안 문제 등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등 높은 투자 비용 대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움

□ 추진방향

○ 정부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AI 시범적 활용 확대

: 행정(업무에 AI 활용), 민원(대화형 민원도우미), 복지(AI 복지도우미), 안전(밀집위험 상황예측)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지원 사업」공모 추진

: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정 도입의 활용성·효용성 등 검토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초거대 AI 활용지원 사업 **※ 2023년 신규사업**

► 주관/전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사업내용 :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민간의 초거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부분의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기관 등과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초거대 AI활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인공지능 도입 분야 없음	○ 행정 분야(조례, 예산, 사업 등) 1개 이상 인공지능 행정 보조 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관례적 행정 업무 처리로 인한 시간 과다 소요 및 오류 발생	○ 인공지능 활용 행정 효율화 - 정보 검색, 처리절차 안내, 문서 요약 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4년 소요예산

○ 미정(국비 100%)

□ 추진체계

○ 공모 분야 발굴(행정, 민원, 복지 등) 및 공모 추진

□ 추진일정

○ '24년 초거대 AI사업설명회 참석('24.4월)

○ 공모 신청('24.5월) → 공모 선정 사업 추진('24.6~12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충남 SNS 등 온·오프라인 다방면의 방법 활용

2-5-3 충남데이터포털「올담」운영 및 관리

주관부처/부서	데이터담당관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복권의 주무관	연락처	041-635-3202

□ 추진배경

○ 도에서 수집한 다양한 공공민간데이터를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현황(문제점) 진단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도·시군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운영

- 충남 도·시군 행정데이터, 민간데이터, 국가데이터 등 제공
- 데이터 분석 시각화, 분석사례, 데이터 연계 업무간소화 서비스

○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한 도 실과 및 타기관 담당자 협조 필요

□ 추진방향

○ 찾기 쉽고 활용하기 쉽도록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환경 제공

○ 주기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대·내외 인지도 향상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용자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올담 화면 재구성

- 메뉴별 활용도를 분석하여 서비스 위치 재배치 및 디자인 개선

○ 상시 최신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확보

- 주기적인 데이터 현행화 모니터링 및 조치
- 데이터 갱신주기 준수, 데이터 기준일, 원본 출처 명시 등

○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실과 보유 데이터 중 활용성 있는 미개방 데이터 발굴
- 타 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충남도 주요 데이터 공유
- 미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ESG, 보건의료, 재난 안전 등 주요 분야의 데이터 선제적 개방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데이터 누적 건수

시행 전	시행 후
○ `23년 누적건수 5,249건	○ `24년 누적건수 5,500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개방 데이터 검색 및 활용	○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로 도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4년 소요예산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발굴·수집 : 7억원

□ 추진체계

○ 도 실과 및 업무협약 기관 간 관리체계 강화

도 실과	데이터담당관	타 기관(업무협약 기관)
· 관련 업무 데이터 제공 · **데이터 담당자 지정 및 관리** · **데이터 변경에 대한 현행화** · 정책 변경에 따른 데이터 갱신	·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총괄 · **데이터 발굴계획수립 및 개방**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데이터 현황 관리 지속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 본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기관 간 필요 데이터 공유 · 관련 분야 기술교류 등

□ 추진일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올담 홍보 강화 : 수시

○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반기별

○ 데이터 전수점검 등을 통한 데이터 체계적 관리 : 분기별

□ 홍보계획

○ 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내외 홍보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교육·행사전 활용

2-5-4 100여년 된 토지대장 한글화

주관부처/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기관	
담당자	김효정	연락처	041-635-4799

□ 추진배경

○ 구 토지대장은 1910년대에 만들어져 대부분이 한자 및 일본어로 작성

○ 전산대장에 이기되지 않은 토지이동 사유와 소유자 변동 연혁 정보가 존재함에 따라 여전히 구 토지대장의 조회·검색이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대부분이 한자 및 일본식*으로 표기되어 이해 및 식별이 어려움

- 내용파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자에 익숙지 않은 일선 공무원에 의한 민원응대에도 한계

* 일본식 표기 예: 大正(1912년), 昭和(1926년), (又ハ → 또는), (ヲ → 을/를), (改メ → 고쳐)

□ 추진방향

○ 舊 토지대장에 한자 및 일본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토지정보 (지번, 지목 등), 소유자 정보(성명,주소 등) 등을 한글로 변환, DB 구축 및 열람·발급 시스템 연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토지정보와 소유자정보 등 대장의 모든 기재사항을 한글 변환

○ 한글로 변환된 자료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적행정 기반정보화

○ 현재 운영 중인 구 토지대장 스캔본 열람·발급서비스와 연계하여 한글 변환본의 열람·발급서비스 구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 행정에 활용

○ 기대효과: 다양한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로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행정처리 능률 향상 및 도민 편익 증대

- 도민들이 보다 쉽게 토지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추진체계

○ 도 : 도비교부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지도

○ 시・군: 사업추진

□ '24년 소요예산

○ 5개 시군*, 1,068백만원(도 320, 시군 747)

* 서산, 금산, 서천, 홍성, 태안

□ 홍보계획

○ 각종 행정업무 활용(조상땅찾기 등) 및 세무서, 등기소 등 활용 언론홍보

2-5-5 충남형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교통정책과	관련 협업기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민간기업(중앙ICS)
담당자	정종필 주무관	연락처	041-635-4578
소요예산	('23년) 235백만, ('24년) 141백만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재해 상시화 대응을 위한 상시 학습이 가능한 충남형 교통안전 온라인교육센터 컨텐츠 제작 및 운영 필요(교육 참여 확대)

- 기존의 집합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상시 학습 체계로 구축(안정적 교육 운영 기반 마련)
- 교통 여건의 변화, 법제도 개정 등 정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운영(교육 운영의 유연화, 표준화)

□ 사업 필요성

○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운수종사자,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로 외부 환경 요인(코로나19 등)에 의한 교육 중단(공백) 시 교통사고 증가 우려

□ 추진방향

○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운영

○ 안전한 교통문화 공유를 위한 도민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 세부 추진사항

○ 충남형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클라우드 서버 활용)

- 운수종사자교육(여객, 화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도민 교통안전교육

○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저상버스 운전자교육 과정 콘텐츠 제작
- 어린이용 교통안전 뮤지컬 제작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오프라인교육 시 지역이동 및 생업종사 시간의 영향을 주는 등 피교육자의 불편 발생	○ 환경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시 교육 가능 플랫폼 구축으로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접근성 제고 ○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의 효과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코로나19 확산,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집합(대면)교육 참여의 어려움 ○ 교육 참여자 추적 관리 등 교육 효과 분석의 어려움 ○ 인력/예산 한계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환경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시 교육 가능 ○ 표준화된 교육 운영이 가능하고, 교육 참여자 정보를 활용한 추적 관리 등 교육 효과성 분석 용이(빅데이터 확보 및 분석 활용 용이) ○ 유연한 플랫폼 구축으로 교통안전교육 수요 적극 대응 가능 ○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교육의 효과 향상

□ '24년 소요예산

○ 충남 온라인교육(운수종사자보수교육 및 저상버스 운전자교육) 콘텐츠 제작사업 용역 : 82백만원

○ 충남 교통안전 온라인교육 센터 플랫폼 서버운영 : 39백만원

○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콘텐츠 제작 : 20백만원

□ 추진체계

○ 주관기관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업 홍보
-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계획 시달 및 예산 지원

○ **협업기관**

소속	주요 담당업무
충남교통연수원	▪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개발 주관 및 교통안전교육 운영(운수종사자, 도민) ▪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제작
온라인 교육센터 고도화 및 콘텐츠 제작 (민간기업 선정 예정)	▪ 교육 콘텐츠 제작 ▪ 플랫폼 클라우드 서버 운영

□ 추진일정

○ 온라인교육용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제작 : ’24. 2월

- 뮤지컬 공연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콘텐츠용 제작

○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서버운영 업체 선정 : ’24. 3월

○ 충남형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탑재 교육 콘텐츠 개발 : ’24. 3월~5월

- 여객업종 4시간, 화물업종 4시간, 저상버스 2시간

○ 충남형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 ’24. 6월~

- 여객·화물 운수종사자교육(6월), 저상버스(10월), 도민(상시)교육 운영

□ 홍보계획

○ **(주관부서) 전 도민 대상 홍보**

- 지역 신문 등 온라인 플랫폼 및 교육 운영 홍보/ 5월~

○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교육 참여 기관 및 단체 홍보**

- 각 시·군, 도내 초·중·고등학교, 민간단체(기업체, 노인회) 등 홍보 (홍보지 배포 및 공문 발송) / 2월~

- 운수단체(버스3, 택시2, 화물3 등), 운수업체 대상 홍보(문자발송) / 6월~

2-5-6 무선통신기반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교통정책과	협조기관	예산군
담당자	소순원 주무관	연락처	041-635-2843

□ 추진배경

○ 교통사고 응급조치 사각지대 해결

- 2022년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2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10.8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특히, 이륜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18.2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자 생활형 이륜차의 사망자 수 비율이 높음

※ 충남 이륜차 사망자 수 : '19년(38명)→'20년(42명)→'21년(49명)→'22년(27명)
* '23년 통계 미집계

□ 현황(문제점) 진단

○ 지역 여건에 맞는 이륜차 안정성 확보

- 지방지역 이륜차의 사고 특성은 도시지역의 이륜차와 상이하여, 외진 지역의 단독사고 발생률이 높고 지역적 여건(도시지역에 비해 원거리에 병원 위치)을 고려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필요
- 지방지역은 이륜차 사고 발생 위치 확보 및 발견 시간 지연으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사망자 수 많음

□ 추진방향

○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에 따른 사업 확대 검토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MOU체결('23. 10.)

○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센서 242대 설치 완료('24. 4. 2. 기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이륜차 단독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지연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 불가	○ 골든 타임 확보를 통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도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체계

○ 충청남도 : 예산 지원 및 행정지원

○ 예산군 : 기기 부착 지원 및 상황실 운영 등 사업 추진

□ 추진현황

○ 2022. 10. : 예산 확보 및 사업비 교부(도 → 예산군)

○ 2023. 05. : CCTV관제센터 경찰 인력배치

○ 2023. 10. :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MOU체결(예산군)

- 예산군,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23. 11 ~ '24. 4. :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센서 신청 접수 및 설치(242대)

2-5-7 의료취약 지역주민 ICT융합 의료서비스 협진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협조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김재준 주무관	연락처	041-635-4304

□ 추진배경

○ 농어촌, 도서벽지 등 지리적 취약성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낮은 의료접근성 문제 해소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수요 및 진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 접근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 낮음

□ 추진방향

○ 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미충족 의료를 해소

- 협진건수 8,000건 이상: 22년도 6,960건 → 23년도 9,006건
- 대상자수 1,300명 이상: 22년도 1,156명 → 23년도 1,378명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목적 :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하여 의사 ↔ 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원격협진으로 건강관리 및 진료 가능한 질환의 재진 환자
- 병·의원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의사와 의료인이 협의 결정

○ 지원내용 : 원격협진수가, 사업운영비,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 참여대상 : 6개 시군 (공주, 보령, 서산, 금산, 서천, 홍성), 충남 4개 의료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원격협진 8,800건 이상 제공

○ 기대효과

-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삶 유지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서비스 강화로 소외계층이 체계적인 건강관리 가능

□ '24년 소요예산

- (합계) 1,136,946천원(국 568,473 / 도 369,263 / 시군 199,210)

  * 재원비율 : (시군) 국50%, 도15%, 시군35% / (의료원) 국50%, 도50%

- (시·군) 569,172천원(국 284,586 / 도 85,376 / 시군 199,210)
- (의료원) 567,774(국 283,887 / 도 283,887)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정책기획

○ (도) 사업기획 및 신청 총괄, 시군 예산 배정 및 관리, 사업 추진 관리

○ (시·군/의료원)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위탁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 운영·평가, 지침 개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DHIS) 운영 및 유지관리, 장비 보급 및 기술지원

□ 추진일정

○ (상반기) 사업비 교부, 정산보고, 현장점검

○ (하반기) 실적점검, 사업 신청,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문제점 건의

2-5-8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토지관리과	협조기관	국토교통부
담당자	고아라 주무관	연락처	041-635-2866

□ 추진배경

○ 해안 침식 및 퇴적으로 인한 말소·신규등록 대상토지 증가 및 갯벌 지역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관리·예방 체계 필요

□ 추진방향

○ 드론·AI 활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하여 및 다양한 플랫폼 연계·데이터 제공으로 해양정보 고도화 및 해양 이상기후 등 자연재난에 따른 국민 안전과 재산권·자연유산 보호

□ 세부 추진사항

○ (사업 기간) ‘24. 4. ~ ’24. 12.(9개월)

○ (사업 범위) 가로림만 20㎢ 내 갯벌정보

* 간석지, 백사장, 간출도로, 갯골, 갯벌시설물, 어장정보, 지적관리(신규등록, 말소대상토지) 등 17종

○ (사업내용)

① 드론 영상 기반 AI 학습 모델링 분석을 통한 데이터 구축

② 표준 기반 데이터 구축, NDT 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③ DT플랫폼 활용, 데이터 연계하고 시뮬레이션 통한 행정·의사결정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체계적 갯벌정보지도 부재	○ 가로림만 20㎢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 디지털트윈 플랫폼에 탑재 및 연계망 구축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해양쓰레기 등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조사 및 분석체계 부재 ○ 플랫폼 기반 효율적 행정·의사결정 지원체계 부재 ○ 갯벌체험 관광객 사고증가	○ 해안가 관리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불법어구 감시·조사, 갯벌생태계 체계적 보존 ○ 디지털트윈시스템과 연계하여 해양생태 적합성, 해안 토지관리정책 분석·지원 ○ 해양·갯벌안전사고 예방 - 해수범람사고, 체험객 실종사고 등

□ 소요예산

○ ‘24년 사업비 : 88백만원(국비 58백만원, 도비 30백만원)

- 드론 촬영 및 DB구축, 데이터 처리·분석 및 플랫폼 연계

*** 2024년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선정’**

□ 추진일정

○ (‘24. 4~6.) 드론측량, 데이터 처리, AI학습등 공간정보 구축

○ (‘24. 6~10.) DT 등 공간정보 플랫폼 탑재 및 활용체계 구축

○ (‘24. 10~12.) 사업완료 및 홍보(확산)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2-6-1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정보보안 관리수준 제고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정보화담당관	협조기관	국가정보원
담당자	박상철 주무관	연락처	041-635-3731

□ 추진배경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재난·안전 등 민감한 사회적 현한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 해킹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보안이 열악한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산하기관은 많은 예산의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과 관련된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 열악

○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 및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이 낮음

□ 추진방향

○ 산하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통한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정보보안 지식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향상

□ 세부 추진사항

○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 국가정보원 및 보안전문 업체 공조를 통한 지도방문

○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해킹메일 모의훈련 지원

○ 최근 국내·외 정보보안 동향 및 신기술 정보공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Zero화

○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향상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

시행 전	시행 후
○ 정보시스템 보안환경 취약 ○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이 낮음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향상 ○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정보보안 예산 부족

□ '24년 소요예산 : 없음

□ 추진일정

○ 최근 국내·외 정보보안 동향 및 신기술 정보공유(매일)

○ 시군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 점검(6월)

○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조로 정보보안 점검 실시(6월~7월)

○ 산하기관 전직원 대상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수시)

2-6-2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간소화(로봇업무자동화 RPA)

주관부처/부서	데이터담당관	협조기관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김민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3201

□ 추진배경

○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가 부각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공공데이터 업무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도-시군 단순·반복·고정적 행정업무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낮음

□ 추진방향

○ 단순·반복 업무 중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업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데이터 활용 업무간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대상 시범서비스 구현

※ <참고> '23년 데이터 연계 업무 간소화 구축 현황

1) 급식비 간편 산출: 초과근무 및 관외출장내역 데이터 연계하여 급식비 자동 계산 및 결과 저장

2) 출장 결과 간편보고: 출장지 사진 저장만으로 보고서 자동 생성(출장자, 일시, 장소 자동 입력)

3) 신용카드 사용내역 간편 보고 : 카드 사용 데이터 연계로 보고서 자동 생성 보고 절차 간소화

4) 주요 업무 자동보고: 미세먼지 실시간 보고, 청년 인구 현황, 충남 인구 현황 자동보고서 작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업무 처리 시간 과다 소요	○ 업무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 부담 경감(처리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단순·반복·고정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시간 과다 소요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 높음	○ 업무 처리 시간 단축 ○ 행정업무 생산 효율화 ○ 부가가치 높은 업무(정책연구·개발 등)에 역량 집중하여 조직 성과 향상

□ '24년 소요예산

○ 25,000천원(도비 100%) :공모전 추진(상금 지급 등) 및 시스템 개발비(1건)

□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전 부서 수요(간소화 대상 업무 유무 등) 확인('24.5.~6.)

○ 데이터 활용 업무 간소화 계획 수립 및 업무간소화 사업 발굴·선정('24.7.)

○ 업무간소화 시범 서비스 운영 및 타기관 확산('24.10.~12.)

5월	6월	7~9월	10월~12월
◆대상업무 발굴 ◆관련부서 협의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 사업에 포함·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수 아이디어 구현	◆서비스 개시 ◆타 기관 확산

□ 홍보계획

○ 행정포털 **게시판**, 충남데이터포털「**을담**」등에 업무간소화 기능 및 사용법 공유, 부서별 서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간소화 사용자 교육 추진

2-6-3 데이터기반 행정 문화 조성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데이터담당관	협조기관	15개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	신형섭 주무관	연락처	041-635-3204
소요예산	('23년) 250백만, ('24년) 200백만		

□ 추진배경

○ 행안부 주관 '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비

○ '24년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시행 계획의 세부 과제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23. 10.)에 따라 '24년 조직 및 개인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개선 계획 수립('24. 3.) 및 추진

※ 역량진단 결과('24년) : 조직역량 3단계(확산기), 개인역량 1단계(도입기)

- '24년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완료('24. 3.)

○ 실과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 및 적합 과제 선정 분석 추진

○ 도-시군 데이터 부서와의 협력체계 강화 및 현안 사항 공유 등 추진

※ (운영절차) 분기별 주요 안건 선정 → 안건별 시군 의견 취합 → 데이터협의회 개최 → 결과 공유

○ 공무원 대상 데이터 관련 교육 추진(직무성과평가 공통과제 선정)

- 실국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집합/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24. 3.)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 '23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 선정

○ (기대효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 역량 제고

2-6-4 빅데이터 및 ICT를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문화정책과	협조기관	충남도 데이터정책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자	김혜진 주무관	연락처	041-635-3823
소요예산	('23년) 333백만, ('24년) 330백만		

□ 추진배경

○ ICT·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한 문화산업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충남 문화관광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 등

□ 분기별 목표 및 추진 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데이터 분석 과제 탐색, 데이터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모집 및 선정	데이터 분석 과제 확정 및 연구 추진, 인력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 추진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사업화지원 중간평가, 교육 운영 중간점검	데이터 분석 연구 완료, 사업화지원 결과평가, 교육 운영 결과 검토

□ 현황(문제점) 진단

○ **(문제점)** 도내 문화관광 분야 데이터 분석 인력 부족

○ **(조치방안)** 데이터 분석 및 사업화 직접 지원, 「충남 데이터청년 캠퍼스」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데이터 분석)** ESG·문화관광 등 주제로 데이터 분석 2건

※ 분석 보고서 배포(도, 시군), 충남 빅데이터 플랫폼(올담) 게재

○ **(사업화 지원)** ICT·데이터 기반 충남소재 기업 사업화 지원* 3개사

* I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업화 지원(ex : 충남 문화유산 3D 구축)

○ **(인력 양성)** ICT·데이터(R, 파이썬, ChatGPT) 등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관광 데이터 축적 자료 부족 및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필요 ○ 데이터 분석 인력 부족	○ 문화관광 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보고서 지역 배포, 활용 ○ 데이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미진 ○ 산업 인력 부족	○ 지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분야 등 필요 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공을 통한 산업 활성화 ○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 추진일정

○ ('24. 4.~11.) 사업화지원 선정기업 대상 협약 및 프로그램 운영

○ ('24. 4.~9.) 충남 데이터청년캠퍼스 운영(교육프로그램, 인턴십 등)

○ ('24. 4.~12.) 아산시, 부여군 등 시군 대상 문화 분야 데이터분석 협력

- 충남 문화활동 동향 분석 및 올담 게재 추진(월1회, 총10회)

2-6-5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토지관리과	협조기관	국토교통부 / 산림청
담당자	표은하 주무관 정지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4801 041-635-2863

□ 추진배경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행정분야와 연계하여 공간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용시스템 구축

○ 충남 국토의 변화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과거 항공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추진방향

○ 충청남도 데이터포털(올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영상 탑재 및 API연계를 통한 공간정보의 분석기능과 UI편집 기능을 탑재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체계 구축

○ 국토지리정보원 보유 과거('46~'07) 항공사진 아날로그 필름을 디지털 정사영상으로 변환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탑재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올담 자료 연계 및 다차원 분석지도(18종) 관련 자료 갱신,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영상 및 시계열 정사영상 탑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연계·정합성 확인 등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수행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20~'22)됨에 따른 유지관리 추진 필요

○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스캔·보정·항공삼각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고품질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

- 공간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연도별 정사영상 탑재하여 도민, 공무원에게 서비스('19~'23년 제작 정사영상 탑재 완료)

※ '19년~'23년(5년간) / 14개 시군 / 18,176도엽

- 국토지리정보원 누락분(항공촬영을 실시하지 않았던 연도 및 지역)이 존재함에 따라 산림청 산림공간정보('72~'01)를 활용한 추가 제작

※ '24년~'26년(3년간) / 14개 시군 / 6,087도엽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개별 자료 수집·비교 ○ 과거 국토이용 상황 추정	○ 관련 공간정보 통합 검색·분석 ○ 국토 변화 모습 한눈에 가시화 및 분석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관련 자료 확인에 많은 시간 소요	○ 연관 정보 확인 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 업무 수행 효율성 향상

□ '24년 소요예산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319,000천원

○ 시계열 정사영상(추가분) 제작 : 370,998천원

2-6-6 스마트 지하수 총량관리제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물관리정책과	협조기관	-
담당자	김화수 주무관	연락처	041-635-4482

□ 추진배경

○ 지역별 지하수 이용률 파악 및 적합한 지하수 관리 추진

□ 현황(문제점) 진단

○ 현재 지하수 정책은 지하수조사연보 자료를 근거로 시행하여, 실시간 정책 수립 어려움

※ 2024년에 2023년 지하수 조사연보 발간(기준일 2022.12.31.기준)

□ 추진방향

○ 지하수 관련 자료를 전산화, 시각화, 실시간화하여 시군 지하수 행정에 도움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16. 11. :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18. 12. : 지하수 빅데이터/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 ’19. 01. :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운영지침 시·군 배포)

○ ’20. 12. : 공공지하수 QR코드 제작·설치 완료(’17~’20, 6,830개소)

○ ’19~ 현재까지 :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운영(2024.6.27.까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전년도 자료를 통해 파악	○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실시간 자료를 통해 파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해당 사항 인지	○ 시군 지하수 실시간 이용량 파악을 통해, 시군 지하수관리계획 등 수립 요구등을 통해 지하수 자료 현실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4년 소요예산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64백만원

□ 추진체계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도 : 시스템 관리
- 유지보수업체 : 시스템유지보수, 데이터업데이트

□ 추진일정

○ '24.4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의뢰

○ '24.5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발주

○ '24.6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계약

□ 홍보계획

○ 해당없음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3-7-1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스마트농업과	협조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길나영 주무관	연락처	041-635-4051

□ 추진배경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민간주도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CGHC)' 조성

□ 추진방향

○ 기후변화, 수급불안, 농촌인구 고령화·감소 등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농 유입 및 생산성·품질·소득 향상으로 농업농촌 구조·시스템 혁신 선도

○ 공익성과 사업성을 갖춘 대규모 스마트팜 집적단지 조성으로 민간자본 유치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 최고의 기술과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생산·유통·수출·정주·교육·커뮤니티 등 다양한 농업 콘텐츠로 수익 다각화 및 新문화 창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산시 부석면 서산 B지구 일원

○ **(사업규모)** 51.5ha(155천평) * 농업바이오단지(스마트팜) 38.8ha, 농업융복합단지 12.7ha

○ **(사업기간)** '24. 하반기 ~ '44.(20년간) * 준비기간 2년, 운영기간 18년

○ **(총사업비)** 약 3,300억(지역활성화펀드 480, 자본금 510, PF 2,310)

○ **(운영방식)** SPC(특수목적법인) 구성·개발운영, 지역활성화 펀드, 외자유치 등

○ **(주요내용)** 스마트팜단지, 교육센터, 체험관광,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업무협의체)** 예비 SPC설립('23.10.), 업무협의체 구성('24.1.) 및 협의회 개최(2회)

○ **(업무협약)**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 업무협약('23.11.)

○ **(현장방문)** 서산 B지구 등 현장방문 3회(기재부 예산실장 등)('24.1.~4.)

○ **(점검회의)** 기재부 추진상황 점검('23.12.) 및 펀드 공모 컨설팅 4회('24.2.~4.)

□ 현황(문제점) 진단

○ 투자구조, 수익확보, 민간투자자 유치 가능성 등 사업구조 검토 필요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처리 등 추진 필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전통적 농업방식에서의 일자리 제한 ○스마트팜 교육 및 기술력 발전 한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농촌경제 침체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고용창출 - 연간 450명의 일자리 양성 ○ 네덜란드 농업교육시스템을 통한 인재양성 ○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 연간 26만명의 관광객과 교육생 유입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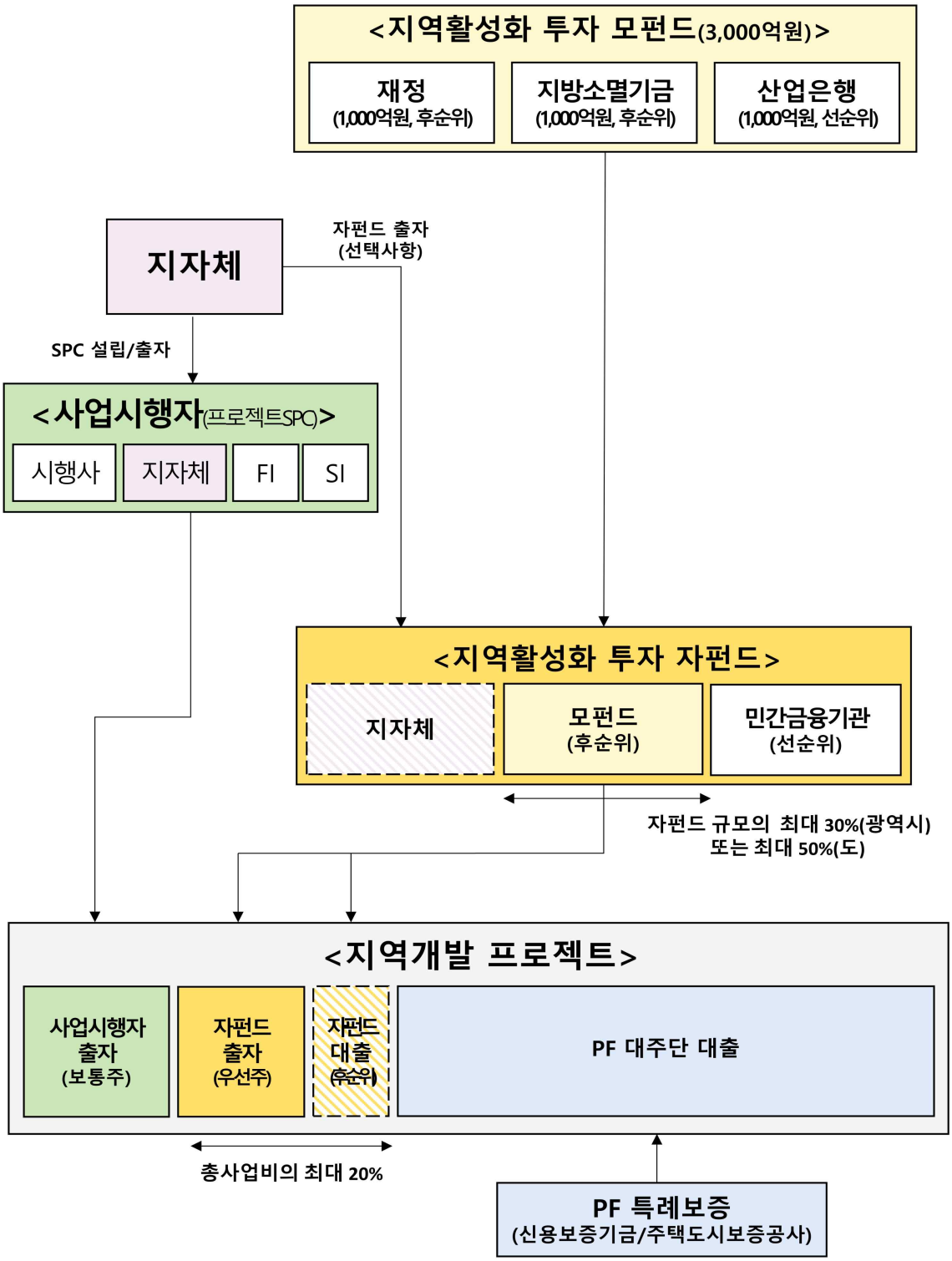
시행 전	시행 후
○전통적 농업방식에서의 일자리 제한 ○스마트팜 교육 및 기술력 발전 한계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농촌경제 침체	○ 스마트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글로벌 협업을 통한 내부 기술력 확보 ○ 청년 농부 육성, 청년 창업 기대 ○ 관광체험시설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례 제정('24.하반기)

□ 추진체계

○ 펀드구조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3,000억원)>
재정
(1,000억원, 후순위)
지방소멸기금
(1,000억원, 후순위)
산업은행
(1,000억원, 선순위)
지자체
자펀드 출자
(선택사항)
SPC 설립/출자
<사업시행자(프로젝트SPC)>
시행사
지자체
FI
SI
<지역활성화 투자 자펀드>
지자체
모펀드
(후순위)
민간금융기관
(선순위)
자펀드 규모의 최대 30%(광역시)
또는 최대 50%(도)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시행자
출자
(보통주)
자펀드
출자
(우선주)
자펀드
대출
(후순위)
PF 대주단 대출
총사업비의 최대 20%
PF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참여주체

참 여 기 관 명	세부 역할	비 고
13개 기관·기업		
충 청 남 도	지역활성화 펀드 출자에 필요한 절차이행 등 행.재정적 지원	
서 산 시	지분출자에 필요한 절차이행 및 인허가 승인 등	
충남개발공사	시설건립 계획, 설계 및 시공 자문 지원	
승 신 건 설	지분출자, SPC 구성 및 사업 참여사 관리, ATES 시공	
우 듬 지 팜	지분출자, 스마트팜 위탁운영 및 농산물 유통, 온실시공	
그 린 플 러 스	지분출자, 스마트팜 위탁운영 및 농산물 유통, 온실시공	
현 대 건 설	현물(토지) 또는 지분출자, 기반조성 및 인허가 신청 등 협력	
SHS(네덜란드)	스마트팜 해외 투자기업, 스마트팜 시공 및 위탁운용	
K t	현물 출자(5G 특화망 구축), ICT 인프라 공사	
kt엔지니어링	책임준공 참여	
K B 증 권	금융자문 및 지분출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H H R	자펀드 결성 및 자산운용, 지분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기 타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 추가 섭외 중	

□ 추진일정

○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업무협약(’24.4.22.)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계획 추진상황 기재부 컨설팅(계속)

○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구조 등 사업타당성 자문회의(계속)

○ 네덜란드 글로벌 협력 협약 추진(외자유치, PPP)(‘24.6.)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계획서 확정 및 공모 신청(‘24.6. ~ 7.)

○ 아시아 스마트팜 혁신센터 해외협력사업(PPP프로젝트) 공모(’24.9.)

○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4.9.)

○ SPC 설립 및 출자(’24.12.), 부분 준공 및 운영 개시(’26.상반기)

□ 홍보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승인 후 보도자료 배포(‘24.하반기)

3-7-2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스마트농업과	협조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박영수 주무관	연락처	041-635-4036

□ 추진배경

○ 기후변화, 고령화·도시화에 대응하는 원예산업의 미래 방향 제시

- 高에너지 원예산업의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 스트레스·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치유 방안으로 원예 가치 인식 확산

○ 국제 원예산업의 고속 성장('21~'26년 연평균 10.2%) 및 첨단 산업화

- AI·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화, 온라인 유통구조 개선 등 지속 성장

○ 한국형 원예치유 정립, 선진국과 방향성 공유 등 국제 아젠다 설정

- 세계 최초 원예·치유 산업박람회 개최로 국내외 시장 우위 확보

□ 현황(문제점) 진단

○ 2026세종정원도시박람회와 개최시기 중복

- 박람회 컨셉 차별화 및 상호 연계 등 상생협력방안 마련

□ 박람회 개요

○ (명　　칭)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2026 Taean International Horticultural-Healing EXPO)

○ (장　　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일원
(꽃지지구 45.7ha(137천평), 수목원 42.0ha(126천평))

○ (기　　간) 2026. 4. 25(토) ~ 5. 24(일), 30일간

○ (주　　최) 충청남도

○ (사 업 비) 221억원(국비 44.2 20%, 도비 88.4 40%, 수익사업 88.4 40%)

○ (참여규모) 182만명(내국인 172, 외국인 10), 40개국, 120개 기업 목표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민선8기 도지사 공약(관리번호 4-14-2), 「안면도 국제행사」 추진 구체화('22.12)

○ 박람회 타당성 연구용역('23.1~7) 및 기본계획 수립('23.8)

○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8)

○ 박람회 국제행사 개최신청서 제출('23.8/농식품부)

○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국제 공인 추진계획 발표('23.9/순천만)

○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출연 계획 수립('23.10)

○ 박람회 국제행사 개최신청서 제출('23.12/농식품부 → 기재부)

○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등기 완료('24.3)

○ 기재부 국제행사 검토('24.1~4),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24.4예정)

*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 벨기에 브뤼셀에 등록한 국제적 비영리협회(31개국 회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치유산업 활성화 한계 ○원예산업 브랜드 가치 한계 ○원예 재배시설 노후화	○농업·산림·해양치유 거점도시로 성장 ○원예산업 브랜드 가치 상승 ○신기술 적용한 재배시설 스마트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 ○고령화로 건강증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유기질 비료 과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농촌 고성장동력 모델 제시 통한 균형발전 도약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 저감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탄소배출 저감 및 감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재)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완료('23.8월)

□ '24년 소요예산

○ 사업비 : 4,150백만원(도비 2,075백만원, 시군비 2,075백만원)

※ 향후 투자계획 : ('25년) 9,940백만원, ('26년) 8,010백만원

□ 추진일정

2023년 박람회 기본구상 및 당위성 확보(태안 개최), 국제행사 승인·국제공인 준비

❶ **(기본계획)**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컨설팅앤컨설턴트), 기본계획 수립(8월)
❷ **(행사신청)** 정부 승인 신청(농식품부, 8월) 및 국제공인 신청준비(24년 1월)
❸ **(협업구축)** 정부,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중심 →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수시)
❹ **(업무지원)** 박람회 준비팀 구성, 조례제정, 행안부 조직신청 준비 등(연중)

2024년 중앙정부 국제행사 승인 및 AIPH 공인, 박람회 실행계획 구체화 등

❶ **(정부승인)** 기본계획, 세부전략 등 행사계획 타당성.조사, 심의 대응 등(농식품부, 기재부)
❷ **(국제공인)** AIPH 'C등급' 공인(신청후 최소 6개월소요, 6천㎡면적, 6개국이상, 라이센스15천유로)
❸ **(재정지원)** 정부승인 전제로, 국비예산(44억원, 농식품부→기재부).지방비 확보 등
❹ **(실행계획)** 세부계획, 실행계획, 작물 적응성 등 세부전략(지속성, 산업화, 학술 등)
❺ **(조직구성)** 재단설립, 조직위원회 출범(5월), 민간지원 협의체 구성.운영(7월)

2025년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 및 Pre박람회 개최 등 붐조성, 홍보강화 등

❶ **(실시설계)** 박람회 종합계획, 세부프로그램, 로드맵 확정(컨셉, 부제, 키워드 등 고려)
❷ **(Pre박람회)** 기존 안면도 원예+해양축제 등과 연계 개최(3일간, 전시, 치유, 스마트원예 등)
❸ **(홍보강화)** 조직위 중심, 온.오프 시스템 구축, 국내외 타박람회(엑스포) 벤치마킹

2026년 행사 매뉴얼 최종점검 및 행사추진

❶ **(행사추진)** 교통, 주차, 숙박, 안전대책, 의전기본계획, 행사장 시스템 정비 등
❷ **(사후관리)** 시설관리.활용방안 마련, 원예치유 클러스터구축, 글로벌 네트웍 등

□ 홍보계획

○ **(국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연계 통한 유치목표 40개국 집중 공략
○ **(국내)** 대규모 행사 홍보부스 참여, 주관 방송사 선정 및 기획·보도 등

3-7-3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스마트농업과	협조기관	
담당자	조호정 주무관	연락처	041-635-4043

□ 추진배경

○ 작물 재배역량 및 영농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소득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소규모 면적(0.3ha)에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 달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충남 농업인의 고령화 심각한 상태로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통해 농업농촌 인구소멸에 대응 필요

-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청년들의 진입 확대가 필수

○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팜 진입 장벽 완화 필요

-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토록 지원하여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추진방향

○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인정받은 청년농 선발 지원

○ 청년농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청년인력의 농업현장 유입 촉진

-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이수, 관련 대학을 졸업한 청년농 유입 추진

○ 지원 후 실패 확률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및 인증제 실시

- 농업기술원 및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및 인증 추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 업 량)** 청년농 스마트팜 50개소(15ha) 지원

○ **(지원대상)** 만18세 ~ 39세 청년농업인

- **(대상선정)** 스마트팜 경영능력을 인정 받은 청년농업인 선발
- **(선정과정)** 신청서 검토 → 자격검증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선정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0.3ha 신축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청년농 소득 감소 및 유입 감소	○ 스마트팜 지원으로 청년농 유입 증가 ○ 스마트팜 청년농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 창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원 정책 미추진으로 청년농 도내 유입 저조 ○ 자가 설치에 따른 청년농 부담 가중	○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으로 실력 있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 증가 ○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로 청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유입 가속화

□ '24년 소요예산

○ **(예산액)** 22,500백만원(도비 4,725, 시군비 11,025, 기타 6,750)

□ 추진체계

○ **(도)**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 **(시군)** 사업시행, 추진상황 점검, 정산,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 추진일정

○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계획 수립·시달 및 대상자 선발(4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청년농·시군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10월)

○ 사업 추진 완료 및 정산, 성과분석(12월), 지속적인 사후 관리

3-7-4 맞춤형 청년 유입 정책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신승철 주무관	연락처	041-635-2063

□ 추진배경

○ 타 시도 청년에게 우리도 특색있는 체험 기회·경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활력 창출에 기여 필요

□ 주요내용

○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타 시도 거주 청년 대상으로 2~4주간 주거·생활공간 및 교육·체험 등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 유도 및 관계인구 형성

□ 현황(문제점) 진단

○ 시·군의 예산편성 지연에 따른 단기 운영, 참여자 아쉬움 토로

○ 보조·위탁 구조에 따른 일회성 사업 추진, 홍보 및 사후관리 미흡

□ 개선방향

○ 지역탐색 프로그램 후속 연계 지원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 추진

- 사업 종료 후, 체류 희망자에 대한 임시 주거 연계 및 지역 청년과 교류 촉진
- 청년 셰어하우스, 지역살이·창업사례 공유 등 연계 가능 자원 DB 확보 및 제공

○ 우수 운영사례 확산 및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한 사업 개선·보완

- 우수 활동사례 중심 홍보영상·사례집(최종 성과물) 제작 및 홍보 추진
- 참여자 후기 기록, 다양한 활동 사례 수시 업로드(블로그, 홈페이지 등 활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정책 홍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체험 및 정착 청년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 낮음	○ 타 시도 청년의 지역체험 동기 부여 제공 ○ 체험을 통한 다양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체험·체류형 프로그램 특성상 단기 운영으로, 참여자들의 운영 기간 확대 건의

-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 차년도 연속지원으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4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137,700천원(도비 41,310 시군비 96,390) ※ 3개 시군

□ 추진체계

시·도 (사업 총괄)		시·군 (상위보조사업자)		시·군 또는 청년단체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ㅇ 예산배정 및 정산관리	⇨	ㅇ 자체 사업계획 수립 ㅇ 추진상황 보고(시군→도) ㅇ 정산 및 사후관리	⇨	ㅇ 프로그램 기획, 공간 구성 ㅇ 참여자 모집, 홍보 등 ㅇ 추진상황 보고(단체→시군)

□ 추진일정

사업계획 알림 (도→시군)	⇒	사업공모 (시군→도)	⇒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사업추진 (시군·청년단체)	⇒	중간점검 (도→시군)
1월 초		1~2월		2~3월		4~6월		7월

⇒	사업추진 (시군·청년단체)	⇒	만족도 조사 (사업참여자)	⇒	성과평가 (도→시군)	⇒	사업 정산 (시군→도)
	8~10월		11월		12월		익년도 1월

□ 홍보계획

○ 유튜브, 브이로그 등 SNS 활용하여 운영상황·참여 후기 기록·홍보

○ 온라인 플랫폼(도 청년플랫폼) 활용,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홍보 추진

3-7-5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진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청년정책관	협조기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	노현호 주무관	연락처	041-635-2064

□ 추진배경

○ 주택 가격,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지원 필요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협약 은행과 마련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

□ 여건 및 현황

○ **(정책여건)** '20년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원사업 수요 증가

- '20년 ~ '23년 792명, 이자 2,299백만원 지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 0.5% → '21) 1.0% → '22) 3.25% → '23.1.~) 3.5%

○ **(지원강화)** '23년부터 저소득층 추가 지원 및 소득기준 개편으로 취약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협약은행 추가 등 선택권 보완

□ 추진방향

○ 신혼부부·육아 가구에 대한 추가 이자지원과 대출기한 연장 혜택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유도

○ 소득기준 완화,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청년 지원 강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소득완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기준 완화

※ 1인 기준 연 29,922천원 → 40,122천원

○ **(결혼·육아)** 신혼부부(0.3%), 1자녀(0.3%)~3자녀(0.7%) 지원 신설

- 자녀가 있거나 출산하는 경우 대출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

○ **(취약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등 최대 0.5% 추가 지원

○ **(대출확대)** 대상주택(1.5억원→2억원) 및 대출 확대(최대 0.7억원→1.5억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개편 전	개편 후
■ 저소득 취약청년 중심의 지원체계로 비교적 제한적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1.5억원 이내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 2년 만기상환 - 저소득 청년 추가지원(최대 0.3%)	■ 신혼부부, 육아가구 지원 확대 및 저소득 취약청년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 2년 만기상환(육아, 출산 시 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 수혜) - 저소득 청년 추가지원(최대 0.5%) - 신혼부부(0.3%) 및 육아 추가지원(최대 0.7%)

○ 기대효과

개편 전	개편 후
■ 저소득 취약청년의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기여	■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육아가구 지원 신설로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 제공

□ '24년 소요예산

○ 이차보전금 1,280백만원(도 100%)

□ 추진체계

○ 道-NH농협은행-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HF) 협약으로 마련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추천, 대출이자 지원

- 도(대상자 선정 및 이자지원), 은행(협약상품 대출실행), HF(보증서 발급)

○ 수혜자는 지원받은 금리에 따른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며 차액은 은행의 청구에 따라 도에서 지급

□ 추진일정

○ (1분기) 사업 공고 및 홍보, 접수 추진

○ (2~4분기) 이전 분기 수혜자 자격유지 여부 등 검토,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익년도 개선방안 마련

□ 홍보계획

○ 은행 영업점, 공인중개사무소, 도 청년포털 등에 홍보자료 배포

- 청년 접근성 제고 및 홍보 효과 확대 노력

3-7-6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청년정책관	협조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조혜민 주무관	연락처	041-635-2062

□ 추진배경

○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요 증가

-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 수준별·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창업을 생활창업*, 기술창업** 두 분야로 나누어 창업자 역량에 맞는 창업 분야별·단계별 차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반창업

** 혁신기술 및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벤처창업 포함)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000백만원

○ **(사업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소재지(예정지)를 두고 있는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 60개 팀

○ **(사업내용)** 창업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수준별 창업지원금 차등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청년 (예비)창업 60개 팀 지원

- 생활창업 40팀(예비창업 30팀, 기창업 10팀), 기술창업 20팀

○ 기대효과 : 청년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운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 '24년 소요예산

○ 10억원(도비 100%)

- 생활창업: 6억원, 기술창업: 4억원

□ 추진체계

○ 각 분야의 특화기관(생활창업: 충남신용보증재단, 기술창업: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분야별 전문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계획수립	⇒	참여팀 모집·선정	⇒	교육·컨설팅 등 운영	⇒	최종성과 보고
1월		2~4월		4월~11월		12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도·위탁기관 SNS를 활용하여 포스터, 홍보영상 등 게시

3-7-7 청년의 주도적 도정 참여 활동 지원 및 소통채널 다양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청년정책관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이원미 주무관	연락처	041-635-3986

□ 추진배경

○ 청년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수요 확대 및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 필요

○ 비대면·디지털 가속화, 청년 수요에 맞춘 온라인 청년 서비스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네트워크 운영

- 제3기 충남 청년네트워크 신규 구성(100명) 및 사전 역량교육 추진
- 역량강화 워크숍, 100인의 제안,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등 청년 정책 제안 능력 향상 및 참여율 향상을 통한 효능감 제고 노력

○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충남청년포털 운영

- 청년정책 종합 제공, 맞춤형 정책 안내, 모바일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접근성 높은 청년정책 정보 종합 제공·안내 위한 충남청년센터 운영

- 정책 안내 기능 강화, 시군 청년센터와 협업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청년들의 생업 종사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활동의 참석률 저조

- 온라인 병행 운영·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참석률 제고 노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청년의 다양한 참여·소통 활동 만족도 향상

□ '24년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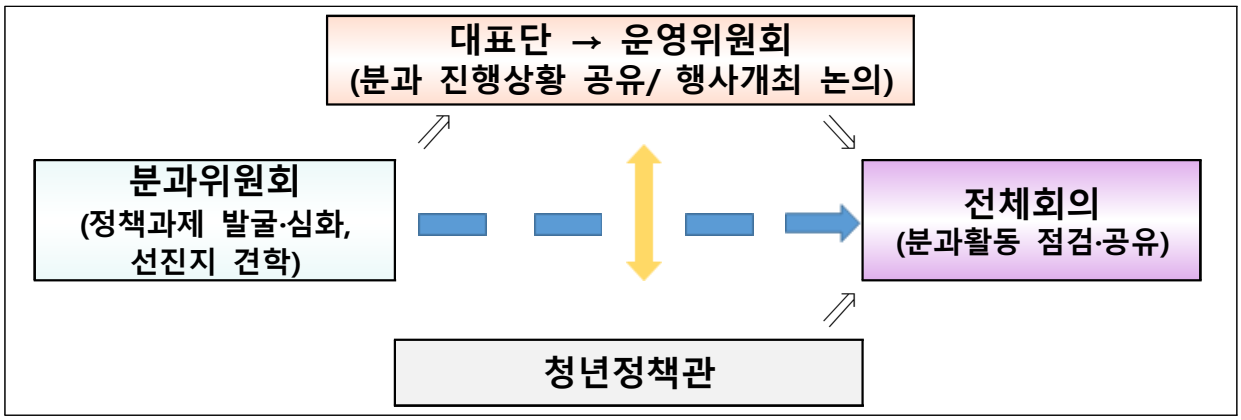
○ 충남 청년네트워크 운영 : 35백만원

○ 충남 청년포털 유지보수 : 40백만원

○ 충남 청년센터 운영 : 440백만원

□ 추진체계

○ 청년네트워크 운영 체계



□ 추진일정

○ 청년네트워크 운영

-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체회의 개최 : ’24. 1.
- 청년 네트워크 100인의 제안 운영 및 성과발표 : ’24. 3. ~ 6.
- 분과별 청년정책 연구 및 정책 제안서 작성 : ’24. 6. ~ 10.
- 연구성과 최종공유회 개최 : ’24. 11. ~ 12.

○ 온라인 청년 플랫폼 ‘충남청년포털’ 운영

- 온라인 플랫폼 기능 고도화 완료, 충남청년포털 재오픈 : ’24. 4.
- 오픈 이벤트 개최(300명 규모) : ’24. 4.
- 충남청년포털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24. 5. ~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 도-시군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상/하반기
-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공모·선정(국무조정실) : ’24. 3.
- 충청남도 청년정책 홍보책자 발간 등 본격 사업 수행 : 계속

□ 홍보계획

○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참여·소통 온라인 청년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및 프로그램 상시 홍보

3-7-8 청년마을기업 지정 활성화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이유정 주무관	연락처	041-635-3324

□ 추진배경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비즈니스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 현황(문제점) 진단

○ 도내 마을기업 현황 : 총 179개소(마을기업 160개소, 예비 마을기업 19개소)

※ 청년 마을기업 5개소 포함

○ 마을기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행정안전부 정책 전환에 따라 사업비 감액

○ 예비·신규 마을기업 미지정 계획으로 향후 청년마을기업 추가 선정 불가

□ 추진방향

○ 기존 청년마을기업 활성화 및 일반마을기업에 청년 참여 유도 추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정요건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시설비, 일반수용비 등의 사업비 지원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한도 지원

○ 선정주체 : 행정안전부-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 도-예비마을기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청년마을기업 5개소	- 청년마을기업 5개소 유지 및 활성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 보강을 통한 기존 마을기업의 생산성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24년 소요예산

○ 사업비 : 338백만원(균특 169 도 50.7 시군 118.3)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정 및 취소

○ (충청남도)
-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관리

○ (15개 시·군)
- 마을기업 지정신청 접수 및 현장실사, 적격 여부 검토, 약정체결 등
-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 (마을기업 지원기관) 現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추진일정

○ 마을기업
- 마을기업 공고('23. 11월) → 시·군 접수('23. 11월) → 현장조사('23. 12월) → 道 심사·추천('23. 12월) → 행안부 최종심사 및 선정('24. 2)

□ 홍보계획

○ 지역 청년의 마을기업 진입 유도
- 마을기업 행사 시 기존 마을기업 179개소에 지역 청년의 진입 유도 촉구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사회적경제 한마당, 마을기업 포럼)

○ 청년마을기업 5개소 판로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마을기업 지원기관(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판로지원시 청년마을기업 우대 및 우선 선정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3-8-2 외국인주민 우수인재 확보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일자리기업지원과	협조기관	법무부
담당자	정현모 주무관	연락처	041-635-3420

□ 추진배경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지역 산업, 일자리 특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지역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유출 억제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024. 1. ~ 12.

○ (사업 대상)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 (사업 지역)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488명 배정)

※ 공주(50)/보령(115)/논산(57)/금산(150)/부여(17)/서천(50)/청양(3)/예산(36)/태안(10)

○ (사업 내용) 학력 또는 소득 조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및 거주 조건으로 장기거주 비자를 발급

○ (추진 절차) (시군)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요건 확인, 추천서 道 제출 → (道)추천서 검증 및 법무부 제출 → (법무부)추천서 확인, 비자 전환

○ (주요 요건)

❶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GNI 70% 이상

❷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확약

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전년도 GNI 70% 이상 근로계약) 또는 창업(2억원 이상)

❹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추진상황

○ ‘23년 2개 시군(보령·예산) 시범사업 150명 중 148명* 전환(98%)

* 전환 대상자 150명 발굴 및 추천서 발급하였으나, 2명 비자전환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지침 시달(‘24. 2. 22, 법무부 → 지자체)

- ’24년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 488명 배정 / 제조업, 숙박업 등

○ 도-시군 담당 공무원 간담회 개최(’24. 3. 15.)

-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道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 비자전환 대상자 발굴 및 추천서 발급(예정) 45명 ※ ’24. 4월 기준

구분	계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배정	**488**	50	115	57	150	17	50	3	36	10
발급	**45**	9	20	7	4	2	-	3	-	-

※ 3개 지역(서천, 예산, 태안) 신청접수 미개시(4월말 예정)로 발급실적 없음

□ 향후계획

❍ 관계기관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운영 협력방안 논의 및 기업·대학 대상 제도 홍보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인구 감소 및 생산인력 부족 심화	○ 道 배정인원 488명 전원 비자전환으로 인구유입 및 생산인력 확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인구고령화 및 인구소멸 가속화 ○ 생산인력 부족으로 산업인력난 심화	○ 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 ○ 외국인력 유입으로 구인난 해소 지원

3-8-3 충남형 무상보육 전면 시행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복지보육정책과	협조기관	교육지원담당관
담당자	신은주 주무관	연락처	041-635-4251

□ 추진배경

○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추진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국가와 민족의 존폐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19년)0.92명→('20년)0.87명→('21년)0.81명→('22년)0.78명→('23년)0.72명
* 우리나라 출생아 수 : ('00년)64만명→('21년)26만명→('22년)25만명'22년)23만명(통계청)

○ 특히,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국가 완전 무상교육·보육 및 교육·보육 평등성 확보 필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유치원)** 사립유치원 3~5세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일부('19년)에서 5세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20년)

○ **(어린이집)** ①정부미지원어린이집 3~5세 표준보육비 차액 일부('19년) ②차액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확대(80%) 지원('22년) ③정부미지원 차액보육료 및 유아반교사인건비 전액지원,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23년~)

□ '24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668억원
- (차액보육료) 314억원 / (유아반교사 인건비) 156억원
- (부모부담 필요경비) 198억원

□ 기대효과

○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부모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

3-8-4 첫만남 이용권 시행

주관부처/부서	충청남도 / 복지보육정책과	협조기관	15개 시군
담당자	전현경 주무관	연락처	041-635-4240

□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출생아에게 첫째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

※ 출생아 수: '19년) 13,228명→ '20년) 11,950명→ '21년) 10,984명 → '22년) 10,221명*

* '22년 출생아 10,221명 중 첫째아 6,199명, 둘째아 이상 4,022명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수혜대상)** '24 1.1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

○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 용 처)**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폭넓게 인정

○ **(추진체계)** (읍면동) 신청・접수→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 (시군구) 대상자 관리

□ 추진 현황

○ 2023년 총12,286명(20,376백만원) 지원

□ '24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2,071백만원 (국/16,142, 도/1,779, 시군/4,150)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출생신고 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로 출산지원금 적기 지원

○ 출생아 대상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

3-8-5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주관부처/부서	환경부 / 기후환경정책과	협조기관	언더2연합, 탈석탄동맹, 환경부, 탄중위, 주한대사관
담당자	조남황 주무관	연락처	041-635-4421

□ 추진배경

○ 화력발전(전국 57기 중 29기), 철강, 석유화학단지 밀집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온실가스 최다 배출

- 기후위기 대응 관심을 촉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 道 탄소중립 실현 공표

□ 현황(문제점) 진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전략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 도출 및 선진사례, 정보공유 등 협력방안 모색

- 언더2연합 포럼, 전문가 학술회의, 탄소중립 정책·사례 발표 등 진행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컨퍼런스 자문단' 구성·운영(24명, '24.3.)

○ 국내·외 중앙부처, 지방정부, 언더2연합 등 컨퍼런스 초청('24.5. ~ 9.)

○ 컨퍼런스 및 포럼 주제, 프로그램 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24.6.)

○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시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 연계 추진('24.10.)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전략, 정책 정부 역제안, 법제화 등 탄소중립 선도 정책 발굴

○ 기대효과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지방정부 간 기후분야 연대·협력 강화
- 우리 도 탄소중립 비전 공유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

□ '24년 소요예산

○ 2024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 2억

□ 홍보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공중파 방송	◆ 지역 공중파(KBS, MBC, TJB) 사전 홍보     ◆ YTN, 연합뉴스 등 뉴스 사전 보도 및 당일 행사취재 보도 ◆ 행사 SPOT 제작·송출(15일 전부터) ◆ 행사 내용 자막 고지(1개월 전부터)
기 타 방 송	◆ 대전투데이, 뉴시스, 금강일보 등 인터넷 기사 보도 ◆ 블로그, 페이스북 기사 송출
인 물 홍 보	◆ 환경분야. 사회 저명인사. 연예인 등이 행사 홍보 또는 기획내용* 영상 또는 이미지로 참여 * 탄소중립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짧은 영상 또는 이미지 ◆ 카드뉴스, SNS 플랫폼 이용 홍보

3-8-6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주관부처/부서	환경부 / 기후환경정책과	협조기관	한국서부발전(주)
담당자	이수정 주무관	연락처	041-635-2713

□ 추진배경

○ 잦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 체감도 증가

○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인 한국서부발전과의 협력사업 추진('20~)

□ 추진현황

○ (2020~2023) 총 9개 시군 149개소 안심마을 조성, 683.6백만원 투입

- 671,055kW 에너지 사용량, 414.11ton 이산화탄소, 176백만원 비용 저감

* ('20) 천안 8·서천 10 ('21) 공주 5·계룡 15·청양 16 ('22) 부여 7·예산 34·태안 9 ('23) 공주 27·홍성 5·태안 13

□ 추진방향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 공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폭염, 한파 대응시설 설치·보수 추진을 통한 기후위기 안심 이용 공간 조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24.4. ~ 12.)

- (사업대상) 3개 시(아산, 논산, 당진) 주민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업내용) 3개 분야(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적응, 교육) 8개 항목

① 대응 분야(3): 고효율 조명(LED)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보일러 배관 청소

② 적응 분야(4): 쿨루프, 단열개선,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필터 청소

③ 교육 분야(1):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 체험 등

○ 안심공간 조성 마을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수립('24.5.~)

○ 발전 3사(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협의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24.7.~'25.)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민공용시설 ○ 노후화된 시설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농촌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도입을 통한 마을환경 보호

○ 기대효과

- 마을 공용시설 환경(시설·기능 등) 개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 '24년 소요예산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2억원(도비 0.3, 시군부담금 0.7, 서부발전기부금 1억원)

□ 추진체계

○ **(道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총괄 추진

- 관련기관 협약추진, 보조사업자 선정, 현장조사, 안심공간 조성 등

○ **(한국서부발전)** 사업비 재원부담(50%), 기타 사업수행 필요업무 지원

○ **(시군)** 사업비 재원부담(35%), 사업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

□ 추진일정

○ 사업대상 시군 선정('24.1.)

○ 보조사업자(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 공모 선정('24.3.)

○ 도-한국서부발전 업무협약 체결('24.3.)

○ 사업 세부내용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24.4.)

○ 시군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 마을 선정('24.4. ~ 5.)

○ 안심마을 조성 및 농촌폐기물 분리수거체계 도입 추진('24.5. ~ 12.)

○ 사업규모 확대 관련 발전3사 협의('24.7.)

○ 안심마을 조성결과 확인 현장점검('24.10. ~ 11.)

○ 사업평가 및 현판식 개최('24.12.)

3-8-7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주관부처/부서	환경부 / 기후환경정책과	협조기관	환경부, 충청남도교육청, 도내 15개 시군,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47개소, 지역환경교육센터 17개소
담당자	석초희 주무관	연락처	041-635-4428

□ 추진배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 요구**

*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 교육

○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22년 10월 전국 최초 선언함**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환경교육 확대 필요

⇨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등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37개 세부 추진과제" 정상 추진

→ (목표) 2024년, 환경교육 종합계획 과제 추진률 90%↑ 달성

○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사회환경교육+학교환경교육+공무원환경교육)

→ (목표) 2024년, 10만여 명 환경교육 실시

○ 환경교육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목표) 2024년, 환경교육을 통한 온실가스 12,000tCO_2 저감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전 시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24. 3월 ~ 12월)**

- 충남도 전 시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교육 기반 마련 및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활성화

○ **15개 시군 조례 정비 완료 촉구('24. 2월 ~ 12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 정비 촉구

○ **공무원 환경교육 확대 운영('24. 2월 ~ 12월)**

-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 유도를 위해 추진한 충청남도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추진

※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군 평가계획 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21 ~ '25)**

-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교육기관'을 2025년 개관 목표로 설립 중
- 연내 교육원 ①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 추진, ②운영 방안 마련

○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24. 3월 ~ 12월)**

- 지역환경교육협의회 확대 운영, 환경교육 협의체 운영 등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24. 3월 ~ 12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기후위기 등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인지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반마련 필요	○ 제3차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37개 세부추진과제* -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해 37개 과제에 대한 로드맵과 세부 추진계획 마련(2021년) * 환경교육도시 추진(9개 과제) *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협업(8개 과제) * 사회환경교육 지원(14개 과제) * 협력체계 구축(6개 과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 마련은 되었지만, 시군 담당자 부재 등 보다 폭넓은 협치체계 구축에 한계 ○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예산이 수반되며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추진에 한계	○ 도-시군 조례 정비와 계획수립을 통해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 제도 기반과 추진 동력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사업 추진 ○ 광역-기초 연계 기반 마련과 각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인력 개발과 육성 ○ 다양한 유형의 환경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등 안정적인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재정 확보 추진

□ '24년 소요예산

○ 총 3,046백만원(기 500, 도비 1,970, 시군비 576)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640백만원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
-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46백만원
-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10백만원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 2,200백만원

□ 홍보계획

○ 환경교육주간 운영(6월)

- 사회 전반에 환경보전 의지를 고양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환경의 날(6.5.)'을 포함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운영
- 환경교육주간(6월)에 맞춰 지역에 맞는 홍보행사 집중 실시

<프로그램(안)>
- ♦ 환경의 날 및 1회용품 제로 행사: 2024. 6. 5(수) 14:00 ~
- ♦ 환경교육 주간: 2024. 6. 5. ~ 6. 11.(4일간) / 현충일(6.6.) 제외
- ♦ 주요내용: 기념식, 부대행사(환경 홍보 및 체험부스 80여 개), 포럼 등

○ 충남 환경교육한마당 개최(6월)

- 도내 환경교육 관련 기관, 단체, 활동가 교류 및 프로그램 발표, 공유를 통한 환경교육 한마당의 장 마련

<프로그램(안)>
- ♦ 학교환경동아리 사례발표 대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연대회, 환경교육 워크숍 등

○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 제작·배포(상반기, 1만부)

- 환경교육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 환경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검색사이트 배너 및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주요 정책사업 적극 홍보(연중)

3-8-8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주관부처/부서	환경부 / 기후환경정책과	협조기관	도 부서 5, 직속기관 2
담당자	조남황 주무관	연락처	041-635-4421

□ 추진배경

○ 국제사회 메탄* 감축에 선제 대응하고, 메탄 에너지화와 연계한 메탄 감축을 체계적으로 이행 필요

*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온난화지수 28배, 지구온난화 원인 30% 차지

- 메탄 감축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선도적 메탄 활용 및 감축 추진을 위한 '국가 선도 로드맵' 마련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메탄배출)** '21년 기준, 3,552천tCO2eq(11.3%) 배출로 전국 3위*

* 1위 전남도 3,858(12.3%), 2위 경북도 3,709(11.8%), 충남도 3,552(11.3%)

○ **(분야별)** 농축산업 84.3%, 폐기물 11.8%, 에너지·산업 3.7% 순 메탄 배출

- 벼재배38%, 소-장내발효 26%, 가축분뇨 20%, 매립 9%, 하폐수 3% 순

□ 추진방향

○ 정책목표 2030년까지 "메탄 35% 감축" 달성

○ 메탄 감축과 활용의 투트랙 로드맵 마련 추진

- 농축산업, 폐기물, 에너지산업공정 분야별 메탄 발생 감축
- 축산분뇨에너지화, 분산형 수소 에너지활용 도입 등 메탄 포집 활용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분야별 메탄 발생 감축, '30년까지 1,243천톤CO_2eq

- **(농축산업 분야)** 농법개선, 저메탄 사료 보급, 가축분뇨 처리개선
- **(폐기물 분야)** 환경시설 발생 감축, 환경기초시설확대, 자원화 확대
- **(에너지·산업분야)** 탈루메탄관리, 온실가스 측정망 확대 모니터링

○ 메탄 포집 활용, 연간 메탄 4,752톤 활용

- **(축산분뇨 메탄)** 가축분뇨 통합처리, 바이오메탄의 수소전환 활용 등
- **(환경기초시설 메탄)** 환경기초시설 메탄 포집, 메탄의 연료전지화 등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21년 메탄 발생량 : 3,552천톤	○ 2030년까지 메탄 35% 감축 : 2,309천톤

□ 추진체계

○ 메탄감축 TF 운영 [(총괄)기후환경정책과 + (이행) 5개 실과 · 2개 직속기관]

- (기후환경정책과) 메탄 감축 로드맵 수립, 메탄감축 TF 운영
- (탄소중립경제과) 메탄 수소전환 활용 및 수소산업 연계방안 마련
- (축산과) 축산단지집적화, 저메탄사료 보급, 가축분뇨에너지화 확대 등
- (스마트농업과) 토양개량제 및 저탄소 농법 보급, 스마트팜 에너지 연계 검토
- (환경관리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량 저감 대책 추진
- (물관리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시설에너지화,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추진
- (농업기술원) 빠르미 등 저탄소 품종 보급 및 농업기술 확산 기술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온실가스측정망 확대, 산업공정 탈루성 메탄 측정

□ 추진일정

○ 메탄감축 로드맵 추진방향 마련('24.3.)

○ 메탄 감축 TF 구성·운영('24.4.~) ※ TF팀 국비확보 병행추진

- 메탄 감축 자문단 구성 및 과제 신규 발굴과 에너지 활용 검토

○ 메탄감축 로드맵 마련 TF 추진사항 보고회('24.5. 행정부지사 주관)

○ 메탄 감축·활용 분야별 감축계획 및 목표설정 등 로드맵 수립('24.상반기)

○ 메탄 감축 관련 국비 지원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건의('24.하반기)

3-8-9 탄소중립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탄소중립경제과	협조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부, 충남연구원 등
담당자	엄상호 주무관 장연진 주무관	연락처	041-635-3461 041-635-3463
소요예산	('24년)		

□ 추진배경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 부상

○ 충남,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최다 집적지역(전국 58기 중 29기)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우려

○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01백만톤CO_2eq 중 충남이 155백만톤(전국 1위, 22%)으로 경제·산업적 측면의 '**탄소중립 경제**' 선도적 추진 필요

- (에너지 부문) 전국 612백만톤CO_2eq 중 충남 146백만톤(23.9%, 1위)
- (산업 부문) 전국 52백만톤CO_2eq 중 충남 3백만톤(5.8%, 6위)

□ 현황(문제점) 진단

○ 도내 석탄화력 '36년까지 14기 단계적 폐지(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생산유발 감소 19.2조원, 부가가치유발감소 7.8조원, 취업유발감소 7,577명의 피해가 예상됨

○ 탄소중립 ·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화석연료 기반 산업 쇠퇴 전망

- 발전, 철강, 화학 등 상위 5개 부문,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92%

○ 글로벌 경제정세, 탄소국경세 ·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후위기대응 중심으로 재편 전망 →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 큰 타격 우려

○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

- 수소, 탄소순환, 바이오, 이차전지 등 신시장 선점 필요

□ 추진방향

○ 탄소중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에너지, 경제·산업,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탄소중립경제 실현

- 에너지시스템 전환 : 무탄소발전 도입 및 수소·재생에너지 확산
- 경제·산업구조 개편 : 저탄소 공정전환 및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탄소중립경제 추진전략(72개 과제) 이행**

-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주기적 추진전략 진행사항 점검 및 추진 미진과제에 대해 해당 실국별 이행 독려

○ **석탄발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탄소중립의 이행과 관련, 피해예상 지역 보호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석탄발전 폐지지역 **고용안정, 지역경제 침체 대응 등**을 위한 **기금 조성**
►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의제** 및 **규제자유구역 우선 지정**
►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폐지지역 **경제 진흥사업**의 실시
► **한국탄소중립진흥원**(연구 및 진흥사업)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 **조세감면**, **교부세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석탄발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따른 기업생태계 위축 우려 ○ 석탄화력폐지 지역 지원 대응 미흡 -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원 운용 (도, 시군, 발전사에서 재원 부담)	○ 기후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 ○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정의로운 전환 기금 1조원(전국, 국비) - 대체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지원대상)** 탄소중립경제 실천 기업·법인 및 소상공인 등

► 저탄소·무탄소공정으로 제조공정을 전환·도입한 기업
► RE100 및 CF100 참여기업
► 녹색전문기업 및 저탄소제품 생산 기업
► 녹색기술 도입 및 관련 R&D·기반구축 사업 수행 기업
►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농축산 법인·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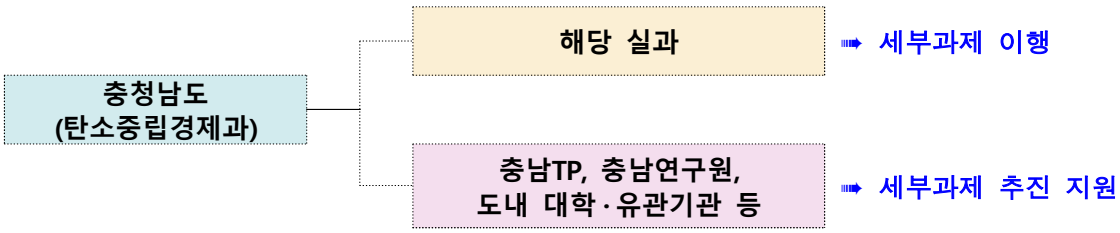
- **(지원내용)** 행정적·재정적 우대 지원 사항 규정

► 기업지원 사업(충남TP,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신보 등) 수혜기업 선정시 가점
► 타 조례에 따라 받는 지원사항과 중복 지원 가능
► 이차보전 지원 시 추가 금리인하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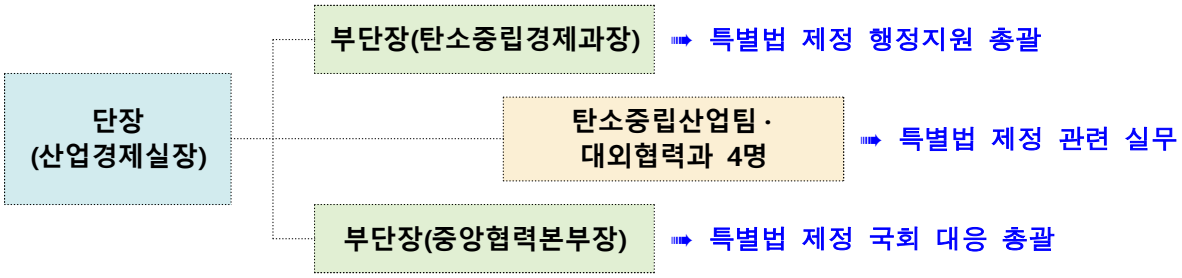
□ '24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이행**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추진일정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이행점검

- 1분기 추진사항 점검(3월) → 상반기 실적 실국보고회(6월) → 3분기 추진사항 점검(9월) → 하반기 실적 실국보고회(12월)

○ 석탄발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2대 국회 원구성(6월) → 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지역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국회, 산업부 등) 협의(6~7월) → 여론형성 및 공론화(7월~ / 국회·타시도 연대 협력) → 국회 법안상정 및 특별법 제정(~12월)

□ 홍보계획

○ 탄소중립경제 정책 기획보도 홍보(4~10월) ※ 탄소중립경제 관련 주요 이슈

○ 특별법 제정 공론화 및 후속조치를 위한 기획보도 홍보(5~10월)

○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고속열차 등을 활용,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정책 홍보(하반기)

3-8-10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주관기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연구부	협조기관	질병관리청
담당자	최지혜 주무관	연락처	041-635-6941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과 인수공통 감염병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국민 보건 및 사회·경제적인 심각한 문제 야기

○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유증상 감염자 위주의 감염병 감시에서 증상의 유무와는 별개의 감염 병원체 조기 검출 등의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방향

○ 하수처리 인구수 반영, 지점선정 및 감염병 병원체 모니터링

- 공공하수처리장 기준 **감시 지점 확대**(1곳'23 → 6곳'24), 감시율* 상향

> * **감시율(%)** = (하수 감시 인구수 /충남 전체 인구수) × 100
> ('23년)(53만명 / 212만명) × 100 = 25.0% ⇨ ('24년) (116.4만명 / 212만명) × 100 = 54.9%

○ 공중보건적 위해도 반영, 감염병 **감시 대상 병원체 확대**(10종'23 → 12종'24)

○ 감염병 감시 실험 기법의 고도화로 분석 효율 향상

- 대용량 검체 분석 농축 및 추출 실험장비 도입으로 처리 시간 단축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추진 근거) 국정과제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제3차('23~'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중 2-1.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 (추진 기간) 2023년 ~ 계속

○ (감시 지점) 도내 6개 공공하수처리장, ※ 천안(2), 아산(2), 서산(1), 공주(1)

○ (감시 병원체) 병원체 12종(호흡기 및 노로바이러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 (계획 건수) 3,456건 = 48주 × 6검체 × 12병원체

○ (추진 결과) ❶ 전국 하수기반 감염병 모니터링 대시보드 시스템 입력 및 ❷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측 시스템 활용

□ 기대효과

○ 감염병 유행 전, 하수에서 검출되는 특징을 활용하여 임상 감시 비용보다 적은 예산으로 감염병 확산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

○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역별 하수 내 감염병 감시 결과 가시화로 지역 주민들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 정보 제공

□ '24년 소요예산

○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 104백만원(국 50, 도 50)

□ 추진체계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추진 절차》

• 공공하수처리장 선정 • 감시 병원체 선정	➠	검체 수집 및 이송	➠	병원체 분석 KOWAS 시스템 입력	➠	결과 분석 및 감염병 예측
보건환경연구원		용역업체(지씨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

□ 추진일정

○ '24. 1. : 2024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계획 수립

○ '24. 1. ~ 12. : 하수 내 감염병 병원체(12종) 매주 검사

○ '24. 1. ~ 12. : 하수 내 감염병 병원체 검사 결과 통보

○ '24. 12. : 2024년 하수 내 감염병 감시결과 분석 및 보고

□ 홍보계획

○ 하수 내 감염병 감시 계획 보도자료 배포(3/5)

- 제 목 : '하수기반 감시 강화로, 감염병 유행 예측↑'
- 내 용 : 하수 내 감염병 감시율 전년 대비 119.6% 확대 운영 등

○ 하수 내 감염병 감시 결과 관련 보도자료 계획(12월)

3-8-11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 주민청원제도 운영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대기환경과	협조기관	환경부
담당자	최재호 주무관	연락처	041-635-4436
소요예산	('24년) 30백만		

□ 추진배경

○ 환경보건법 개정('21.7.6.)에 따라 청원기관을 환경부와 시도로 구분 추진

- 환경부 청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거 조항 : 환경보건법 제17조제1항제1호(환경부장관) 및 제2호(시도지사)

□ 추진현황

○ 법 개정 이후 도에 '건강영향조사 주민 청원 신청' 없음

□ 추진절차

○ 청원접수 → 검토보고 →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 건강영향조사 → 종합분석 및 통보 → 결과통보

※ (건강영향조사)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병원)에 위탁 추진

※ (결과 통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구제 관련 사항 안내

□ 주요내용

○ 건강영향조사 주민 청원서 접수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연관성 등 검토(분야별 전문가 자문 포함 등)

※ 청원인에게 청원서 검토결과(청원서류 반려,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추진 등) 통보

○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여부 결정

※ 청원인 및 피청원인에게 심의 결과(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 등) 통보

○ 건강영향 관련 연관성 여부 결정

※ 청원인과 피 청원인에게 결과(조사 보완 및 피해구제 관련 사항) 통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건강피해 청원 중앙정부에서 추진	○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 시군 관할 사업장에 대한 도 자체 청원 처리로 신속 처리 가능

□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환경보건법('25.1.1.) 시행으로 해당 조례 개정 추진('25. 상반기)

□ '24년 소요예산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561백만원) 예산 중 30백만원(국 15, 도 15) 활용

□ 기관별 역할

○ (충청남도) 청원서 검토(전문가 자문 등)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추진 및 해당 결과 통보(청원인, 피청원인)

○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 건강영향조사 주민 청원서 심의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할 경우 건강영향조사 수행

□ 향후일정

○ 주민 청원 접수 시 건강영향조사 추진 등을 통해 민원 해결

□ 홍보계획

○ 시군 회의등을 통해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 주민청원제도' 안내

3-8-12 "건축물 안전 및 건축행정 내실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주관기관/부서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협조기관	국토교통부
담당자	남영모 주무관	연락처	041-635-4663
소요예산	('24년) 3백만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허가도면 사전 검토 등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적 업무 수행·지원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안전저해요인 해소 및 예찰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기여**

※ 관련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충청남도 건축조례」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 '24년 배정예산(총 3백만원: 국비)

○ 안전계획 수립 자문비(2), 건축물 안전사업 홍보물 제작(1)

□ 주요내용

○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자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건축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기술지도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 공동주택 입주전 사전 품질 검사 지원
○ 각종 행사 및 위험개소 안전 관련 자문 지원
○ 외부 강사 초빙 도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등
○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인허가와 관련, 건축계획 및 구조분야 검토 등 기술지도

□ ’24년 세부 추진계획

○ 공사장 안전점검계획 및 점검방법

- 안전점검반 편성, 취약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 안전점검 종합계획에 따른 분기별 안전점검으로 140개소 목표 달성 추진
- 공사장 점검 시 현장 안전교육 실시
  (건축공사장 안전·재난 예방 교육 및 기술지도 및 안전점검 지적사례 안내 등)

○ 건축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의 전문지식에 기반한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설계 내실화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성 강화

- 지원대상(연중 지원) → 시,군 요청 허가대상 신축 건축물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건축공사장 140개소 시기별 안전점검 및 건축인·허가 시 허가도면 사전 검토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공공건축안전팀(총 4명: 팀장1, 팀원1, 필수인력2) 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4년 예산이 대폭 감축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24년도 건축인허가 현황 및 공사장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개소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24. 3월)

○ 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완료 (’23. 4월 ~ ‘24. 2월)

* ‘1차 공사중단 장기방치물 용역완료(’19년) : 3년 마다 추진토록 법제화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실시 (’24. 5~ 6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교육 실시 (’24. 4월, 10월)

○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발굴 등 (’24. 12월)

붙임 '24 월별 주요 계획

월별	주요 계획	세부 내용
2~3월	◦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 해빙기 대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 道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중·대형 건축공사장
4월	◦ 해체공사 및 현장관리 교육	- 15개 시·군 업무담당자 등 실무교육
5~6월	◦ 태풍,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민간 전문가 참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중·대형 건축공사장 - 공동주택, 공공 건축
7월	◦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 道 내 허가대상 해체공사 현장 조사 등 안전점검
8월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점검	- 道 내 방치건축물 15개소 중 표본 안전점검
9월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道 내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공사장 개소 중 표본 안전점검 -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2개소)
10월	◦ 해체공사 및 현장관리 교육	- 15개 시·군 업무담당자 등 실무교육
11월	◦ 동절기 대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 민간 전문가 참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중·대형 건축공사장
12월	◦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도출 ◦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프로그램 개발	
연중	◦ 사회쟁점 안전점검(축제장, 중·대형 사고현장, 민간전문가 합동 긴급안전점검) ◦ 건축인허가 전문분야(건축, 구조) 기술지원	

Ⅴ. 충청남도 정부혁신 확산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全 직원대상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

- 직원 월례 모임 시 정부혁신·적극행정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강
- 신규, 세대별 맞춤형 교육, 전분야 협업을 통한 혁신문화 조성

○ **업무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운영**

-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발굴
- 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활동비 지원 등

○ **제1회 충남 혁신아이디어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른 도민체감이 높은 혁신사례 발굴
-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괄목한 성과를 보인 과제 포상 및 전파

○ **협업마인드 일상화를 위한 협업포인트 제도 지속 추진**

- 협업 장려를 위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협업 포인트 활용 우수자 반기별 4명 선정(총 800천원 지급)

□ 성과 홍보 방안

○ **(조직내) 인센티브제공, 내부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혁신 분위기 고취**

- 청내방송, 포털게시판, 이벤트 및 캠페인을 통한 홍보 및 참여 유도
- 지식·협업동아리 운영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행정역량 강화
- 충남 혁신아이디어,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활용 인센티브* 제공

  * 특전으로 도지사 표창, 포상금, 인사 가점 부여

○ **(조직외) 도민소통채널 강화로 도정홍보 및 온라인 도민참여 활성화**

-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 활용 홍보 및 혁신아이디어 발굴

  * 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도보, 웹포스터 배포, 기타 SNS등

- 제8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도-시군 간 협력네트워크 활용 정책 및 성과 홍보